

Ⅲ. 미군정기의 사회 · 경제 · 문화

1. 미군정기의 사회
2. 미군정기의 경제
3. 미군정기의 문화

Ⅲ. 미군정기의 사회 · 경제 · 문화

1. 미군정기의 사회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친 미군정 기간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갑작스럽게 단절된 가운데 격렬한 좌우 갈등이 전개되면서 전후의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던 과정이었다. 즉 미군정기의 사회는 기존의 체제는 갑작스럽게 단절되었지만 새로운 체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격렬한 갈등, 극심한 혼란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초래는 다음 두 차원의 영향 때문이라 하겠다.

그 하나의 차원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사회경제적인 혼란상이다. 일제는 식민통치 말기에 중일전쟁 및 대동아전쟁을 위한 전시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으로 이러한 전시체제는 한꺼번에 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단절적 사태에 의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혼란상은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혼란이다. 당시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주-조선-일본으로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이 붕괴했을 뿐만 아니라, 미·소군의 남북 분할 점령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적 연결도 단절된 가운데, 일본인 기술자마저 철수하자 일제의 전시경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혼란 또한 극심했는데, 귀환동포문제 및 식량부족사태 등 해방과 더불어 새롭게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들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해방과 더불어 귀환동포들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왔으나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당시의 혼란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배급제 중심의 일제의 전시식량정책

대신 실시된 미군정의 식량정책의 실패는 식량부족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던 것이다.

한편 미군정기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차원은 냉전적·정치적 갈등이었다. 해방은 일제 때부터 심화되어 왔던,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에 의해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사회내부의 계급적·민족적 갈등을 일시에 분출하게끔 만들었다. 나아가, 이같이 분출된 계급적·민족적 갈등은 정부수립을 둘러싼 주도권과 그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체제 선택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미·소 및 좌우의 냉전적·정치적 갈등과 결합되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민중의 제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그들과 결합할 수 있었던 좌파세력은 민중을 조직화하여 이를 자신의 지지·동원세력으로 활용코자 했다. 반면 미군정과 우파세력은 좌파세력의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하고 분쇄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부수립과 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렇듯 민중과 결합된 좌파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이에 맞선 우파세력 및 미군정을 다른 한 축으로 했던 당시의 냉전적·정치적 갈등은 미군정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1) 경제적 혼란

1930년대 이후 일제는 한반도의 식민지공업화에 본격 착수하였다. 그것은 일본자본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더불어, 조선에 이어 만주로까지 확대되었던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이 구축되면서 일본과 만주를 이어 주었던 조선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필요성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력 개발을 위시한 각종의 공업화가 조선에서, 특히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같은 식민지공업화 정책은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중국 침략 이후

1) 1931년 조선총독 우가키(宇垣一成)는 조선공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일본을 精工業지대로, 만주를 농업지대로 하되 조선은 양축의 연결고리인 組工業지대로 설정하여 엔블록 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강만길,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162~179쪽).

전쟁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공업화 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²⁾ 그러나 이 같은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게 되었을 때 일제식민지 경제권의 생산·유통체계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경제는 일대 혼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남한에서 야기되었던 일대 혼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선 그것이 공장 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표 1〉 해방 전후 공장수와 종업원수(종업원 5인 이상 기준)

시 기	공장수(개)	종업원수(명)	비고
1939	6,952	270,439	전국
1943	14,856	549,751	전국
1944. 6	9,323	300,520	남한
1946. 11	5,249	122,159	남한
1948. 1	4,385	157,047	남한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39~40쪽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함.

일제는 1930년대 말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군수공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전 해인 1944년 6월 현재 남한만 하더라도 5인 이상의 공장수는 9,323개소, 그 종업원수는 30만 520명에 달했다.³⁾ 그러나 해방 이후 1년이 더 지난 1946년 말 남한의 공장수는 5,249개소, 그 종업원수는 12만 2,15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공장수의 경우 43.7%, 종업원수의 경우 59.4%나 축소된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현

2) 일제의 식민지공업화 및 이에 뒤이은 군수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강만길, 위의 책, 162~179쪽 참조.

3) 이는 5인 이상의 공장과 그 종업원수에 한정된 것이다. 종업원 5인 이하의 공장과 그 종업원까지 포함할 경우 일제하의 고용 노동자수(광업 및 운수업 노동자수 제외)는 1932년 384,951명(100%), 1936년 594,739명(154%), 1940년 702,868명(183%), 1942년 1,171,094명(304%), 1943년 1,321,713명(342%) 등이었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59쪽).

한편 1942년의 시점에서 광산 및 토목건축 그리고 교통운수업의 노동자와 자유노동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수는 약 175만 명에 달했다(강만길, 위의 책, 175쪽).

상은 해방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일본으로부터의 설비보수품의 공급 단절, 원료의 부족,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에 따른 한국인 기술자의 부족, 심각한 전력난 등의 원인들에 의해 다수의 공장들이 부득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기⁴⁾ 때문이다.

해방과 더불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이와 같은 공장 조업의 단축이 곧 생산위축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표 2>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939년을 기준으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의 생산 위축의 정도를 살펴본다면 식료품 공업의 82.9%를 선두로 거의 대부분의 공업에서 60% 이상에 달했다(제재 및 목제품 공업은 제외)⁵⁾.

<표 2> 해방 전후 주요 공업의 생산 위축 상황 (단위 : 1,000원)

구 분	1939년 생산액 ¹	1946년 생산액 ²	감소액	감소율(%)
방직공업	170,985	67,855	103,130	60.3
기계 기구 공업	38,045	15,154	23,251	60.5
화학공업	91,171	21,714	69,457	76.2
제재 및 목제품 공업	13,746	11,012	2,737	19.9
식료품공업	213,628	36,457	177,171	82.9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43쪽.

1. 1939년 생산액은 당시 남한 9개 道의 생산액임.
2. 1946년 생산액은 1939년 평균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수정금액임.

한편 해방 직후에 공장의 조업단축과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그 규모는 1946년 말에 105만 명, 1947년 말에는 79만여 명에 달했다(<표 3> 참조). 그러나 당시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직업 미상의 인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실업자의 수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⁶⁾

4)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40쪽.

5) 이와 같은 생산 위축은 극심한 물자 부족을 야기했는데, 이를테면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의 18개월 동안 제공된 일부 공산품 공급량은 면포가 1인당 1마(碼), 양말이 8인당 1켤레, 고무신이 8인당 1켤레, 운동화가 25인당 1켤레, 비누가 3인당 1개에 불과했다(통계청, 위의 책, 43~44쪽).

6) 통계청, 위의 책, 18쪽.

〈표 3〉 해방 후 15세 이상 인구 및 실업자수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자	여 자	비 고
실업자수	1,050,937	—	—	1946년 11월 30일
15세 이상 인구	10,800,888	5,493,358	5,307,530	1947년 말
실업자수	798,233(7.4%)	305,787(5.6%)	492,446(9.3%)	
직업 미상	892,250(8.3%)	439,285(8.0%)	452,965(8.5%)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19쪽을 이용하여 작성.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공장 조업의 거의 절반이 중단되었던 동시에 이에 따른 생산위축 역시 戰前의 거의 60%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급속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물자부족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일제 패망 이후 조선은행권의 남발⁷⁾로 인한 통화팽창 또한 인플레이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1945년 8월 15일 현재 조선은행권의 발행고는 49억 7천 5백만 원이었으나 그것은 같은 해 연말에 거의 두 배인 87억 6천 3백만 원으로 증대했고, 뒤이은 1946년과 1947년에도 매년마다 거의 두 배의 증가를 기록했던 것이다. 극심한 물자 부족에 겹쳐진 이 같은 통화팽창이 급속한 인플레이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다음 〈표 4〉는 물자 부족과 겹쳐진 통화팽창의 정도, 이로 인해 야기된 소매물가의 급등 추이, 그리고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당시의 임금 상승 추이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36년을 기준으로 1945년 후반의 소매물가 상승률은 57배, 1946년에는 무려 223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노임 상승률은 각각 27배와 71배에 그쳤을 뿐이다.

요컨대, 일제 패망과 더불어 남한의 경제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에 예속된 재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자금과 물자 그리고 기술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붕괴에 가까운 일대 혼란을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⁸⁾ 물론 일제 식민통치의 뒤를 이었던 미군정은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7) 1945년 패망을 전후하여 일제는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일본군대·관리의 임금, 퇴직금, 위로금, 귀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조선은행권을 대량으로 남발했으며, 이후 미군정기에서도 미군정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조선은행권은 대거 남발되었다(강만길, 앞의 책, 224~227쪽).

8) 강만길, 위의 책, 191쪽.

〈표 4〉 화폐 발행고·물가·임금 상승률 추이

구 분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비고
			1~6월	8~12월				
화폐발행고 (전년말증감율)	1,466,777 (61.4)	3,135,692 (179.5)	8,763,341 (179.5)		17,710,623 (102.2)	33,388,164 (88.5)	43,444,111 (30.1)	단위 : 천원(%)
소매물가지수		225.95	247.19	5,746	22,300	40,900	62,900	1936년 : 100
노임지수			263.82	2,725	7,119	14,843	20,334	1936년 : 100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21쪽과 61쪽을 이용하여 작성.

그러나 미군정의 대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적산기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 경제정책의 부재, 그리고 재정정책 등의 실패로 미군정은 당시의 혼란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조업 단축과 생산 위축, 이로 인한 대량의 실업 발생, 그리고 물자 부족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 등 남한에서 야기된 경제적 혼란의 결과로 발생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 사회적 혼란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해방 직후 미군정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요소는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이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에는 귀환동포문제와 식량문제의 두 문제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자는 해방과 더불어 만주와 일본 등 해외로부터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대거 몰려들었던 귀환동포들의 문제였으며, 후자는 일제 전시경제가 붕괴된 속에서 야기된 식량부족사태와 이에 대한 미군정의 적절치 못한 대책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다.

우선 귀환동포문제와 관련하여 해방후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남한 인구 증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약 1년 전부터 해방 후 약 4년에 걸친 총 5년 동안 남한인구는 약 430만 명 이상⁹⁾ 증가했다. 그것은 1949년 당시 남한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였다는

9) 1944년 시점에서 남북한에 거주했던 약 70여만 명의 일본인이 해방 직후 철수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보다는 해방과 더불어 국내에 쏟아져 들어왔던 해외동포 입국자 및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특히 1945년 8월의 해방 직후로부터 1946년 8월에 이르기까지의 약 1년 동안에 남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에 귀환동포의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5〉

해방 전후의 남한인구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	남자	여자	증가
1944년 5월 1일	15,879,110 ¹	7,484,242	8,031,868	
1945년 말	46,873,277			994,167 ²
1946년 8월 25일	19,369,270			2,495,993
1947년 말	19,886,234			516,964
1948년 말	20,027,393			141,159
1949년 5월 1일	20,188,641	10,200,877	9,987,764	161,248
5년간 증가인구	4,309,531	2,716,635	1,955,896	
5년간 증가율	27.1	36.3	24.4	
연평균증가율	4.92	6.39	4.46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1~4쪽을 이용하여 작성.

1. 1944년 5월 1일 현재 남북한 전체 총인구는 25,917,881명(일본인 712,583명과 기타 외국인 71,946명 포함).
2. 이 시점에서 일본인 대부분이 철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실제 증가는 1백 수십만 명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해방 후 이루어졌던 이상과 같은 인구 증가 중에서 귀환동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표 6〉에 따르면, 해방후 3년 동안 해외동포 입국자는 무려 122만 명을 넘었고 월남자 역시 97만 명에 이르러,¹⁰⁾ 모두 220만 명 정도에 달했다.¹¹⁾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실제 인구 증가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 10) 해외동포에 북한경유 중국·만주 입국자를 포함한다면 해외동포 입국자는 약 154만 명이며 순수 북한 월남자는 약 64만 명이다.
- 11) 그러나 다른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1945.10~1947.12)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해방 후 3년간(1945. 8. 15~1948. 12. 31) 유입된 귀환동포 규모
(단위 : 명)

해외동포 입국자	일본 입국자	중국 등 기타 입국자	계
	1,117,819	102,208	1,220,627
월남자	북한 월남자	북한경유 중국·만주월남자	계
	648,784	320,231	969,015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1~4 및 9~11쪽을 이용하여 작성.

해방과 더불어 국내로 대거 돌아왔던 이들이 당시 사회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 커밍스는 해방 직후 귀환동포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했던 지역과 그 지역의 급진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귀환동포의 유입이 그 지역의 인민위원회 활동이나 좌파활동과 관련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귀환동포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북한체제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토지개혁으로 인해 남한으로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위의 통계로 미루어 볼 때, 그 성향상 우파지향적인 이들의 규모는 몇 십만 명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귀환동포들은 급진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그들은 지방인민위원회 활동이나 좌파 활동에 적절한 토양을 제공했던 것이다.¹²⁾

그렇다면 해방과 더불어 고향과 조국으로 대거 물려들었던 그들은 누구이

귀환전 거주지	귀환자의 수	남한 전체 인구 ¹⁾ 중 귀환자의 비율
북한	859,930 ²⁾	5.4%
만주	304,391	1.9%
일본	1,110,972	7.0%
중국	71,611	0.5%
기타	33,917	0.2%
계	2,380,820	15.1%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년)Ⅲ-19쪽.

1. 1945년 5월 현재 남한 전체 인구 1,580만 명 기준.

2. 표시된 숫자 중 388,694명은 북으로부터의 피난민이고 나머지 60%는 남한이 고향임.

12) 해방 후 인구유입과 그 지역의 급진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커밍스의 분석에 대해서는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355~359쪽 참조.

며, 왜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는가.

해방 후 대거 유입된 귀환동포들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등지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첫 해외 이주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일제하의 토지집중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했던 빈농들은 자신의 고향을 등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후 일제의 전시공업화가 추진되었던 1930년대 이후, 그리고 전시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던 1940년대의 일제 말에 들어와 다시 대대적인 주민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북한지역에서 추진되었던 군수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징병·징발 등 일제의 전시정책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¹³⁾ 이렇게 일제식민통치 기간에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떠났던 그들이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고향과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국에 안전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졌으며, 물질과 지위의 상실을 겪었고, 종종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접촉했고, 살던 시골마을을 넘어선 더 큰 세계를 보았던”¹⁴⁾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공업에 투입되었다가 한국의 농촌으로 다시 뺄어진”¹⁵⁾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과 조국에 다시 돌아왔던 그들에게 고향과 조국이 그 어떤 대책도 제공하지 못했을 때, 불만에 찬 그들은 급진적 운동에 휩쓸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귀환동포문제와 더불어 미군정기 사회의 혼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문제는 식량문제였다.

1930년대의 일제시기 쌀·보리·밀·콩 등 조선의 순식량용 곡물생산량(1930년~1937년의 8년 평균)은 2,971만 8천 석으로, 이는 당시 인구 2,430여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22석에 해당하는 규모였다.¹⁶⁾ 물론 당시의

13)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58~65·105쪽.

14)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2001), 257쪽.

15)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104쪽.

16) 김종범, 《조선 식량문제와 그 대책》(돌베개, 1984, 복간본. 같은 제목의 원본은 1946년에 발간됨), 19~20쪽.

쌀 생산량 약 2천만 석 가운데 약 800~1,000만 석과 콩 생산량 중 150만 석 정도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만주 조(粟)가 약 100만 석 그리고 안남미가 약 100만 석 정도 유입되었다는¹⁷⁾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분배 가능량 1.22석의 절반 이상은 잡곡으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 같은 일제 치하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적인 식량 공출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식량사정이 열악했음에도 그것이 대량 기근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식량의 유통과 분배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전시 통제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부족한 양이었지만 일제의 전시 통제정책은 최소한의 배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남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했는가. 다음의 <표 7>은 해방 후 남한의 식량생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규모 역시 일제시기에 비해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으로의 쌀 유출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이 북한지역에 치우쳤던 잡곡의 부족 그리고 급속히 증대했던 남한인구 등의 요인에 의해 남한의 식량사정은 압박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7>

해방 후 남한의 식량 생산량

(단위 : 1,000석)

구분	쌀	잡곡 ¹	계	인구수 ² (명)	1인당 생산량(쌀+잡곡) (석)
1945	12,836	6,931	19,767	16,873,277	1.17(0.76+0.41)
1946	12,050	7,421	19,471	19,369,270	1.01(0.62+0.38)
1947	13,850	6,503	20,353	19,886,234	1.02(0.69+0.33)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27~28쪽을 이용하여 작성.

1. 잡곡은 보리·밀·조·옥수수·콩 포함한 것임.
2. 인구수는 <표 5>를 참조할 것.

해방 후 미군정기 동안 식량문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던 당시의 현실 때문

17) 김종범, 위의 책, 21·33쪽 및 통계청, 앞의 책, 28쪽 참조.

이었다. 그러나 식량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보다 큰 원인은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에 있었다. 부족한 식량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통제정책은 최소한 대량의 기근사태를 면할 수 있게 해주었던 반면, 아무런 준비없이 임시처방적으로 실시했던 미군정의 식량정책은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군정은 군정 초기 미곡 등 식량에 대한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의 전면 해제는 식량수급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식량에 대한 자유시장정책의 실시에 따라 미국에 대한 매점매석이 횡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쌀값이 폭등하여 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즉 심각한 물자부족의 현실에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되었던 자유시장정책은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특정인의 매점매석에 의한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한 미군정이 1946년 2월 <미곡수집령>을 발동, 미곡의 강제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 강제수집정책은 같은 해 여름 하곡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강제 할당되고 그 수집이 강요되었던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당시 농민들에게 일제 말의 식량 공출을 연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던 농민들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식량수집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식량배급정책은 도시주민들의 불만을 드높였다. 1946년에 발생했던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 한 배경에는 농촌과 도시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바로 이 같은 식량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¹⁸⁾

18) 미군정기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강만길, 앞의 책, 214~217쪽 및 정해구, 《10월 인민항쟁 연구》(열음사, 1988), 89~99쪽 참조.

2) 미군정기의 사회갈등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혼란상은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통치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와 질서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상황에 의해 야기된 혼란이었다. 그러나 미군정기 사회의 혼란은 이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미군정기 사회가 일제 식민통치가 남겨놓았던 계급적·민족적 갈등에 의한 또 다른 혼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정기의 사회갈등은 당시의 정치적 갈등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군정기 사회갈등이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파세력과 미군정-우파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차원의 혼란과 갈등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전개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갈등만을 분리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인 혼란으로 야기되었던 아래로부터의 영향과 정치적 갈등의 위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주로 노동문제와 농민문제를 중심으로 미군정기 사회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문제

1946년 11월 5~6일, 경성(서울)의 중앙극장에 17개의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조를 대표하는 515명의 대의원이 모여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이하 전평)를 결성하였다. 결성대회 〈선언〉은 “8·15 이후 전국 각 산업 중요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운동은 자연발생적·지역적·수공업적 혼합형의 조직체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목적의식적 지도에 의해 전국적으로 정연한 산업별적 조직으로 체계화·강력화시켜 … 이 여러 개의 산업별 단일노동조합이 총집결함”으로써 전평이 결성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 대회는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 노동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등 20개조에 달하는 ‘일반 행동강령’을 제시했다.¹⁹⁾ 이로써 해방 직후 아래로는 노동대

19)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해방조선》I (과학과 사상, 1988, 이 책 I·II는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 일년사》, 문우인서관, 1946의 복간본임), 194~196쪽.

중의 분출하는 요구를 대변했던 한편 위로는 좌파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중 조직으로서 미군정 정책과 대치해 나갔던 전평 주도의 노동운동은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렸다.

이 같은 전평의 등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평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이다. 결성 당시 전평은 그 산하에 215개의 지부(광산 제외)와 1,194개의 분회에 21만 7,073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3개월 뒤인 1946년 2월 15일 시점에서는 235개의 지부 및 1,676개의 분회에 57만 4,479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²⁰⁾ 해방 후 6개월 만에, 그리고 결성 후 3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확대된 전평의 성장은 그 유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이 규모는 남북한을 합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남한만의 조합원수 역시 31만 5,100명에 이르고 있었다²¹⁾는 점은 남한 노동운동의 성장이 매우 빠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북한의 조직이 독립해 나감으로써²²⁾ 전평은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5월 10일의 시점에서 남한 전평의 조합원수는 46만 7천 명(합동노조 포함시 60만 명)까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해방 직후 남한에서 노동운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일제의 패망으로 야기되었던 사회경제적인 혼란에 기인한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공장 폐쇄, 조업 단축, 실업 및 전재민의 증가, 물가 앙등과 이로 인한 실질 임금의 감소 등 제반 혼란은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운동이 분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공했던 것이다. 특히 공장 및 직장 폐쇄, 조업 단축 등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 해고반대투쟁 그리고 퇴직금 요구 투쟁 등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노동운동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일제

20)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위의 책, 193쪽 ; 《진국노동자신문》, 1945년 11월 16일.

21) 안태정,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91·93쪽.

22) 1945년 11월 30일에 전평 북조선총국이 결성되었고, 이는 1946년 5월 24일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발전됨으로써 북한의 조직은 남한의 전평으로부터 독립해 나갔다.

23) HQ. HUSAFIK, G-2 Weekly Summary, No. 43, 1946년 7월 10일.

하 노동운동의 영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제하 노동운동의 전통 속에서 지하조직을 통하여 해방 당시까지 이어졌던 노동운동의 영향과 해방과 더불어 이루어졌던 다수 노동운동가들의 출옥은 해방 직후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했던 노동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수의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 해방 후 파죽지세로 발전하던 노동조합운동은 이 지하조직과 해방 후 출옥한 직업적 운동가가 기본부대가 되어 공장·기업소·광산 등 각 사업장으로 총진격하여 각지에 산재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분산적·종파적·기형적·직업별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산업원칙에 입각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미조직지대의 조직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민주주의민족전선 편, 《해방 조선》 I, 과학사상, 1988, 192쪽).

그러나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결집체로서 전평의 결성을 가져왔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의 외곽 대중조직으로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조직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좌파세력, 특히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 재건과 계열의 의도적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선공산당 결성과 더불어 각종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는데²⁴⁾ 노동운동의 조직화는 노동자 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해방 직후 각 공장에서 조직된 조합이 자연스럽게 산별노조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이 같은 각 산별노조를 연결 통일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던 1945년 9월 26일 전평 준비위원회²⁵⁾는 박헌영 계열의 바로 이러한 의도에 따른 결과였다. 이를 반영하듯, 전평 결성대회 당시 대회는 “조선 무산계급의 수령이요 애국자인 박헌영 동무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것”과 “조선 무산계급 운동의 교란자 이영 일파를 단호히 박멸할 것”을 긴급동의로 채택하기

24)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조선공산당 박헌영 계열의 의도는 ‘8월테제’, 즉 조공 중앙위원회가 1945년 9월 20일 채택했던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 자료집》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8~21쪽 참조).

25) 中尾美知子, 《해방 후 전평 노동운동》(춘추사, 1984), 42쪽.

도 했다.²⁶⁾

그렇다면 결성 이후 전평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노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미군정기 정치상황의 전개와 전평의 운동노선

시 기	초기(45. 8~46초)	중기(46초~47중)		후기(47중~48. 8)
정치적 상황의 전개	인공 수립↔미군정 실시	제1차 공위	‘신전술’	단정수립↔단정반대
전평의 운동노선	노동자공장관리운동	산업건설운동	9월총파업→전평의 불법화	

* 정해구, 〈미군정과 좌파의 노동운동〉(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간 경제와 사회》, 까치, 1989), 121쪽.

위의 〈표 8〉은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전평의 운동노선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제1차 미·소공위가 진행되자 전평은 기존의 노동자공장관리운동보다 산업건설운동을 전면에 내걸었으며,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군정의 탄압에 대항하여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신전술’을 채택하자 전평은 총파업 전술로 이에 호응하였다. 이는 전평의 운동이 비록 아래로부터의 노동대중의 요구에 부응했을지라도, 그 노선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전평 노동운동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²⁷⁾ 우선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월 중순 전평 지령 6호의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한 당면투쟁에 관한 지령’이 나오기까지 전평이 추구했던 중심적인 노선은 ‘노동자공장관리운동’이었다.²⁸⁾ 이 노선은 인민정권이 수립되어

26) 김남식,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65쪽.

27) 이하 전평 노동운동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대해서는 정해구, 〈미군정과 좌파의 노동운동〉(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간 경제와 사회》, 까치, 1989년 봄호) 참조.

28) 노동자공장관리운동에 대해서는, 현훈이 《전국노동자신문》에 4회에 걸쳐 썼던 〈노동자 공장관리에 대해서〉를 참조할 것(《전국노동자신문》, 1945년 11월

국유화시키기 이전까지 일인 및 민족반역자의 공장을 접수하여 이를 노동자 스스로가 맡아 관리한다는 것으로서, 좌파진영이 추구했던 인민정권의 물적 기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 노선이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평 결성 이전에는 노동자자주관리운동, 해고반대투쟁, 퇴직금 요구 투쟁 등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전평의 결성과 더불어 이들 운동은 전평의 지도하에 노동자공장관리운동으로 집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공장을 관리하고자 했던 이 같은 시도는 이를 통한 좌파 영향력 강화에 대한 미군정의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그 초기에 일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던 미군정은 전평 주도의 노동자공장관리운동에 직면하자 그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미군정은 이제까지의 그들의 입장을 변경, 일제의 국공유 재산뿐만 아니라 일인 사유재산까지 전면 접수하는 한편 이들의 관리를 자신들이 선정하는 관리인들에게 맡기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²⁹⁾ 이 같은 상황에서 전평의 노동자공장관리운동과 미군정의 정책은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좌파진영은 가능한 한 미군정과 갈등을 야기시키려 하지 않았다. 미군정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아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미군정에 도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1945년 11월 30일 전평이 지시한 ‘산업건설협력 방침’³⁰⁾은 바로 이 같은 양보의 결과였다.

나아가, 이 같은 ‘산업건설협력 방침’은 1946년 1월 중순의 산업건설운동노선, 즉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한 당면투쟁에 관한 지령’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당장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일단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산

16일, 12월 1일, 1946년 1월 1·16일).

29) 일인 사유재산에 대한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 앞의 책, 29~34쪽 및 63~67쪽 참조.

30) ‘산업건설협력방침’에 천명된 전평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다. ① 파업은 수단이 지 목적이 아니다. ② 한국 자주독립을 원조하는 미소 양군에 협력한다. ③ 양심적 민족자본가와 협력하여 공황을 타개한다. ④ 비양심적 악덕모리배를 배격한다(中尾美知子, 위의 책, 61~63쪽).

업건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³¹⁾ 그러나 전평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데에 있었다. 즉 한반도 정부수립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좌파 진영은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일반 대중의 지지뿐만 아니라 양심적 민족자본가와의 협력 또한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전평이 노동운동을 방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노력을 ‘對악덕관리인 투쟁’에 집중시켰던 한편,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쌀 획득투쟁’도 동시에 전개해 나갔다.³²⁾

이상과 같은 해방 직후 전평의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통해 보면,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이 산업건설협력방침을 거쳐 산업건설운동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대중의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부수립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좌파 내부의 전술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곧 미·소공동위원회 개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의 인민정권 수립운동은 미·소공위를 통한 정부수립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전평의 노동운동노선을 보다 온건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전평은 온건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었던 사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아갔다. 1946년 5월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과 동시에 좌파 진영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은 강화되고 우파의 테러반격 또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6년 중반에 들어 좌파 진영은 심각한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들은 미군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온건노선을 유지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평 내부에도 반영되었는데, 그들은 강온 전술의 선택 여부를 둘러싸고 격심한 내부 논쟁에 휘말렸다. 한쪽에서는 총파업의 강경 전술이 주장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건설운동의 유효성이 주장되었다.

31) ‘산업건설운동’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 위의 책, 79~82쪽 참조.

32) 이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 위의 책, 82~97쪽 참조.

뿐만 아니라, 이럴 즈음 노동쟁의 현장에서 분출했던 아래로부터의 압력 또한 점차 가중되고 있었다. 공장 및 직장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태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오히려 전평 지도부가 억제하고 있는 형국으로 변해갔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말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박헌영 중심의 강경세력은 ‘신전술’, 즉 ‘정당방위의 역공세 전술’³³⁾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까지 온건정책을 유지해왔던 전평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2) 농업문제

미군정기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더불어 미군정의 정책과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사안은 농업문제였다. 일제 치하에서 이미 그 모순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었던 농업문제는 해방과 더불어 긴급히 그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농업문제를 둘러싼 미군정 정책과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추구하고, 이것은 양측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우선 양측 대립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토지문제의 현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표 9>는 1945년 말 현재의 남한지역의 자작·소작별 농가호수의 비율이다.

이 표에 따르면, 해방 직후 1945년 말의 시점에서 전체 농가는 약 206만 호인데, 그중 순수 소작농은 약 101만 호로서 전체 농가의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작농겸 소작농의 상당수가 소작을 겸하고 있어 이 비율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소작농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62.7%에 달했다. 또한

33) ‘정당방위의 역공세’, 즉 ‘신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세계, 1984), 30~32쪽 참조. ‘신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김남식, 앞의 책, 235~236쪽).

- ① 지금까지 협조, 합작노선을 진보적으로 전환.
- ② 극동에서 중공당과 일본공산당들과의 연계하에 반미운동 적극화.
- ③ 북조선과 같은 개혁을 요구.
- ④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적극적 공세로 전환.
- ⑤ 정권을 미군정에서 인민위원회로 넘기는 투쟁 전개.
- ⑥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

순수한 자작농이라 할지라도 1정보(3,000평) 이하의 농지밖에 소유하지 못한 영세농가가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이를테면 1947년의 시점에서 1정보 미만 농가호수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71.5%나 차지하고 있었다.³⁴⁾ 이와 같은 통계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에 지주를 포함한 일부 부유 농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최소한의 경작지도 가지지 못한 채 영세한 자작농 또는 자·소작농 또는 소작농으로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농민들의 이 같은 열악한 처지는 일제하에서 강화되었던 지주-소작제의 직접적인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표 9〉 남한의 자작·소작별 농가호수 (단위 : 호, %)

구 분	농가호수	비 율
지주겸 자작농	284,509	13.8
자작농겸 소작농	716,080	34.6
소작농	1,009,604	48.9
피용자	55,284	2.7
합 계	2,065,477	100.0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26쪽을 이용하여 작성.

이와 같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코자 했던 급진적인 운동이 해방 직후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등장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해방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통한 것이다. 해방 직후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좌파세력 주도의 인민위원회체제가 구축되었는데, 농민들은 바로 이 같은 지방인민위원회 구축의 대중적 기반을 제공했다.³⁵⁾ 다음의 〈표 10〉은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의 인민위원회 결성 비율과 그들의 실질적인 통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34) 통계청, 앞의 책, 26~27쪽.

35) 해방 직후 등장한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해서는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제8장 〈지방인민위원회 개관〉과 제9장 〈지방인민위원회의 운명〉을 참조할 것.

〈표 10〉 해방 직후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그 영향력 정도

도	總郡數(A)	組織郡(B)	B/A(%)	지배적인 郡(C)	C/A(%)
경기	21	19	90	6	29
강원	12	10	83	4	33
충남	14	13	93	9	64
충북	10	7	70	3	30
전남	21	21	100	14	66
전북	14	14	100	7	50
경남	19	19	100	16	84
경북	22	22	100	8	36
제주	1	1	100	1	100
총계	134	126	94	68	51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현대사연구회,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세계, 1987), 89쪽.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과 더불어 남한의 거의 전역(94%)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51%)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이 등장하자 좌파 주도의 통치기능은 곧 부인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이 자신을 유일한 정부로 내세우면서 인민위원회의 통치기능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군정 점령통치기구의 영향력이 지방 수준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1946년 초 무렵 지방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지방인민위원회의 잔존 영향이 상당 정도 남아 이후 각 지역의 항쟁시 다시 분출되기도 했지만,³⁶⁾ 일단 1946년 초의 시점에서 그 영향력은 대부분 미군정의 통제 아래 약화되거나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열악한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코자 했던 노력은 농민운동 자체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우선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농민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은 농민위원회·농민조합·농민연맹·노농동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를 접수한다거나 일본인 토

36) 지방인민위원회의 이러한 잔존 영향력은 1946년의 10월항쟁, 1948년의 제주 4·3항쟁과 여순반란사건 등 미군정기 및 그 직후에 분출했던 크고 작은 제반 항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의 무단 매매를 감시한다거나 소작료 불납 또는 인하 투쟁을 시도했다. 나아가 주재소·면소 등 일제의 말단 식민기구를 습격하거나 생계위기에 직면하여 공출창고를 습격하여 쌀을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했던 모습들은 점차 좌파 주도의 농민조합운동으로 결집되었는데, 그것은 농민 대중의 요구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고자 했던 좌파진영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마침내 전국적인 농민조직이 결성되었다. 1945년 12월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남북한의 332만여 명의 조합원과 239개 조합을 대표하는 54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던 全國農民組合總聯盟(이하 전농)이 바로 그것이었다.³⁷⁾

전농은 결성대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와 조선인 지주에 대한 금납원칙의 소작료 3·7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공산당이 초기에 주장했던 급진적인 주장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었다. 미군정 초기 박헌영 계열의 조선공산당은 ‘8월테제’를 통해 조선혁명의 현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달성키 위해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일제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뿐만 아니라 대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신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조선인 소지주의 토지 몰수까지 주장한 바 있었다.³⁸⁾ 미군정의 실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미군정이 지원하는 우파와 대항하기 위해 민족통일전선의 확대가 요구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주장은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 토지개혁 대상을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로 한정하고 3·7제 소작료 투쟁에 그 힘을 집중시키고자 했던 전농의 결정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한편 미군정은 좌파세력 주도의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해 대응했다. 우선 토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인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하게 거래 허용의 의사를 보였던 미군정은, 좌파진영의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일제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접수정책으로 방침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동척에 속해 있던 모든 토지와 기타 일인 회사 및 개인의 모든 토지는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46년 2월 신한공사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미군정

37) 전농의 결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앞의 책, 200~208쪽 참조.

38)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김남식 편, 앞의 책, 10쪽) 참조.

의 신한공사는 남한 농업인구의 24.1%를 지배하는 남한 최대의 지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미군정은 10월 5일 법령 제9호를 통해 소작료 3·1제를 발표하였다. 미군정의 3·1제 조치는 현물납문제 등 일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좌파진영의 3·7제 주장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었다.³⁹⁾

이렇듯 좌파 주도의 농민운동의 조직화와 이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초기부터 양자의 갈등이 마냥 침예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46년에 들어 양자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1946년에 들면서 그 강도가 더욱 강화된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탄압은 점차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1946년 3월에 전격 시행되었던 토지개혁의 여파는 남한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한 좌파진영의 토지정책은 급진화되었는데,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을 주장했던 그들은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하에 일본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 5정보 이상의 토지 및 자경하지 않는 토지의 몰수 등의 주장이 그것이었다.⁴⁰⁾

그러나 1946년에 들어 정작 농민들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야기시켰던 것은 미군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식량의 강제수집정책이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식량의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채택했는데, 이는 식량 매점매석과 식량가격 폭등 등 식량부족으로 인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46년 2월에 들어 〈미국수집령〉을 발동하여 ‘구국미’의 강제 매입에 나섰던 미군정의 조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일제의 공출을 연상시켰던 그 조치는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또한 경찰 등 미군정의 물리력에 의해 강행되었다. 한편 도시민들에게도 배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에서 대중들의 불만을 누적시켰는데, 그 불만은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분출의 잠재적 기반을 제공했다.

39) 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371~374쪽.

40) 북한 토지개혁의 여파로 인한 남한 좌파진영의 토지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박혜숙, 위의 글, 389~390쪽 참조.

3)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1946년 후반의 시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경제적 혼란이 급속히 누적되고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과 미군정 정책 사이의 갈등 또한 급속히 증대되던 시기였다. 사회경제적 혼란과 사회갈등이 상호 증첩적으로 작용했던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정의 탄압에 대한 강경 좌파세력의 정면 도전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대중의 불만과 항의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은 바로 그 폭발이었다.

(1) 9월총파업

9월 23일 0시를 기해 7천여 명의 부산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24일에는 경성을 비롯한 전국의 철도노동자 4만 명이 이에 합세하였다. 뒤이어 며칠 사이에 출판·채신·섬유·전기 등 각 분야 노조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9월총파업은 부산의 철도파업에서 시작되어 전국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파업의 확대 속에서 24일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26일에 ‘총파업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밝혔다.⁴¹⁾

- 一. 쌀을 달라. 노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
- 一. 물가등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라.
- 一. 전재민·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 一. 공장 폐쇄, 해고 절대 반대.
- 一.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 一. 일체 반동테러 배격.
- 一.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 一. 민주주의운동의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를 즉시 철회하라.
- 一. 검거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 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 一.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안을 즉시 철회하라.

41) <자료 총파업선언서>(《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11월 22일).

- 一. 해방일보·인민보·현대일보 기타 정간 중인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사원을 석방하라.

위의 요구조건들은 사회경제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제반 정치적인 요구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데, 이는 총파업 발발의 복합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당시 극도의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상황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야기되었던 식량부족·물가등귀·귀환동포로 인한 전제민문제·실업문제 등은 당시의 시점에서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해고·각종 임금상의 불이익 등에 항의하여 총파업 투쟁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월총파업 발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운수부 종업원 25%의 감원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던 미군정청 운수부 정책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미군정청 운수부의 조치에 대항하여 철도국 경성공장의 노동자들은 9월 13일 가족수당 및 물가수당 지급, 일급제 반대, 식량 배급, 해고 반대 등을 내세우며 태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던 것이다.⁴²⁾ 요컨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군정청 운수부 정책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항의에서 비롯되었지만, 당시의 악화된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전 산업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9월총파업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당시의 악화된 사회경제적인 조건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총파업이 미군정과 강경 좌파진영의 충돌이라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46년 5월 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미군정은 강경 좌파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범좌파진영은 미군정과의 타협을 주장했던 여운형 중심의 온건세력과, 정면 대결을 주장했던 박헌영 중심의 강경세력으로 분열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추진되었던

42) 이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 앞의 책, 114~115쪽 참조.

조선공산당·인민당·신민당 등 좌파 3당의 통합문제는 주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진영의 내부 분열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강경 좌파세력은 미군정의 탄압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또 내부 투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에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 1946년 7월 26일 취해졌던 조선공산당의 ‘정당방위의 역공세’, 즉 ‘신전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좌파세력이 “수세에서 공세로, 퇴거에서 전진으로 돌진”하기 위해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자 했던 시도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 내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강경 좌파세력의 시도였던 것이다. 총파업 전술은 바로 박헌영 중심의 강경 좌파세력이 이 같은 ‘신전술’의 맥락 속에서 모색했던 대중투쟁의 일환이었다.

총파업과 관련하여 원래 그 시기는 농민들의 추수투쟁과 연결시키기 위해 10월경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파계열의 신문인 《인민보》·《현대일보》·《중앙신문》에 대한 미군정의 정간조치에 이어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⁴³⁾

아무튼 9월 23일 시작된 9월총파업은 10월 초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24일 경성의 철도노조가 파업에 전면 동참한 가운데 25일에는 출판노조가 이에 합세했고, 같은 날 대구종업원 4백여 명 역시 파업에 돌입했다. 27일에는 경춘철도 종업원 2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 것을 필두로 경성의 각 전화국과 우편국, 부산의 남진, 그리고 3천여 명의 대구 섬유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28일에는 해원노조 1만여 명이 태업에 들어갔고 이 태업은 10월 3일 파업으로 이어졌다. 각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던 이 같은 파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25만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참여했으며, 경성에서만도 철도노동자를 비롯하여 295개의 공장 및 직장에서 노동자 3만여 명과 사무원 6천여 명이 참여하였다.⁴⁴⁾

그러나 전평 주도의 이 같은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단호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총파업 투쟁이 순수한 노동운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노동운동을 앞세운 좌파세력의 정치적 도전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4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남식, 앞의 책, 236~237쪽 참조.

44) 조선통신사, 《조선연감》(1948년), 257~258쪽.

미군정은 총파업에 대한 물리적 분쇄에 나섰는데, 9월 30일 3천여 명의 경찰 및 우익청년들을 동원하여 용산 철도파업단에 대한 공격을 성공시켰고, 이는 총파업 분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군정청 운수부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상황은 마치 우리가 전투에 돌입한 것과 같았다. 우리는 파업을 분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몇몇 죄 없는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는 시 외곽에 정치범 수용소를 세워 감옥이 모자랄 때에는 그곳에 파업 노동자들을 수용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우리는 적어도 전쟁으로 생각했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Stewart Meacham, 〈미군정하 노동정책-한국 노동사정 보고서〉,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264쪽).

9월총파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라기보다는 좌파진영의 정치적 공세로 판단했던 미군정의 이 같은 강력한 탄압에 의해 파업은 10월 초에 들어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또한 대구에서의 총파업은 지역주민의 항쟁으로 이어졌는데, 대구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이 같은 항쟁은 사태의 초점을 또 다른 차원, 즉 민중항쟁의 차원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9월총파업은 이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에도 1947년 3·24 24시간총파업, 1948년의 2·7총파업 및 5·8총파업 등 좌파진영에 의한 여러 차례의 총파업이 전개되기는 했다. 그러나 그 파업들은 좌파 노동운동의 상승기에 분출했던 운동이 아니라 하강기에 등장했던 운동이었고, 그런 만큼 대중적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정치투쟁에 가까웠다. 더구나 전평의 노동운동은 “정치색을 띤 노동조합은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1947년 6월 7일 미군정의 정책에 의해 조기에 불법화되었다. 따라서 9월총파업 이후 전평 중심의 좌파 노동운동은 미군정의 집중적인 탄압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군정과 경찰의 후원에 의해 점차 그 영향력을 강화시켰던 우파진영의 대한노총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갔다.

요컨대, 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좌파진영의 노동운동은 해방 직후 짧

은 기간 동안에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룩했던 한편, 9월총파업 이후에는 급속도로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 전평 중심 노동운동의 급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불만을 누적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들을 동원하고 조직화시킬 수 있었던 좌파 노동운동의 리더십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으로 좌파진영, 특히 강경 좌파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미군정의 강력한 탄압을 야기시켜 그들의 조기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즉 전평의 노동운동은 미군정에 대한 강경 좌파세력의 전술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전술이 미군정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책을 취했을 때, 대중투쟁의 최전선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과 분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평 중심의 노동운동은 급속한 약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10월항쟁

9월 23일의 부산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분야로 확산되었을 때, 대구에서도 철도파업을 필두로 우편국·섬유산업·출판노조 등이 이에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30일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총파업에는 30여 개 업체 총 4,000여 명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구의 총파업은 전평의 대구 지역조직이라 할 수 있었던 조선노동조합대구평의회가 주도했는데, 그들은 27일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대구지역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 대구지역의 총파업은 다른 지역의 총파업이 경찰에 의해 분쇄되거나 자연적으로 약화된 데 비해, 이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즉 10월 1일 경찰의 발포로 군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민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발생, 사태는 파업차원을 넘어 민중항쟁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⁴⁵⁾ 나아가, 대구에서 전개되었던 항쟁은 며칠 사이에 경북의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45) 대구에서의 총파업과 항쟁에 대해서는 정해구, 앞의 책, 102~113쪽 참조. 이후 10월항쟁 설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설명은 이 책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파업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9월총파업 발생의 동일한 원인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 미군정은 강경 좌파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강경 좌파세력은 미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진술’의 새로운 방침을 채택했다. 총파업은 좌파진영의 이러한 진술 변화 속에서 모색되었고, 따라서 항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정치적 설명만으로 항쟁으로의 발전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항쟁으로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당시 대구와 경북지역이 직면했던 사회경제적인 상황, 특히 귀환동포문제와 식량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다음 <표 11>은 당시 귀환동포의 국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의 귀환동포 규모는 경남과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고향이라고 찾아와도 굶어 죽겠으니 가다가 죽으나 여기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대구역을 떠나는 이재민이 1일 100여 명이나 되었다는 보도⁴⁶⁾는 당시 대구 귀환동포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귀환동포의 열악한 처지가 항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귀환이재민의 국내 분포

(단위 : 1,000명)

도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서울	제주	계
인원수	142	126	360	312	393	236	293	87.3	255	22	2,226.3

* 《동아일보》, 1947년 1월 11일.

다음으로 대구·경북에서의 민중항쟁은 식량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정은 1946년 2월 미국의 강제매입을 시행했고, 이에 3월 대구 미군정청은 미국의 불법운반과 자유매매를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해 여름에 발생했던 콜레라는 그 방역대책을 위해 대구 주변의 교통을 차단시켰는데, 이는 대구 주변의 농촌에서 개별적으로 소량의 식량을 반입하여

46) 《대구시보》, 1946년 4월 13일.

근근히 생계를 연명해왔던 대다수 대구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당시 대구에서 빈발했던 식량배급 요구의 항의사태는 당시 대구지역의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⁴⁷⁾

이상의 사태가 주로 대구지역에 해당되었던 문제라 한다면, 대구 주변의 농촌지역에서는 식량의 강제매입이 문제가 되었다. 다음의 <표 12>는 1945년산 미곡수집과 1946년산 하곡수집에 대한 전국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1945년산 미곡수집 및 1946년산 하곡수집 계획대비 실적 (단위 : %)

구 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계
1945년산 미곡수집	8.2	7.3	9.1	20.2	16.9	7.3	5.9	57.5	12.4
1946년산 하곡수집	62.5	70.4	42.6	69.6	11.0	74.4	41.4	142.8	48.0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년) I-243쪽과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1949년)IV-35쪽을 이용하여 작성.

<표 12>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1945년산 미곡수집 실적은 계획대비 7.3%에 그치는 것으로서 좋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1946년산 하곡수집 실적은 계획대비 74.4%로서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최고였다.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경북 미군정청이 1945년산 미곡수집의 저조한 실적을 감안, 1946년산 하곡수집에 있어서는 계획량 달성을 위해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북 미군정청은 하곡수집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찰을 총동원할 정도로 농민들을 강압했고, 때로는 하곡수집에 응하지 않는 농민들을 투옥하기조차 했다. 하곡수집과 관련된 경북 미군정청의 이 같은 강압적 태도가 10월항쟁 확산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⁴⁸⁾

다른 한편, 대구에서의 파업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던 또 다른 원인은 이 지역 좌파세력의 유연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에서도 확인

47) 정해구, 앞의 책, 90~92쪽.

48) 경북지역에서 미군정청에 의한 강압적인 식량수집정책에 대해서는 정해구, 위의 책, 90~99쪽 참조.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대구의 좌파진영은 보다 유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강력해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우파들과 더불어 건국준비치안유치회·탁치반대공동투쟁위원회·대구공동위원회 등을 결성함으로써 9월총파업 및 10월항쟁 이전까지 3차례에 걸친 좌우합작적 연대를 성사시켰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 같은 유연성은 역으로 미군정의 탄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미군정의 탄압으로 약화되었던 다른 지역의 좌파세력과는 달리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구파업의 민중항쟁으로의 발전이 좌파진영에 의해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이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대구·경북 좌파진영의 존재가 있었다.⁴⁹⁾

아무튼 10월 2일 저녁 이후 대구항쟁은 경북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항쟁은 경북지역 전체 22개 군 가운데 19개 군에서 발생하였다. 태백산맥 이東의 몇 개 군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서 발생했던 이 항쟁에는 약 32만 명의 민중들이 참여했다. 항쟁을 통해 농민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은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의 제거였다. 또한 그들은 식량 및 생활난, 미군정 정책 비판, 좌익인사 구속에 대한 항의, 그리고 민주주의 등을 요구했다.⁵⁰⁾ 즉 그들은 해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경찰로 상징되었던 체제의 현실에 분노했고, 귀환동포 및 식량문제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 갔던 사회경제적 혼란상은 그러한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에게 되돌아온 보복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유형진압이었다. 대구항쟁 진압에 이어, 경북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약 3천 명의 경북 경찰력 이외에 충남경찰대 400명, 충북경찰대 300명, 경기경찰대 400명이 투입되었고, 충남의 국방경비대 2연대와 3·4관구의 미군도 투입되었다. 나아가 서울에서 내려온 우익청년단도 진압에 합세하였다. 따라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살, 체포되거나 도피하였고 아니면 적어도 항쟁에

49) 해방 직후 대구지방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는 정해구, <해방직후 대구지방 정치의 전개>(《역사비평》1, 역사문제연구소, 1987) 참조.

50) 정해구, 앞의 책, 148쪽.

참여했던 사실 자체를 숨겨야 했다. 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낮에는 산에 올라가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오는 ‘산사람’이 되었다. 항쟁이 진압되었을 때 경북지역에서 군중 수백 명이 사망했고 7천여 명이 검거되었다. 한편 경찰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항쟁이 마무리될 무렵 항쟁은 경남지역으로 비화되었다. 경남에서는 10월 7일에서 14일까지 각지에서 다수의 항쟁이 발생했으나, 경북항쟁과는 달리 그것은 분산적이고 고립적인 모습을 띠었다. 이어 10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는 충남의 서북부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10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는 경기 서북부의 38선 부근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이곳에서의 항쟁은 소규모의 인원이 경찰서나 지서를 “치고(hit)” 복으로 “빠지는(run)” 모습을 보였다. 10월 29일에서 11월 첫 주 사이에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11월 29일에서 11월 4일까지는 나주와 화순을 중심으로 한 전남 중북부지역에서 대규모의 항쟁이 발생하였다. 11월 7일 이후에는 해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남쪽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10월 1일 대구로부터 시작되어 이때까지 전국에 걸쳐 발생했던 10월항쟁은 12월 8일 전북 전주에서의 항쟁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⁵¹⁾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노동문제 및 농업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과 이에 대한 미군정 정책의 충돌은 결국 이렇게 9월총파업의 형태로, 10월항쟁의 형태로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폭발에는 정부수립을 둘러싼 미군정과 좌파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파업과 항쟁의 이러한 폭발은 문제의 해결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을 앞세운 미군정의 억압에 의해 그 폭발이 진압되고 분쇄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남겨진 문제는 반공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에 남겨져 있는 좌파적 잔존 요소들을 척결하는 일이었다. 이후 미군정기 동안 행해졌던 것은 바로 그러한 작업들이었다.

〈丁海龜〉

51) 타 지역의 항쟁에 대해서는 정해구, 〈경북지역 이외의 10월인민항쟁〉(정해구, 위의 책, 제5장) 참조.

2. 미군정기의 경제

1) 해방의 경제적 의미

1945년 8·15해방은 일제치하 조선의 낡은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해방에 연이은 미군정기 동안에 생산이 위축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혼란이 지속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외압의 압도적 규정성 속에서 경제질서의 재정립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각축과정을 통한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군정기를 거쳐 대외경제관계가 재편되었다. 일제하에서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자본의 초과이익의 수탈대상이었으나, 해방을 계기로 조선경제는 일제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일본·조선·만주를 포괄하는 재생산 경제권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왔다. 그 대신 남한은 미군의 점령하에 놓이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권 속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일익을 담당해 나갔다.

둘째로, 일제의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가 무너지고 한국의 국민국가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해방에 곧이어 미군이 남한을 점령·통치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가 일제 대신 미국의 종속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통치는 1948년 8월 한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것이었다.

또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식민지적인 지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국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의 의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조선민중의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패전한 결과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8·15해방은 동시에 남북 분단을 초래하였다.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은 남북 경제관계를 단절시키고 남북이 각각 상이한 체제를 만들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경제구조의 파행성은 더욱 심화되고,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비생산적 지출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넷째로, 미군정기는 남한경제가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변모한 시기였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주세력이 쇠퇴하고 일본인 자본가가 철수했으며, 그 대신 한국인 자본가층이 부상하면서 점차 신흥 지배계급으로 부상해 갔다. 이러한 내부적 재편과정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졌던 것이 토지문제와 귀속재산¹⁾ 처리문제였다.

일제하에서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취는 해방 후 곧바로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지주세력의 이해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인 소유재산 특히 사업체의 처리를 둘러싸고는 노동자자주관리운동도 전개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지만, 결국 일단 국가 소유로 전환된 다음에 민간에게 불하됨으로써 자본주의 질서가 재정립되었다.

2) 농지개혁과 식량공출

(1) 농지개혁

가. 농지문제와 농지개혁 요구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문제

1) 歸屬財産(vested property)은 흔히 敵産이라고도 불렀는데, 일본인 재산이 정식으로 귀속재산이 된 것은 1945년 12월 6일의 미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해서였다. 귀속이란 말은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데 미군정 당시에는 미군정에, 한국정부 수립 이후엔 한국정부에 귀속되었다.

의 합리적 해결은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그리고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남한 총경지의 63%는 소작지였으며, 총농가 가운데 자작농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순소작농이 절반 가까운 상황이었다. 즉 일부의 자작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제 말의 소작료율은 5~6할의 고율이었다.²⁾ 따라서 이러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개혁은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절실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 1> 남한의 토지소유 상황(1945년 말)

(단위 : 만 정보)

토지 종류	논	밭	합 계
총경지	128(100%)	104(100%)	232(100%)
총소작지	89(70%)	58(56%)	147(63.4%)
일본인 지주 소유지	18(14.5%)	5(5%)	23(9.9%)
조선인 지주 소유지	71(55.5%)	53(51%)	124(53.5%)
자작지	39(30%)	46(44%)	85(36.6%)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29쪽.

이리하여 해방이 되자 곧 일본인 지주의 농지를 소작농들이 접수·분배한 다거나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특히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의 힘이 강력했던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전국적 정치운동단체들이 조직됨에 따라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른바 朴憲永의 ‘8월테제’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는 당시의 조선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단계로 파악하고 그 중심 과업으로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적 반역자와 대지주의 토지를 보상을 주지 않고 몰수하여 이것을 토지 없는 또는 적게 가진 농민에게 분배할 것이요, 토지혁명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조선인 중 소지주의 토지에 대하여는 자기 경작토지 이외의 것은 몰수하여 이것을 農作者의 노력과 가족의 인구수 비례에 의하여 분배할

2)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の農業》(1942), 215쪽.

것이요, 조선의 전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요, 국유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농민위원회·인민위원회가 이것(몰수한 토지)을 관리한다”³⁾고 하였던 것이다.

〈표 2〉 농민의 토지보유 상황(남한 1945년 말)

(단위 : 천 호)

남한 농가	호수(비율)
총호수	2,065(100%)
자작농	287(13.9%)
자작겸소작농	717(34.7%)
자작50% 이상	340(16.5%)
소작50% 이상	377(18.2%)
소작농	1,005(48.7%)
토지불경작 농가	56(2.7%)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1949), 5쪽.

다만 당면 과제로서는 “소작료를 3할 대 7할제로 인하하고 이것을 화폐지대로 정할 것이요 소작관계에 있어서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자”⁴⁾는 방침을 제기하였다. 1945년 12월 8일에 결성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강령도 처음에는 조선인 지주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조선공산당의 당면 과제와 같은 수준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명목적으로는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혁명적인 방식의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그러한 영향 속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남로당·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일제·친일파·민족반역자뿐만 아니라 5정보 이상 소유하면서 자정하지 않는 지주들의 모든 소작지를 무상몰수하여 雇農 또는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⁵⁾

반면 이러한 좌파의 요구에 대해 우파를 대표하는 한민당측에선 창당 초기엔 ‘농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⁶⁾ 그후

3)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노선 비판》(세계, 1986), 182~183쪽.

4) 김남식·심지연 편저, 위의 책, 188쪽.

5)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31~345쪽.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1(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349~362쪽.

6)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62~

1945년 11월에는 “토지는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고용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1/3 정도로 납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치 않으면 안된다”⁷⁾고 하였다.

이러한 ‘유상매입 국유소작농’ 원칙은 1946년에 들어서부터는 ‘유상매입·유상분배론’으로 정리되고 이는 미·소공동위원회에도 제출되는 기본방침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한민당의 이러한 방침은 지주층을 대변하는 한민당으로서도 시대의 대세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1946년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 표명된 중간과의 입장은 우익층의 유상매수안과 좌익층의 무상몰수안을 절충한 ‘유상매수·무상분배’였다. 적산토지는 물론 몰수하지만 조선인 토지는 소지주에 대해선 자경면적 이외는 시가 전액으로 매상하고, 중·대지주에 대해선 자경면적 이외는 채감매상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 안은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 좌우의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받으면서 그다지 힘을 얻지는 못하고 말았다.

나. 미군정의 농지개혁

가) 소작료 3·1제의 실시와 신한공사 관리

미군정은 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5년 10월 5일 ‘소작인의 반노예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고소작료율을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현존 소작권의 유효기간 중에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하는 등 소작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는 당시 농촌의 혁명적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고 지역에 따라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주들의 일정한 양보를 강제함으로써 장차 단행될 농지개혁의 전주곡 역할을 한 셈이었다. 즉 일단 지주제를 인정한 틀 내에서나마 농민들의 급진화를 막기 위해선 지주세력의 약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미군정은 1945년 10월 6일 일제하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The

163쪽.

7) 심지연, 《한국민주당 연구》 I(폴빛, 1982), 194쪽.

New Korea Company)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이리하여 <표 3>에서 보듯이 신한공사는 남한 전체 경지면적의 12.3%(논의 경우는 16.7%, 밭의 경우는 6.5%)를 소유하고 그 소작농은 전체 농가호수의 27.1%에 이르게 되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미군정이 이처럼 신한공사를 창설하고 일본인 소유농지를 직접 관할한 것은 해방 후 밑으로부터 전개된 일본인 농지 접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불납운동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군정은 좌익운동을 억압했음은 물론이고 남한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3> 신한공사 소유경지의 규모와 비중(1948년 2월 10일 현재)

(단위: 정보)

경 지 도별	전		답		전 + 답	
	신한공사	전체	신한공사	전체	신한공사	전체
경기·황해	23,634	230,442	9,658	162,575	33,292	393,017
강원	819	42,048	1,055	100,161	1,874	142,209
충북	4,927	65,320	3,971	77,983	8,898	143,303
충남	24,035	152,568	7,053	76,116	31,088	228,684
경북	13,499	196,973	6,503	164,714	20,002	361,687
경남	26,084	172,301	7,327	88,433	33,411	260,734
전북	57,905	167,929	8,496	73,169	66,401	241,098
전남	55,068	205,890	17,663	125,115	72,731	331,005
제주	17	789	905	89,020	922	89,809
합계	205,988	1,234,260	62,631	957,286	268,619	2,191,546

* C. Mitchell, *Final Report and History of the New Korea Company*, USAMGIK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1948, pp.4·8.

즉 3,000명 가까운 정식직원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촌락유지로 구성된 農監이 신한공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또 신한공사 소속 농가의 비중은 경지의 두 배 이상이고,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신한공사 소

유지 이외의 다른 지주소유지나 자작지도 포함하여 남한 전체의 27.7%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악은 전체 농촌·농민 장악의 핵심고리였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술하는 식량공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 귀속농지 매각

미군정은 귀속농지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⁸⁾ 다만 이를 전반적인 토지개혁과 관련시킨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에 미국무부의 번스사절단도 구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권고하였으며,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토지개혁법>이 공포되자 이에 대응하여 미군정 장관은 동 3월 15일 <구일본인토지의 불하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즉흥적이었고 미군정은 동 6월에 이 매각안을 보류하고 미·소공동위원회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보류하였다.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돌파하고 좌익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온건좌우파를 중심으로 좌우합작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대신 1946년 12월에 과도입법의원을 구성시켜 여기서 농지개혁 문제를 처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의원에는 지주 출신을 비롯한 우익진영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개혁법안>의 작성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토지개혁이 대세이긴 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지연시켜 보려고 한 것이다. 이에 미군정은 번스 등이 포함된 한·미농지개혁연락위원회가 성안한 법안을 1947년 12월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봉건적 토지소유의 타파와 민주경제적 토지제도의 수립이 목적이다.

둘째, 토지개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중앙토지개혁행정처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방행정처와 함께 토지개혁위원회를 조직하되 이 위원회는 반수 이상을 소작농 내지 소자작농으로 구성한다.

셋째, 매수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 3정보 초과농지, 학교·교회·병원 등의 자경 초과농지로 하되 귀농 희망자에게는 3정보 이내의 농지 소유를

8) 최봉대, 앞의 책, 130~132쪽.

허용한다.

넷째, 매수지가는 연평균 소출의 3배로 하고 면적증가에 따른 법정채감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지주는 연평균 소출의 2할씩을 15년 동안 지급받는다.

다섯째, 농지분배 순위는 ① 농지를 경작하는 현재의 소작농, ② 농지가 적은 자작농 또는 소작농, ③ 고용농가(머슴), ④ 귀환동포(농가)의 순으로 하였다.

여섯째,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연평균 소출의 2할씩을 15년 동안 현물로 분납한다(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51~353쪽).

이 법안은 입법의원들의 사보타지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지만 한국정부 수립 이후 농지개혁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에서는 매수·매각 가격이 연평균 소출의 1.5배로 낮추어지고, 상환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고, 토지개혁위원회가 농지위원회로 바뀌면서 농지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조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등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이렇게 <농지개혁법안>이 폐기되자 다가올 5·10총선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1948년 3월 22일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고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토지만을 분배하기에 이르렀다. 신한공사 보유토지 중 임야 등은 제외되었으며 매각조건은 소유한도를 2정보로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법의원에 상정했던 법안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다만 정부수립 이후 1951년의 <귀속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해 귀속농지의 매각가격도 한국정부의 <농지개혁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소출의 1.5배로 조정되었다.

(2) 식량공출

가. 해방 직후의 식량 사정과 미곡 자유시장정책

해방 직후 남한의 식량 사정은 해외동포의 귀환과 월남동포의 증대 및 일제하에서 억제되었던 소비수요의 폭발이라는 수요측 요인과 생산부진과 같은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초기에 미국의 자유거래를 용인하였으나, 그 부작용 때문에 다시 식량공출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표 4〉에서 보듯이 남한 인구는 해방 전에 비해 대략 230만 명 즉 13% 이상이 증대하였다. 또한 0.77석까지 증대되었던 1인당 미곡소비량이 2차대전 말기에는 0.558석으로 하락하였는데,⁹⁾ 이렇게 강제로 위축되었던 미곡소비가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됨으로써 수급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다.

〈표 4〉 남한 인구의 추이

국 적	1942년 12월	1944년 5월	1946년 8월
조선인	16,876,745명	16,565,317명	19,369,270명
일본인	490,204명	462,507명	미상
기타 외국인	14,274명	12,648명	미상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3쪽.

그런데 미곡생산은 1942~1944년 평균이 1,372만 석이었는데 반해 1945년엔 1,284만 석, 1946년엔 1,205만 석으로 크게 부진하였다. 하곡생산도 해방 전 3년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진 실태는 해방 후의 통계 미비로 인한 착오 탓도 있을 수 있으나, 비료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군정은 1946년 5월부터 밀가루 등의 구호양곡을 도입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진주 초기에 한국의 식량수급구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커다란 혼선을 빚었다. 즉 미군정은 일제하의 식량공출에 시달려 온 농민을 배려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1945년 10월 5일 소작료 3·1제를 공포함과 더불어 미곡의 자유거래를 제한하던 일체의 법령을 폐지하였다. 다만 갑작스런 米價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미가는 계속 폭등하고 시장질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하여 최저가격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미군정은 식량자유화 이후 2주 만에 식량통제의 실시를 거론하였고, 12월에 들어서 미곡의 최고가격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최고가격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미곡의 시장

9)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238쪽.

출하가 부진해지고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도시 소시민 등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물자부족 상황과 지주-소작인의 전근대적 관계가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이와 같은 미군정의 정책오류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마침내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여 미곡자유시장을 폐지하고, 1945년산 식량에 대한 수집과 배급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력 발동을 위해 1946년 5월에 <경제통제령>을 제정하였다. 이 식량공출제는 그 내용상의 부분적 변경은 있었으나 1950년 5월의 <양곡관리법> 제정까지는 어쨌든 지속된 제도였다.

나. 식량공출제의 시행

가) 실시과정

일제 말기의 식량관리제도를 다시 계승한 미군정기의 식량공출제는 그 첫 시행년도인 1946년 미곡년도(1945년 11월~1946년 10월 말)에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군정당국은 총 예상생산량을 1,285만 석으로 잡고 이중 551만 석을 공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68만 석 정도밖에 수집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5.3%, 목표량의 12%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미곡공출 실적이 저조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의 식량수급 사정에 어두웠던 군정당국이 뒤늦게 식량공출에 착수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공출기구 활용에 따른 농민들의 거부감,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공정가격에 의한 매입과 보상물자의 결핍, 미곡 운송수단의 부족, 지주와 모리배에 의한 미곡의 암거래도 공출 실패의 주요 요인들이었다.

아울러 미곡공출을 체계적으로 통괄할 중앙행정기구의 부재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의 판단에 따르면 지방 말단에서 해방 직후 활발하게 성장한 여러 민중적 조직들로 인해 미군정의 권력 행사가 일정한 제약을 받았고, 이것 역시 식량공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1945년산 미곡수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군정은 식량관리

기구를 정비하여 1946년 5월 중앙식량행정처를 신설하고, <경제통제령>을 제정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미곡수집의 부진으로 인한 식량수급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1946년산 하곡을 수집하였다.

원래 하곡공출은 일제하에서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곡은 소작인의 몫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하곡공출은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의 하곡 예상수확량 496만 석의 약 25%인 129만 석을 수집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집량은 62만 석 미만으로 목표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46년 미곡수집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당국은 1946년 8~9월에 <중앙식량규칙> 제2호와 제3호를 제정하여 공출농가를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분리하고 소작농의 소작료를 전량 공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지주도 비농가와 동일하게 배급을 받아 생활하도록 하였다. 즉 지주도 소작료를 직접 소작농으로부터 현물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출대금을 공정미가를 기준으로 지불받았던 것이다.

이 결과 1946년 미곡에 대해선 예상수확고 약 1,200만 석의 1/3인 429.5만 석을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수집에 착수하여 목표량의 82.9%인 356.2만 석이 수집되었다. 또 1947년 하곡의 경우엔 목표량의 97.9%를 수집하였고, 1947년 미곡수집에서는 목표량의 97.1%가 달성되었다.

나) 식량공출과 농촌지배구조의 변화

식량공출은 기본적으로는 식량수급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였다. 하지만 식량공출제도의 확립과정은 그와 동시에 농촌에 대한 미군정의 지배력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었고, 아울러 종래의 지주-소작관계를 변모시키는 힘으로도 작용하였다. 즉 농촌의 지배구조는 농지개혁뿐만 아니라 식량공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미군정은 식량공출 과정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던 바, 1946년 추수봉기도 그 한 표현이었다. 농민층은 낮은 공출대금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또 해방 후 성장한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같이 미군정에 저항하던 세

력도 여기에 가세하였다. 그리하여 군정당국은 경찰력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공출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1946년산 미국에서부터 공출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특히 1947년산 하곡부터는 목표치를 거의 완전히 달성함으로써 미군정의 농촌 장악은 성공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사실 해방 직후 일제시대의 식량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적 식량관리제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바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군정이 대체하고 식량공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간 것은 결과적으로 농촌을 장악하는 세력의 교체를 의미하였다. 즉 일제와 마찬가지로 농민은 식량관리기구에서 배제되고 농민단체는 급속히 와해되어 갔던 것이고, 여기서 식량공출의 반농민적 성격이 드러내는 셈이다.

한편 군정당국의 식량공출은 억압적인 물리력의 동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한공사라는 남한 최대의 국가지주를 활용함으로써 식량공출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표 5>에서 보듯이 신한공사 소작농들에 의한 공출실적은 대체로 일반 농민의 공출실적보다 우수하였던 것이다.

<표 5> 신한공사와 일반 농가 공출실적 비교

공출 시기 \ 공출량	신한공사 공출량	일반 농가 공출량
1946년 하곡	81.3%	43.8%
1946년 미곡	87.5%	82.9%
1947년 하곡	101.0%	98.2%
1947년 미곡	101.0%	93.6%

*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쪽.

뿐만 아니라 신한공사 소작농가의 공출실적이 우수했던 점을 살려서 1947년 하곡공출 때부터는 신한공사 소작농이 경작하는 공사 소작지와 일반 지주 소작지 모두에 대해 신한공사 소작농을 공출책임자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신한공사 소작농은 공출기간 동안 다른 농민들을 이끌어 왔다.¹⁰⁾ 신한공

사가 식량공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이렇게 신한공사의 공출실적이 양호했던 것은 신한공사가 소작농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농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던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즉 신한공사와 소작농의 소작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공출실적이 부진하면 소작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1947년 하곡공출 때부터는 신한공사 소작료분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를 허용하였으며, 식량공출에 협조하는 소작농에게는 군정당국이 토지개혁시 소작지 매입의 최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식량공출 과정에서 농민들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일제하에서와 같은 지주세력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량공출을 비롯한 농촌행정에서 정치적 지배구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청년단체·경찰·지방행정관리였던 것이다. 즉 농민층은 지주세력이 아니라 미군정의 직접적 통치조직하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의 식량공출정책은 지주가 소작료를 현물로 직접 수취하는 것을 배제하였고, 공출대금을 3·1제 소작료를 기준으로 한 공정미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지주계급의 물질적 기반을 침식하고 지주제를 해체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일제 말기의 공출제를 통해 타격을 입었던 지주계급은 일제하에서보다 더 불리한 공출정책으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지주계급은 과도입법의원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식량공출정책을 무력화한다든가, 식량을 빼돌린다는가 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즉 군정당국은 공출을 회피하는 지주들을 체포하기까지 하면서 식량공출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다. 여기서 토지개혁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였으므로 지주들은 아예 토지를 방매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이런 제 요인들로 인해 지주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농지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요컨대 농지개혁이든 식량공출이든 농민들의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지주적인 정책도 아니었던 것이다.¹¹⁾ 즉

10)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8쪽.

11) 이것이 바로 한편으로 지주세력과 연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주세력과 대

정치권력인 미군정의 휘하로 통치조직과 물적기반을 끌어들이면서 종래의 지주제를 해체시키고 농촌으로부터 끌어낸 잉여를 공업화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3) 공업생산의 소장과 귀속사업체 처리

(1) 공업생산의 소장

가. 위축실태와 그 원인

미군정기 경제 혼란의 두드러진 양상으로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 공업생산의 消長이다. <표 6>에서 보듯이 8·15 이후의 공업생산 위축률은 대략 40~75%로 추정된다.¹²⁾ 이러한 위축은 한국전쟁에 의한 막심한 피해로 더욱 가중되어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1930년대 후반의 광공업 생산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¹³⁾

그리하여 미군정기의 공업 위축은 귀환·월남동포의 대거유입과 더불어 실업자 홍수사태를 발생시키고 물자부족과 저임금을 초래하여 민중생활을 압박하였으며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업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한편으로는 식민지 공업화의 모순 즉 일제하의 공업화가 자본·기술·시장면에서 일제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8·15 이후 우리 민족이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외세에 분단·점령당했다는 점이다.

립하였던 미군정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기원,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5, 1986), 347쪽.

- 12) 미군정의 생산통계가 전체 공장을 포괄하지는 못하였고, 2차대전 말기에 이미 생산애로가 나타났으므로 미군정기 공업위축으로 표현되는 것은 실제보다는 과장되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8·15 이후 공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 13) 溝口敏行, 《台灣・朝鮮の經濟成長》(岩波書店, 1975), 100쪽.

〈표 6〉 미군정기 공업의 생산액·사업체·노무자 감소

	일제 말	미군정기	감소율
생산액 ¹⁾ (천圓)	533,194	136,984	75%
사업체 ²⁾ (개)	10,695	4,500	56%
노무자 ³⁾ (명)	225,393	133,970	41%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102쪽; 조선통신사, 《조선경제통계요람》(1949), 75쪽.

1. 생산액의 경우 일제 말은 1939년, 미군정기는 1946년의 수치로서 1939년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사업체와 노무자의 경우 일제 말은 1943년 6월의 수치이며, 미군정기는 1947년 3월의 수치임.

물론 2차대전 이후 생산 위축은 일본·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공업 위축에는 구체적인 요인은 <표 7>에서 보듯이 우선 원자재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1948년 5월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이 중단된 이후엔 전력문제도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요인들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7〉 사업장 휴업 원인(1946년 11월)

	원료부족	기계부족	자본부족	노무부족	기타	합계
휴업체수	272	36	20	1	61	390
비율(%)	70	9	5	-	16	100

*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남조선산업노무력及임금조사》(1948), 94쪽.
총공장 5,24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

첫째로, 8·15 이후 원자재의 결핍, 기계설비의 대체 곤란, 자금의 부족은 일제하의 공업화가 내포하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조선의 공업화가 자생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제 자본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단절되자 조선의 공업시설들은 당연히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

일제하 기계제품 자금률은 <표 8>에서 보듯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조선경

제의 수입의존도는 30%에 달할 만큼 높았다. 기술면에서도 전체 기술자 중 일본인 기술자가 약 80%나 되었으며 얼마 안 되는 조선인 기술자는 하급직이었다. 또한 식민지 공업화의 주요 부분은 군수공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군수품 수요가 사라지자 이 공장들이 새로이 평화용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공장가동이 곤란하였다.

〈표 8〉 주요 기계기구의 국내 자급률(1940년)

품목	자급률(%)
汽罐 및 기관부속품	3.7
원동기	7.1
공작기계	0
제조가공용 기계	19.6
철도 기관차	0
시계 · 학술품 · 전신기	6.2
차량 · 선박 · 자동차 및 부속품	29.5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101쪽.

둘째로, 남북한의 분단은 조선의 생산력을 둘로 쪼개었을 뿐 아니라 그 둘이 갖고 있던 다소간의 상호보완성마저 박탈함으로써 각각의 생산력을 크게 감퇴시켰다. 주로 북쪽에 주요 광물자원과 전력이 편중되어 있었으므로 분단은 남쪽의 공업화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셋째로, 미군정의 정책상 문제점도 미군정기의 공업 위축을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정책은 ‘세계 자본주의의 유지와 재편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유지란 방어적인 차원의 정책으로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팽창과 제3세계 민족혁명의 발발을 저지하는 것이고,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성이란 적극적으로 2차대전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주의세력들의 블록경제를 타파하고 초강국 미국이 자국산업의 우월한 경쟁력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¹⁴⁾

14) 이에 대해선 J. Kolko & G. Kolko, 〈The Limits of Power〉(《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11쪽 참조.

미군정은 미국의 이러한 세계 재편전략에 부응하여 한국에 자본주의질서를 제정비하고 급진적 세력을 억압하며 나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한국경제의 재건이나 성장에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혁명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안정 유지나 약간의 경제개혁 실시에 머물렀을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군정당국은 일본인이 기계시설이나 원료 재고를 멋대로 방매하는 것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으며, 일본인 기술자를 잔류시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귀속공장의 운영에서도 미군정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였는데 관리인의 부정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였고 공장재건보다는 그저 노동자 통제를 물리친 데만 만족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상당량의 소비재 원조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정작 공업 재건에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류의 제공에서는 인색하였다.

나. 공업생산의 회복 추세

그런데 미군정 초기에는 공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회복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월간 생산보고가 미군정에 제출된 것들 중 대표적인 품목의 통계인 <표 9>에 의하면 대체로 1946년 중반부터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⁵⁾ 더구나 생산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중소공장의 생산분까지 감안하면 생산 회복은 통계 이상으로 두드러졌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미군정기를 포함하여 6·25전까지의 생산 추세를 고찰해보면 이러한 회복 경향은 더 분명하였다.

이렇게 생산의 회복이 이루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중소공장이 비교적 활발하게 가동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조나 무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원자재가 보충되었다는 점이다. 식민지적 종속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일제하의 중소공장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대거 등장한 중소공장들이 공업의 피해를 메워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셈이다. 또 다른 한

15) 이러한 경향은 실물통계를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는 다음 기술들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103~114쪽 및 《조선경제연보》(1949), I부-43~47쪽 참조.

편에서는 무역관계를 재개함으로써 생산의 회복이 진전되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전개된 공업생산의 위축과 점진적 회복이라는 두 측면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식민지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해방 이후의 공업위축도 이러한 고통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축의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해방 이후 공업의 위축이 곧바로 공업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이식한 생산력은 일제와 동시에 파멸한 것이 아니라 8·15 이후 여러 가지 애로를 겪으면서도 한국민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점차 한국민 자신의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¹⁶⁾

〈표 9〉 미군정기 주요품목의 생산통계

월 \ 년	밀가루(톤)			면사(톤)		
	1946	1947	1948	1946	1947	1948
1	275	2,171	1,039	70	498	367
2	427	1,925	2,315	87	459	405
3	577	2,598	2,386	156	492	522
4	346	2,424	2,633	235	541	604
5	786	871	1,023	279	636	569
6	2,683	2,571	1,653	295	605	411
7	3,018	1,409	707	344	502	502
8	3,458	269	1,782	403	433	564
9	2,576	452	2,797	476	359	495
10	2,648	3,592	1,993	551	427	539
11	3,160	2,637	-	632	370	-
12	2,082	1,344	-	437	266	-

16) 다만 일제 생산력의 계승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해방 이후 한국 공업 발전의 주요 요인을 일제지배에서 찾는 일련의 시각이나 연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월 \ 년	종이(톤)			못(톤)		
	1946	1947	1948	1946	1947	1948
1	118.5	196.2	225.7	-	77.9	150.4
2	159.5	128.8	391.9	-	77.8	124.8
3	228.0	199.0	533.4	-	66.7	148.9
4	250.8	230.5	435.5	-	126.2	127.2
5	378.5	245.2	166.9	-	141.1	143.2
6	369.4	321.4	186.7	-	161.1	133.4
7	383.4	362.3	205.6	-	173.8	195.1
8	403.8	312.9	185.5	-	140.9	154.9
9	486.2	375.1	208.9	-	189.2	179.1
10	481.1	320.6	184.6	71.3	200.0	178.3
11	380.0	249.2	-	122.6	188.9	-
12	245.3	171.8	-	91.3	161.2	-

* USAFIK, Republic of Korea Economic Summation, No.35, 1948. 9~10, pp.30~32.

(2) 귀속재산의 처리와 자본의 재편

가. 귀속재산의 규모와 접수과정

통상적으로 귀속재산이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하고 한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한다. 즉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침략의 유산인 것이다. 이는 물적 성격면에서 사업체·부동산·동산으로 나누어지고, 좀더 세분하면 기업체·주식·농지·임야·대지·잡종지·주택·점포·창고·선박·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귀속농지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고 귀속사업체는 공장·상업회사·광산·은행과 같은 자본주의적 기업체와 상점·음식점·여관과 같은 자영업체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 기업체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귀속공장의 경우 조사방법과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00~2,500개에 달했으며, 미군정기에 이 귀속공장은 공업 노동자수나 생산액의 1/3~1/2을 차지하였다. 해방 이후 귀속공장의 운영이 민영공장에 비해 더 부진한 가운

데서도 여전히 경제운영상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속기업체 중 공장 이외의 상업·해운업·광업 기업체는 공장수의 1/4 정도였다. 조선의 은행에는 중앙은행인 조선은행과 특수은행인 식산은행·조선저축은행 외에 일반은행으로서 조선상업은행·조흥은행이 있었고 帝國銀行지점·安田銀行지점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은행에 대해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 즉 귀속재산의 비율을 보면 조흥은행에서만 조선인 소유주식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였고 나머지 은행들은 귀속주식이 압도적인 귀속은행이었다.

이처럼 남한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귀속재산의 처리에 대해 미군은 진주 전인 1945년 8월말에 다음과 같은 정책지침을 시달하였다. “일본왕이나 일본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하여, 일본의 대외재산과 항복조건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에 소재하는 일본의 재산은 점령당국에 의해 발굴·보관되었다가 연합군의 결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¹⁷⁾

이에 따라 1945년 9월 8일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9월 10일부터 총독부로부터 사무를 인계받기 시작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와 접수에 착수하였다. 조선은행을 필두로 경성전기·조선식량영단 등 남한 경제의 명맥이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9월 말까지 착착 접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은 9월 25일 법령 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진>을 공포하여 남한내 일본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거래상의 제한을 가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주 직후 미군정의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에 이전시키는 조치는 아니었다. 더욱이 여타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해서선 일단 일본인의 사유권을 인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8·15 이후 식민지 통치권력이 붕괴하고 미군정의 권력도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사유권은 물리적 강제력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고, 따라서 일본인들은 그저 본국으로 철수하기에 급급하였다. 해방이 되자 한국인들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통해 일본인의 기업체와 주택 등을 스스

17) Hojo Holborn,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 Its Organization and Policies*, Infantry Journal Press, 1947, p.214.

로 접수·관리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체의 관리와 처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남한의 사회체제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 때문에 미국은 마침내 일본인재산의 처리를 한국인, 특히 밑으로부터 일본인재산의 접수를 주도한 한국인세력에게 맡기지 않고 자국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 1945년 10월 중순에 모든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이 장악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12월 6일 법령 제33호 제정을 통해 구체화했던 것이다.

법령 33호 <조선내 일본인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은 모든 일본인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이 장악하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는 사유재산의 존중이라는 기존의 국제법적 관례를 깨뜨리면서 단행된 조치였다. 미군정이 이러한 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물론 조선에서의 일본지배를 청산하고 기업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 같은 급진적 운동을 억압하고 미국이 바라는 질서를 수립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나. 귀속사업체의 관리와 불하

미군정은 재산관리처를 설치하여 귀속재산을 관할케 했는데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귀속사업체는 상무부 소속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앞에서 본 법령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접수한 귀속사업체에 대해 관리인을 임명하여 제일선에서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떤 부류의 인물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바로 한국인 자본가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군정당국의 관리인 선정과정을 보면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해당지역 자산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일본인 공장대책위원회나 재산관리이사회 따위의 명칭을 갖는 단체를 결성하여 미군정의 관리인 선정에 크게 개입했던 것이다. 적산기업체를 둘러싸고 관리권을 획득하려는 자산가들과 노동자자치관리위원회의 충돌이 잦았던 해방 직후 상황에서 미군정이 노동자 자주관리를 배제하고 관리인제도를 채택한 것은, 사실상 이 조선인 자산가계층이 기업체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법적·물

리적 뒷받침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한편 미군정하 관리인들의 출신을 조사해보면¹⁸⁾ 직원·주주·해당기업체 관련 상인·미군정 관리·상공업자·기술자·일제하 관리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직원에서 관리인이 된 것은 종업원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가 군정당국에 의해 관리인으로 임명받은 경우나 조선인 사원으로 서 관리인으로 임명받은 경우가 있지만 일반노무자 출신이 관리인이 될 수는 없었고 조선인 상급직원이라야 관리인이 될 수 있었다.

주주출신 관리인들은 소액주주도 있었고 대주주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토대로 쉽사리 관리인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 귀속기업체 중 조선인 출자회사의 비중이 약 1/4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주주출신 관리인들이 큰 비중을 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출신이 지배적이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중소기업의 경우엔 직원과 같이 연고있는 인물들이 많았고 대기업의 경우엔 외부로부터 들어온 관리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귀속기업체와 직접적인 연고가 있었던 부류는 직원·주주뿐이고 관련 상인들이 그나마 간접적인 연고가 있었을 뿐, 나머지 미군정 관리 등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자금력이나 정실 등에 의해 관리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식민지 수탈의 산물로서 조선민중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할 적산기업체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리인이 임명되고 그들이 기업체를 장악해 간 것은 해방 이후 경제질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친일세력 중 일부는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새롭게 친미세력이 형성되어 갔다.

한편 관리인은 법적·형식적으로는 미군정에 귀속된 기업체의 운영을 위임받은 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다. 군정당국은 마음대로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이권이 큰 대기업체에선 관리인 교체가 자주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관리인들은 이러한 신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와 같은 성격을

18) 이에 대해선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푸른산, 1990), 126~133쪽 참조.

지니고 있었다. 특히 불하시에는 관리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인은 소유자본가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해 갔던 셈이다. 1946년말 이래 기업체 임대차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의 후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임차인은 법률적으로도 기업경영권을 강력하게 장악한 존재로서 바로 관리인의 발전된 모습이었다.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고 관리인·임차인에 의해 운영되던 귀속사업체는 점차 불하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46년 2월 미·소공동위원회에 즈음하여 일본인재산 중 농지·도시주택·소규모 사업체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하였는데,¹⁹⁾ 실제로 귀속재산 불하가 시작된 것은 1947년 7월경부터였다.²⁰⁾ 이렇게 하여 미군정기에 불하된 귀속재산의 규모는 <표 10>과 같다. 이를 정부수립 이후의 전체 귀속재산 불하와 비교하면²¹⁾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표 10> 미군정기의 귀속재산 불하

종 류	1945년 8월 15일~1948년 10월 12일까지의 누계			
	사정 건수		불하 완료	
	진행중	완료	건수	금액(백만 원)
동 산	1,173	961	416	66
기업체	1,434	660	239	1,109
주 택	5,249	2,877	412	347
선 박	291	230	92	67
물 영 ¹	187	86	59	1,021
기 타	241	65	61	1
합 계	8,575	4,879	1,279	2,611

* USAFIK, Republic of Korea Economic Summation, No.35, 1948. 9~10, p.7.

1. 물영은 물자영단이 매각한 일본군 재산을 의미함.

19)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6년 2월 20일.

20) 단 쉽게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동산은 이미 일찍부터 매각 처분되어 1947년에 가면 이미 그런 재산은 다 처분되고 남아 있지 않았다.

21) 정부수립 이후의 귀속재산 불하 통계는 김기원, 앞의 책, 156~159쪽 및 300~305쪽 참조.

더구나 미군정기의 기업체 불하는 미군정이 끝나갈 무렵에 집중되었다. 이는 미군정이 국제법적으로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고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미군정이 자신의 통치기간 동안 귀속기업체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기의 귀속기업체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업체는 중앙에서 관할하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에서 관할하였는데, 미군정기의 불하기업체 중 중앙직할 기업체는 극장·토건회사·백화점 등 공장이 아닌 사업체가 대부분이었고 지방관할 기업체로서 불하된 공장도 대개 소규모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기의 귀속사업체 불하는 그 양적인 비중에서보다도 한국정부 수립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의 원형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미군정기 귀속사업체의 접수—관리—불하라는 일련의 과정은 남한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재편성하는 8·15 이후 경제재편의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이었고, 이는 정부수립 이후의 불하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어졌던 셈이다.

다. 미군정기 자본의 재편

일제 말 조선에서는 공업화=자본주의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고 그와 동시에 독점자본의 지배력도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자본주의는 8·15 이후에 백지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유산인 식민지적 자본주의화의 진전을 계승한 것이었다. 여기서 일제하의 자본주의와 해방 이후 자본주의를 매개·연결시킨 것이 전술한 귀속사업체였던 셈이니 이의 처리 방식이 미군정기 자본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에 의해 접수·관리된 귀속사업체는 미군정이라는 국가기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단 국가자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미군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국가자본의 성격이 부르주아적인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그 때문에 미군정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강력하게 부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 자본의 국유화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자본이 성립하

기는 했지만 그것은 한국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외국자본의 국유화라고 할지라도 혁명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성립 초기에 민족부르주아지가 경제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르주아계급을 창출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군정이 취한 국유화조치의 이런 성격 때문에 좌익세력의 정치적 거세와 민간자본의 성장으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질서가 정비되자 미군정 및 그 뒤를 이은 한국정부는 이 국가자본들을 신속하게 민간에 불하하였다. 다시 말해 8·15 이후 한국인 민간부르주아지가 취약하고 좌익세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발호하여 민간부르주아지 스스로 일제자본을 처리하거나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했던 일정 기간 동안 과도적으로 미군정이 위로부터 일제자본을 국가자본으로서 관리했던 것이다.

그러면 미군정기의 귀속기업체는 어떤 자본운동 양태를 나타내었는가. 귀속기업체 중 지방관할업체는 대개 소규모로서 미군정기 후반기에 가면 그 중 상당수가 사실상의 사적 자본상태인 임대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렇지 않고 관리인체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미군정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었다. 따라서 미군정이 적어도 중앙직할로 분류하여 꽤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업체들만이 그런대로 국가자본이라고 칭할 만한 상태였던 것이다.

〈표 11〉 운영 형태별 적산공장¹⁾

운영형태	공장수	종업원수	1공장당 평균 종업원수
운영관리 중	1,312 ²⁾	36,532	27.8
임대차	322	5,470	17.0
불하	26	364	14.0
중앙직할	82	46,194	563.3
계	1,742	88,560	50.8

* 조선통신사, 《조선경제통계요람》(1949), 79쪽.

1. 1947년 12월 말 현재 상무부 생산위원회 조사임.

2. ‘운영관리중’ 공장은 지방관할로서 임대되거나 불하되지 않은 공장임.

중앙직할 기업체들은 원래 식민지시대 때 조선에 진출한 일본독점자본이었다. 이 기업들은 <표 11>에서 보듯이 귀속공장 전체에 대한 공장 숫자에서는 4.7%이지만 종업원 수에서는 52%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 평균 종업원수도 다른 공장들을 압도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일제하에선 독점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기업을 훨씬 능가했지만 해방 후에는 <표 12>에서 보듯이 이런 공장들의 생산성이 크게 감퇴하여 사영공장에 못미치고 있다.

미군정기의 공업 위축에서 식민지적 종속의 정도 즉 일본인자본이나 일본인기술자의 비중이 큰 공장일수록, 또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생산 위축이 더 심하게 나타났으므로 귀속 대공장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원래 독점자본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생산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이윤을 취득하는 것인데 미군정기의 귀속 대공장은 이와 같은 운영 부진으로 인해 독점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독점자본으로서의 지배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표 12>

운영 형태별 공산액

(단위 : 천 원)

운영형태	공산액	1공장당 공산액	1노동자당 공산액
중앙직할	11,636,925	63,590	308
지방관리	6,790,732	10,627	266
私 營	34,219,483	11,460	505
계	52,647,140	13,825	402

*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1949), I부-42~43쪽.

요컨대 미군정기 일본인자본의 재편은 중소 일본인자본의 경우엔 형식적으로는 국가자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 사적자본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일제하에서 강화되어 가던 대규모 독점자본은 미군정기에 와선 운영이 부진해지고 독점자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였다. 다만 이 대규모 공장들에게는 비교적 우수한 기계설비와 집중된 노동자가 있었으므로 장차 독점자본으로 복원될 잠재력은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미국의 원조를 제공받는

등 종속구조를 재정립하고 정부수립 후 불하를 통해 사적자본으로 전환하면서 그 독점력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이다.

한편, 귀속공장이 아닌 사영공장의 활동은 어떠했던가. 2차대전 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되었던 중소 조선인공장들이 8·15 이후 다시 부활하였으며 일제의 억압이 사라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고무공업과 같이 일제하에서 조선인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소자본으로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중소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이러한 중소공장 활성화는 8·15 이후 공업생산의 전반적 위축을 타개하고 생산을 회복시켜 간 주요 동력이었다. 이 중소공장들은 자체의 경쟁논리에 의해 다수가 몰락하기도 했지만 성장하여 새로운 독점자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해방 이후 자본재편 과정에서 자본가의 내부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인 철수에 의해 자본가의 공백이 생김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이 자본가로서 새롭게 부상하였다. 귀속기업체의 관리·불하과정에서 많은 한국인 상업자본가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였으며 일제하에서 소규모 개인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기업주들이 자신의 기업보다 더 큰 일본인 기업체를 떠맡음으로써 자본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과거 일제의 지배질서하에서 중간계층 또는 매판적 동맹자의 지위에 있던 조선인들이 8·15 이후 신흥지배계급으로 부상해 간 것이다. 반면에 일제 말에서 해방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화 물결 속에서 그 흐름을 타지 못한 순수 지주들은 몰락했으며, 일제 말 소규모 상업이나 금융업에라도 진출했던 지주들은 8·15 이후 보다 용이하게 본격적인 자본가로 발전하여 갔다. 또 오늘날 재벌들의 자본축적 역사를 보더라도 상당수의 재벌들이 미군정기에 주력 기업을 창설하였으며 귀속재산 처리와 무역을 통해 축적기반을 확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가. 노동자의 존재 양태

일제하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팽창하던 노동자계급은 해방 이후 전술한 생산위축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수적으로 보면 공업부문의 경우 1943년 6월 현재 공장 8,998개에 노동자가 19만 8,849명이었으나 1946년 11월에는 4,996개 공장에 노동자 숫자는 11만 3,85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 노동자수의 감소는 생산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대규모 공장에서 현저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귀환동포와 더불어 엄청난 실업자군을 형성하였다. 정확한 실업자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고 전체 노동력의 10~30% 정도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²⁾ 실업자들은 물론 갖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취업자들에게도 실직의 위험, 실질임금 수준의 폭락, 식량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었다.

물론 <표 13>에서 보듯이 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노동력의 80% 가까이가 농업부문에 포진하고 있는 농업중심 사회였고, 근대부문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부문의 조직된 노동력은 해방 이후 사회경제질서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노동자들의 생활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임금수준에서는 1939년을 100으로 잡을 때 1946년이 43, 1947년이 37로 현저히 열악해진 상태였다. 공장규모별 노동자 구성을 보면 1946년 11월 현재 5,249개 공장 중 91%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였으며 공장 당 평균 노동자수는 2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²³⁾

22) 金三洙, 〈朝鮮における米軍政期の勞働政策と勞働運動(一)〉(東京大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 1991년 1월), 94~96쪽.

23)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 부-215쪽 및 III부-154쪽.

〈표 13〉 산업별 실업자 및 취업자

산업·직종	1946년 실업자 ¹	1949년 취업자
공업	187,955	265,753
광업	122,598	33,815
상업	111,347	370,477
농업	210,287	6,270,510
운수업	39,965	74,162
토목	141,784	통계 無
어업	통계 無	89,069
공무원·기타	287,787	856,749
합계	1,101,723	7,960,535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부-203·204쪽 및 《경제연감》(1949), I부-157쪽.

1. 실업자의 소속 산업은 실업 전 소속 산업을 말함.

그리고 소학교 이하의 학력 수준인 노동자가 전체의 84%이며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노동자도 28%였다. 미숙련노동자가 전체의 93%에 달하였으며 전체 노동자의 4% 정도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미군정의 노동정책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제1기(1945년 9월~1946년 6월)의 ‘사실상의 단결 금지’→제2기(1946년 6월~1947년 4월)의 ‘노동조합 法認可 파업금지’→제3기(1947년 4월~1948년 8월)의 ‘사실상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 금지와 대한 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육성’으로 변천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²⁴⁾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민중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진 데 반해 지배계급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미군정이 취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와 더불어 해방 후 자본주의 질서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⁵⁾

24) 金三洙, 〈朝鮮における米軍政期の労働政策と労働運動(二)〉(東京大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 1991년 3월), 201쪽.

한편 中尾美知子·中西洋, 〈米軍政・全評・大韓勞總〉(東京大經濟學會, 《經濟學論集》, 1984년 1월)은 제1기의 특징을 ‘노동조합 용인+노동쟁의 억압’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25) 전후 미군점령하의 일본에서 단행된 농지개혁·재벌해체·노동개혁과 한국의

점령초기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1945년 10월 9일의 법령 11호, 10월 30일의 법령 19호, 1945년 12월 8일의 법령 34호에 의해 정비되었다. 이에 의해 일단 일제하에서와 같은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에 의한 파업을 금지하고 강제 중재제도를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당연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법령 55호). 이런 조치들은 결국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금지하고 생산현장에서의 좌익세력 조직화를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6년 5월 법령 72호 <군정위반에 관한 범죄>에 의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고 좌익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1946년 6월 일본의 GHQ(미군 점령사령부)로부터 勞動諮問委員會 朝鮮小委가 파견되어 오면서 이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이들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체제내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한때 일부 노동쟁의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대표권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적어도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노동자문위원회 조선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파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시켰다.

그리고 미군정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통합대상이 아니라 배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면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6년 9월총파업과 1947년 3월 총파업에 나서고 미군정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미군정은 우익 반공세력이 주축이 된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여 1948년에 이르면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유일한 합법노조세력으로 자리잡는다.

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

이상과 같은 영악한 경제적 조건과 미군정의 노조억압정책하에서 노동자

이런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의 노동정책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보수적인 한국에서의 노동정책이 갖는 특징에 주목할 만하다.

들은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독립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은 1946년 9월과 1947년 3월의 총파업이었지만 <표 14>와 같이 그밖에도 노동쟁의는 자주 발생하였다.

<표 14> 미군정기 노동쟁의 실태

연 도		1945년 12월	1946년 ¹	1947년	1948년
건 수		1	170	134	37
참가인원		308	57,434	35,210	21,389
원 인 건 수	임금인상	1	107	16	5
	공장폐쇄 반대	-	1	-	-
	해고반대	-	28	35	14
	노동시간 단축	-	1	1	-
	감독자의 배척	-	16	4	2
	조합승인	-	4	1	-
	휴일임금 지불	-	4	2	-
	기타	-	9	75	16
파업인원 (건수)		308 (1)	36,400 (80)	24,422 (77)	54 (3)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1949), IV부-185쪽.

1. 1946년 11·12월의 노동쟁의 건수는 미상이므로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귀속재산의 처리에서 미군정의 접수·운영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반대 축을 형성한 것이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 자본-노동관계에 커다란 격동을 초래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사업체를 접수하려는 움직임은 8·15 직후 곧바로 시작되었다. 일본이 조선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따지고 보면 일본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조선인들을 착취한 소산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고, 따라서 일본인 사업체의 조선인 종업원들은 8·15 이후 즉각적으로 일본인 소유주를 축출하고 스스로 그 사업체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업체 접수는 일제축출이라는 성격 외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체 재산을 보호할 필요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이기도 하였다. 패전에 따라 일본인들이 자신의 사업체 재산을 처분하여 일본으

로 귀환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업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노동자들의 일본인 사업체 접수가 일어났던 것이다. 다만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미약했던 곳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주관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산수당을 요구하거나 공장의 기계와 원료를 팔아서 생계비를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주로 공장에서 전개되었지만 상업회사·운수회사·극장에까지 파급되었으며 농민들의 일본인농지 접수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관리운동은 8·15 직후의 발흥기→미군진주 이후 법령 33호 공포시점(1945년 12월)까지 미군정과의 공존대립기→법령 33호 공포 이후 1946년 상반기까지의 몰락 및 저항기라는 변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자주관리운동이 전개된 기업은 물론 일본인 기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친일대자본가의 사업체에서도 치열한 자주관리운동이 전개되었다. 식민지 통치하에서 일본인에게 협력하여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 자본가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한국민중의 공격대상이었던 것이니, 이는 해방 후의 민족적 지상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한편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사업장별로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로, 사업체를 접수·관리한 주체면에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그 사업체의 노동자가 단독으로 접수·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일부 사업체에선 그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접수·관리하거나 사업체관리를 지시·감독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자주관리의 추진 주체 면에서 상급직원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자주관리운동’과 생산직노무자 또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밑으로부터의 자주관리운동’이 있었다. 위로부터의 자주관리운동은 관리위원과 일반노무자 사이의 관계가 맹아적인 자본가-노동자관계였던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의 노동자자주관리에 포함시키기는 힘들고 해방 후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이전의 자본-노동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체제 내적 자주관리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밑으로부터의 자주관리는 단지 기업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자연발생적 운동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나 인민위원회 등 좌익세력과의 연계하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있던 운동으로 나누어졌다. 전자의 발전방향은 기

업 내외의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후자의 경우는 바로 자본-노동관계를 위협하는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이었다. 이런 자주관리 유형 중 일부 거대기업체에서는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이 나타났고, 따라서 자주관리운동의 귀추는 경제체제 재편의 향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관리운동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전술했듯이 관리인제도를 채택하면서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체제 내적 자주관리운동은 미군정의 통제하로 포섭하려고 하였다. 물리력이 취약한 노동자들은 이런 미군정의 조치를 끝까지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미군정의 기업체 접수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일단 받아들인 미군정의 관리인에 대해 축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혁명적 성격이 강했던 자주관리일수록, 그리고 부임한 관리인이 친일파일수록 그런 분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46년 중반에 이르면 미군정의 물리력과 자주관리운동 자체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운동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주관리운동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1946년 총파업을 비롯한 전국적 규모의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그런 투쟁들이 모두 진압된 후에도 자주관리운동의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헌법제정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제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흐름은 사회운동에 대한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탄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장착·강화되고 노동자의 발언권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업체내에 자본-노동관계가 확고하게 재정립된 것이다.

5) 금융·재정과 무역·원조

(1) 미군정기의 금융·재정

해방이 되고 얼마 동안은 일제하의 온갖 통제물자가 일시에 시장에 범람함에 따라 물가가 하락한 일도 있었지만, 곧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여 다음

〈표 15〉에서와 같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한 것은 통화팽창, 생산·무역의 감소, 인구증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서울시 도매물가지수

연 도	1936년을 100으로 기준
1944년	241
1945년(8~12월)	2,817
1946년	13,478
1947년	40,203
1948년	72,516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1949), IV부-159쪽.

식민지하 전시경제의 1930년대 후반부터 통화량은 급격히 팽창하여 1944년에는 1936년의 15배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이 시기의 물가상승률은 겨우 200%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일제의 강력한 물가통제에 의해 물가상승이 잠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이 해방 이후 폭발된 셈이다. 게다가 8·15 직후 일본인들의 철수와 관련하여 일제가 대량의 자금을 창출하였으며, 미군정기 동안에도 재정적자 등에 따라 약 4배에 가까운 통화량 팽창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다 앞서도 살펴본 바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생산감소, 급격한 인구증가, 일제하 억압되었던 잠재수요의 폭발, 경제적 혼란을 틈탄 매점매석 등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간의 저축성향이 하락하고 금융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일단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은행들은 단기금융에 치중하고 중장기 산업금융은 미미한 상태였다.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은 통화신용에 관한 자주적인 통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政府貸上金을 준비금으로 하는 사실상의 무제한 발행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군정은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자유여신한도제를 실시하여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요컨대 미군정의 금융정책은 금융통화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수요를 통화남발에 의해 조달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다소 진정시키기 위해 자유여신한도제나 여신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머물고 산업부흥을 위한 금융정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1945년 10월부터 총독부의 재정회계를 봉쇄하고 출발한 미군정의 재정은 항상 세출이 세입을 능가하는 적자재정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조선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전되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官業費·치안비·지방행정비가 주된 항목이었던 반면에 산업진흥을 위한 상무부와 농무부의 지출은 미미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정치·사회적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 재건에는 소홀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세입에서는 조세수입의 비중이 얼마 안 되는 반면에 관업수입이 큰 비중을 점하였다. 특히 연초·식염 및 인삼에 대한 전매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정부세입의 절반을 점하였다. 낮은 조세수입 비중은 생산의 위축과 세정의 미비에 따른 것이었다. 조세 중 稅收寄與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소득세였고 그 다음이 주세인 실정이었다.

미군정하의 세법개정은 매우 빈번하였는데 지방세와 관세는 6차에 걸쳐 개정되고 소득세는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제 말기에 무질서하게 확대되었던 조세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군정의 세수증대 노력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2) 미군정기의 무역·원조·남북교역

식민지시대 일본·조선·만주의 재생산경제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국은 새로운 대외경제관계를 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의 무역은 해방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긴급물자를 수입하는 미군정청의 관영무역과 민간무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표 16>에서 보듯이 이 중 미국의 원조에 근거한 관영무역이 압도적이었다.

〈표 16〉 미군정기의 무역 추이(1946년 1월~1947년 12월)

무역형태	수입(달러)	수출(달러)
군정무역	198,850,240	-
過政무역	21,500,000	5,399,909
민간무역	4,513,062	2,316,466
총계	224,863,302	7,716,375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 부-127쪽.

미군정이 민간무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월 법령 39호 〈대외무역규칙〉을 제정하고서부터였다. 그리고 1947년 과도정부 입법위원의 성립에 따라 법령 149호를 공포하면서부터 무역에 관한 법령과 규칙이 그런대로 정비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무역을 면허제나 허가제로 하고 물물교환을 법제화함으로써 무역통제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일제하에선 일본과의 무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반면에 8·15 이후엔 일본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대신 홍콩·중국·미국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틈타 밀무역도 꽤 성행하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물자부족 상황에다가 1할을 넘지 않는 낮은 관세율은 무역업자에게 폭리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니, 오늘날 재벌의 상당수가 그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방 이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국원조는 점령지의 긴급구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GARIOA원조였다. 이 GARIOA원조는 미군정이 끝날 때까지 3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도입 물자는 식료품·의류·의약품·농업용품 등 주로 해방 이후 경제적인 파탄을 완화하고 사회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이 원조의 총액은 3년 동안 4억 1,000만 달러에 달하였고, 그 중 식료품이 40%, 농업용품이 17%, 의류가 10%를 점하였다. 그리고 GARIOA 이외에 1947년 2월 해외청산위원회(OFLC)에서 차관형식으로 한국에 할당한 잉여물자가 2,500만 달러였고, 1945년 9월에서 1946년 6월 사이에 미군이 보유했다가 한국에 이양한 잉여물자가 1억 4,100만 달러였다.²⁶⁾

26)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박영사, 1962), 48~50쪽.

물론 미국의 원조는 2차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편한다는 커다란 전략속에 제공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을 부흥하는 데 필요한 생산재 원조가 부족했다든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가 적어도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8·15 직후 원조에 의한 수입을 제외하고는 무역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남북지역간 교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남북한의 복잡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5·14 단전이 단행된 1948년 중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1949년 4월 남한정부가 <남북교역 정지에 관한 건>을 공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된 남북교역을 방치하다가 1946년 12월에 와서 비로소 <조선연안교역의 감독>이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문진·용호도·여수 등 3개소에 화물검사소를 설치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선박을 검사하되 허가품목은 반출입이 허용되었다. 또 1947년 8월의 법령 149호 <대외무역규칙>에 의해 대외무역과 남북 지역간무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표 17〉

남한의 전력공급 상황

(단위 : KW)

연도	이북 受電	원조 발전船	국내 발전	합계
1946	51,495	-	25,684	77,179
1947	62,993	-	31,614	94,607
1948	23,447	9,520	46,258	79,225
1949		15,156	59,629	74,785

* 조선은행 조사부, 《산업총람》(1954), 68쪽.

남북지역간 교역은 정식교역과 밀교역으로 나누어졌는데 밀교역은 법적으로 교역을 금지하거나 거래의 양적 제한이 설정된 품목들의 교역이었다. 1948년도 남북간의 교역물자를 보면 대북 반출품에선 생고무·광목·양철·면사·작업화 및 전구가 대종품목이었고 대북 반입품목에서는 전력 이외에 비료·카바이트·시멘트·마른 명태·가성소다 등이 주된 품목이었다.

대북 반출품목 중에는 생고무처럼 남한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다시 북한으로 반출하는 중계무역 상품도 있었지만 대개는 남한의 경공업제품이나 소형 기계기구제품이었고 이들과 북한의 화학공업제품이나 해산물 등이 서로 거래되었으니 이는 바로 남북간 산업분포를 반영한 것이었다. 북한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이 남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7>과 같았다.

〈金基元〉

3. 미군정기의 문화

1) 문학

(1) 해방공간의 소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주적인 통일 민족국가 수립, 토지개혁, 친일잔재 청산 등의 깃발이 내걸리고 한국 사회는 대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파괴와 복구 또는 창조의 힘찬 맥동이 꿈틀대는 가운데 구성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고와 삶을 재조정해야만 하였다. 그 같은 재조정에는 현실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소극적인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일제 파시즘의 강압에서 벗어나 역사 주체로서 복권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역사를 열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이 같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재조정의 활기가 넘치는 해방공간은, 혼란스러웠지만 충만한 가능성으로 미래를 향해 밝게 열려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소설 대부분의 한복판에는 저마다의 지향을 담아 싼고 흐르는 ‘길’이 가로놓여 있다. 그 길들의 의미를 살피면 이 시기 소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蔡萬植의 <歷路>(1946), <民族의 罪人>(1948), <落照>(1948), <妻子>(1946)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민족적 자기비판론과 현실비판, 허무주의의 길이다.

채만식은 일제 말기 <여인전기>(1941), <홍대하옵신 성은>(1942) 등의 친일적 작품 몇 편을 발표하고 몇 번 시국강연회에 나가 강연함으로써 친일의 욕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이 되자마자 친일잔재 청산이 민족적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일제하 친일행위자의 법적 처벌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문학계에서는 자기비판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는데 대부분 문인들은 혼란스러운 혁명적 상황에 휩쓸려 또는 이에 편승하여, 자기비판의 과제를 회피하거나 추상적 일반화를 통해 구체적 친일행위를 無化시키고자 하였다. 자기반성의 결핍을 지적하며 문학자의 비성실성을 질타하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의 반영이다.¹⁾

채만식만이 거의 유일하게 자기비판에 충실하고자 했던 문인이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든 작품들에서 우리는 친일의 죄의식에 짓눌려 고뇌하는 한 지식인 작가의 내면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 또한 철저하지는 못하였으니 결국은 “민족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민족적 자기비판론으로 가 닿고 말았다. 이처럼 자기비판의 과제와 씨름하는 주인공의 고뇌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현실의 深部를 탐사하는 리얼리스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민중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의 혼란, 경제 혼란, 외세의 침탈 등 당대 현실의 핵심 요소들을 전형적으로 반영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채만식의 소설을 통해 비로소 해방공간의 현실이 그 실체를 얻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폭넓고 깊이 있는 현실 재현이며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그러나 채만식은 끝끝내 친일의 죄의식,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타락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주체와 방법을 현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다시금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만다. 과거와 현재를 송두리채 무화시키고 자라나는 소년들의 세계, 미래만을 가치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소년은 자란다>(1949)의 희망 아래에는 미래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을 상실한 자의 허무의식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로 출렁대고 있는 것이다.

친일의 죄의식으로 고뇌한 채만식의 자기비판을 뒷전으로 밀어내며 이 시

1)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한국현대소설사론》, 새미, 1996).

기 소설을 지배한 것은 世界觀上의 자기비판이다. 지금은 건설기라는 것, 그러므로 과거의 呪縛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역사 창조의 과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세계관을 자기비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같은 자기비판을 다룬 작품들이 가장 많이 씌어졌다. 李泰俊의 〈解放前後〉(1946), 池河連의 〈道程〉(1946), 尹世重의 〈十五日後〉(1946), 安懷南의 〈暴風の 歷史〉(1947), 李根榮의 〈濁流 속을 가는 朴教授〉(1948)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을 지배하는 것은 빛나는 미래의 도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그 같은 미래 실현을 향한 적극적 자기 투신이다. 당연히 낙관적·낭만적 열정이 작품을 뒤덮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객관 현실의 구체적 탐구가 크게 제약당하였다. 이들 작품의 기본 틀로 자리잡고 있는 술한 이분법들이 이러한 사정을 증거한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 배제/미래 先取, 봉건/반봉건, 순수문학/민주주의 민족문학, 선/악, 순결/불순, 청/탁, 노동자·농민/지식인, 新/舊 등등인데 이로 인해 객관 현실의 단순화·추상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되었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이 같은 이분법에 실려, 그것의 힘에 이끌려 조금의 망설임도 회의도 없이 미래를 향해 뚫린 신작로를 거침없이 나아간다. 소설성의 질식인 것이다.

許俊의 〈殘燈〉(1946)이 또 하나의 길을 보여준다.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돌아오는 한 지식인의 귀국길 여로가 그것인데, 그 여로를 따라 일본 난민들의 비참한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북조선의 실정 등 해방 공간의 현실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잔등’ 이미지가 담고 있는 무한 포용의 인도주의와 겸허함이다. 그 인도주의는 단 하나의 피붙이인 아들을 옥에 가두고 마침내 죽게 한 원수의 비참한 모습까지도 안쓰러운 눈물로 바라보게 만드는 무한 포용의 보살심이며 그 겸허함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보상도 거절하는 철저한 성격의 것이다. 노인의 지극한 겸손과 넉넉한 보살심처럼 잔등 불빛이 “황량한 폐허 위 오직 제 힘만을 빌어 퍼덕이는 한 점”으로 더없이 따스하고 넉넉하게 명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격동의 해방공간을 혼란스레 채웠던 온갖 술수와 음모·모략을, 그것들을 낳은 무한팽창의 욕망과 조금함과 경솔함을 근본에서 비판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해방공간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귀환동포문제였다. 무려 200만 명을 넘는 해외동포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식량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해방의 흥분이 가시면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당연히 이 문제를 다룬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탄광징용에서 귀국한 安懷南의 〈불〉(1946)을 비롯,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을 그린 廉想涉의 〈三八線〉연작(1948), 金萬善의 〈鵬綠江〉(1946), 허준의 〈잔등〉(1946), 金東里의 〈穴居部族〉(1947), 桂鎔默의 〈별을 헨다〉(1946)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상섭의 〈삼팔선〉연작이다. 이 연작은 중국 안동에서 살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염상섭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한 것이다. 해방 직후 중국·북한·남한의 동요하는 현실이 치밀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들 작품을 꿰뚫는 길은 그 같은 현실을 엮는 끈이면서 식민질서의 구속에서 풀려나 조선인으로 되태어나는 재생의 고행길이고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든 사람살이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염상섭 특유의 시각을 확인시키는 원형적 공간이기도 하다.

김동리의 〈驛馬〉에서 또 하나의 길을 확인한다. 무대는 화계장터이다. 화계장터는 경상·전라 양도를 가르는 섬진강의 경상도 쪽, 쌍계사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세 갈래 길이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 와 만나는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헤어져 떠나가는 곳이다. 그러나 주막이나 놀이판 장터에서의 만남은 떠나감을 전제한 것이기에 일시적인 것, 길을 따라 걷는 끝없는 떠나감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만이 맺어진다. 일시적인, 스쳐 지나가는 만남만을 허용할 뿐인 이 끝없는 떠나감의 길을 작품 구성의 중심에 놓은 이 작품의 세계는 두 가지 점에서 무시간적이다. 하나는, 길을 따라가는 끝없는 떠나감의 흐름만 있을 뿐 전후의 변화가 없다는 점, 사람들은 물론 늙어가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 끝없는 떠나감이란 본질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같은 끝없는 떠나감이 운명적이라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운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운명의 극복이 아니라 운명에”²⁾인 것

인테, 살을 풀기 위해 마련된 문화적 장치인 승적에 이름을 올리거나 책장사하기도 제어하지 못한 초월적인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 같은 감각 속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개별성은 의미를 잃는다. 운명에 순종하는 삶이란 회색의 본질만이 도드라질 뿐이다. 당연하게도 이 같은 운명애의 세계에서 경험적 시간은 무화되어 무시간성으로 응결되고 만다. 이처럼 경험적 시간이 무화되는 김동리 문학에서는 해방공간의 격동하는 현실상조차 한갓 스쳐 지나가는 풍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홀로 된 두 남녀가 만나 결합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주제를 담고 있는 〈혈거부족〉의 경우가 이를 증거한다. 김동리 문학의 특성은 해방공간의 역사성 너머, 한민족의 원형적 삶을 문제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역사성에 근거하며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여타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黃順元의 〈목넘이 마을의 개〉는 한민족의 생명력을 실어나르는 길을 보여준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광기 서린 구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새끼를 낳아 퍼뜨리는 한 마리 개가 주인공이다. 분단이 확정되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국가로 양분되고 대립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민족상잔의 가능성조차 드러내던 때, 이 같은 한민족의 생명력 강조는 시련을 뚫고 끝내 나아갈 것이란 희망의 확인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은 해방된 서울의 세종로 네거리 비각 앞에 등장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지닌 갓난이할아버지의 넉넉한 인간스러움을 해방공간의 현실에 대비시킴으로써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근본으로 비판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

한편 특이한 경력의 작가 金學鐵의 〈龜裂〉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만난다. 김학철은 중국의 홍군과 연대해 항일전의 제일선에서 싸웠던 조선의 용군 지대장 출신이다. 전투에서 다리 하나를 잃은 몸으로 해방 후 귀국, 서울 문단에 자신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몇 편의 단편을 발표, 큰 주목을 받았다. 〈균열〉은 그 중 대표작이다. 이 작품의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낙천성

2)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일지사, 1979), 161쪽.

이다. 긴박한 전장의 한복판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팔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일제 말기의 소극적 삶 또는 친일의 과오 때문에 주눅들고 해방 후의 격동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문인들은 이 생소한 낙천성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해방 후에 있었던 어느 작품합평회에서 이 작품을 단순한 르포르 펴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해방공간은 적극적인 자기 개선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린 가능성의 시기였지만, 그 안쪽에는 무수한 변절의 행적을 품고 있었다.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인데, 그러한 변절의 행적들에 대비되어 金廷漢의 비판과 지조의 문학이 빛난다. 〈秋山堂과 곁 사람들〉(1940)을 마지막으로 붓을 꺾었던 김정환은 해방공간에서 〈獄中回甲〉(1946)과 〈설날〉(1947)을 썼다. 외세의 침탈 아래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열망이 억압당하는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그 안쪽에 깃들인 것은 타락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신이며 상황을 뒤따르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지조의 정신이다.

증언·비판·지조의 문학인 김정환 문학의 의미가 해방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근현대사의 파행적인 역사 전개는 그 갈피갈피에 무수한 변절의 욕된 기록들을 새기며 이어져 왔다. 문학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니, 예컨대 15년 전쟁³⁾기간 동안 황도사상의 마권에 휩쓸리지 않은 문인의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민족주의문학진영, 프로문학진영을 막론하고 온통 무너져 내려 친일의 욕된 명부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다. 해방 직후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 토지개혁과 함께 친일잔재 청산이 3대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이를 따라 친일 문인의 자기비판 문제가 무엇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급선 과제로 떠오르고 모두가 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지부지되고 만 가장 큰 요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비판의 짐을 지지 않아도 좋은 문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범자들이 갖게 마련인 사실 자체의 무화 또는 망각의 심리가 압도적으로 개입해 들어왔던 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인의 자의식이 만들어낸 자기합리화의 욕망도 크게 작용

3) 만주사변(1931)에서 1937년의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의 종전(1945)에 이르기까지의 15년간을 전쟁상황의 연속으로 보아 15년전쟁이라 지칭한다.

했을 것이다. 이처럼 일제 말기에 작품활동을 한 대부분의 문인들이 관련되었지만 그럼에도 진지한 비판과정 없이 묻혀버리고 만 친일의 역사에서 김정한 문학은 벗어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김정한 문학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할 것인데, 해방 이후의 문학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김정한 문학은 문학사의 한 측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광의 의미를 지닌다.

해방공간이 끝나면서 이 시기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내적 형식이었던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길은 소멸한다. 그 빈자리를 우울한 체념적 비판의 언어가 채운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은 염상섭의 〈曉風〉(1948)이다. 염상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한 독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갈수록 굳어져 가는 남북 분단의 현실, 한국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나아갈 방향성을 잃고 깊게 흔들리고 있는 동요와 불안정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절망감을 애써 억누른 채 올린 안타까운 비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2) 해방공간의 시

해방공간은 해방의 벅찬 환희와 민족의 앞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밝은 목소리가 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이어 해방과 함께 부여된 세 과제, 곧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친일잔재의 청산, 토지개혁을 둘러싼 정치투쟁에 휩쓸려 그 같은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디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신문학》, 1946년 3월, 128~129쪽).

목가적 공간 속에 유토피아를 향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던, 그 점에서 근본주의자였던 辛夕汀의 〈꽃덤불〉이다. 이 작품은 ‘조선문학자전국대회’(1946. 2. 8~9)에서 낭송되었다. 아직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이 강력한 정치성의 시 한 편에 해방공간 시문학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꿈과 의지의 문학정신은 죽음조차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며 어기차게 앞길을 열어나가는 동력을 내부에 지니고 있으니, 당대인들은 그것을 혁명적 로맨티시즘이라 불러 기렸다. 李庸岳·兪鎮午·배인철·吳章煥·林和 등이 여기에 속하는 시인들이다.

해방공간의 급박한 역사 전개와 함께 혁명적 정치성의 시가 늑실대며 흐르는 이 정치의 시절에도 자연의 순환과 호흡을 함께 하는 서정이 꽃피어 거센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무하였다. 《文章》지를 통해 해방전에 등단한 趙芝薰·朴斗鎭·朴木月 세 사람의 합동시집 《靑鹿集》(1946)이 대표적이다.

머인 산 靑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靑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 〈靑노루〉, 《청록집》, 1946년 6월).

‘느릅나무 속잎 피는’이라는 시구 속에 담긴 신생의 기운은 이제 곧,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 천지를 가득 채울 것이다. 무릇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피 속으로 맥박 속으로도 스며들어 그것들을 새로운 존재로 서게 할 것이다. 이 시구에는 그런 기운의 움직임도 이미 들어 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하지만 안으로 생동하는 생명의 약동을 감지하고 드러내었다. ‘靜中動의 미학’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갈등과 대립의 핏빛 하늘 아래 청청하게 빛났다.

해방은 신석정이 〈꽃딴풀〉에서 노래했던 ‘영영 잃어버린 벗’들을 되살려내기도 하였다. 〈洛東江〉(1927)을 마지막으로 소련 망명의 길에 올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해 복무했으나, 스탈린의 소수 민족 이주정책에 맞섰다 가 처형당한 趙明熙의 작품집 《낙동강》(1946)이 출간되었으며, 후쿠오카 감옥에서 원통하게 죽은 尹東柱의 순결한 고뇌를 담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가 간행되었다. 철저한 자기반성의 정신, 주체적 삶에 대한 다짐의 태도, 식민본국에서 공부하는 식민지 청년의 고뇌,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하는 안타까운 그리움 등을 담고 있는 윤동주의 유고시집은 식민 압제의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新生の 때문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혼탁한 해방공간을 맑게 정화시키는 힘을 지닌 것이었다.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순사한 李陸史의 《陸史 詩集》(1946)도 간행되었고, 요절한 李相和의 《相和 詩集》(1946)도 빛을 보게 되었다. 의열단원으로서 무장투쟁의 길을 걸었던 육사의 웅장하고 단호한 실천적 목소리와, 《白

潮》시절의 감상적 낭만주의의 늪을 지나 날카로운 현실 인식의 세계로 나아갔던 이상화의 열정적 목소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시의 지표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에 徐廷柱의 《歸蜀途》(1948)가 발간되었다. 〈自畫像〉·〈逆旅〉 등에서 자신만의 길을 자신의 힘으로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던 서정주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이후 어떻게 굽이치며 스스로를 열어 갔던가를 보여주는 시집이다. 근대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단계로 나온 당대 한국사회에서 서정주의 전근대주의적 정신은 자못 이채로웠는데, 그가 마찬가지로 전근대주의자인 김동리와 나란히 한동안 문단을 이끌게 되는 것은 이 점에서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일제 말기의 암울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멀리 북만주로 떠났던(1940) 柳致環도 돌아와 절망과 자학의 만주 시절을 담은 작품들과 해방 후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작품들을 묶은 《生命의 書》(1947)를 펴냈다. 장년 유치환의 깊은 자기 응시의 세계는 청년 윤동주의 치열한 자기 응시의 세계와 나란히, 오로지 외부에 향한 정신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던 해방공간의 시단을 반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鄭豪雄〉

(3) 문학운동

가.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의 관점에서 본 해방 직후 문학운동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고려할 때 미군정기의 문화운동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는 통일독립국가의 건설에 대한 현실주의적 방도의 문제이다. 해방직후 한반도의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국민국가간의 체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던 세계적 질서 속에서 통일독립국가라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당시 좌우의 문화인들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에 매몰되어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고 이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분단을 초래하는 것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히려 좌우 어느 쪽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문학가들 가운데 일부 작가들이 그 현실주의적 성찰 위에서 그러한 과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해방 직후의 문학운동을 살필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좌우의 문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과 달리 현실주의적 정신 위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했던 문학가들의 내부 목소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문학계 사이의 교섭을 고려하면서 남한의 문학운동을 살피는 일이다. 해방직후 남한의 문학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그것과는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항상 북한의 그것과 직접·간접의 관계 속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한만의 문학운동을 고립적으로 볼 경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문학운동을 서술해 나갈 때 항상 북한의 그것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특히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남북의 통합을 꾀해야 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군정기 남한의 문학운동은 크게 다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좌우의 대립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로 해방 직후부터 1945년 12월까지이다. 아직 좌우의 대립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로 좌파 내부에서 노선을 둘러싸고 일정한 대립이 존재했던 시기이다. 남북 문학계 사이에 상호 소통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찬탁·반탁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부터 10월 항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이다. 좌우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이와 더불어 남북 사이의 문학계가 확연하게 나누어 졌다. 세 번째는 10월사건 이후부터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남북이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어 분단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이다. 좌쪽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에서 좌우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네 번째는 1947년 말부터 1948년까지의 시기이다. 분단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중도파 문학가들이 마지막으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 자기 비판과 새로운 이념의 창출(1945년 8월~1945년 12월)

해방 직후의 문학예술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1945년 8월 17일 결성된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위시하여 각 부분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든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8월 18일 결성)이다. 이 조직에는 조선문학건설본부 이외에 조선미술건설본부·조선음악건설본부·조선연극건설본부·조선영화건설본부 등이 망라되었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의장과 서기장을 임화와 김남천이 각각 맡았다. 각 부문에서도 중앙위원장과 서기장을 선임하였는데 문학 분야에는 위원장으로 이태준, 서기장으로 이원조가, 미술 분야에서는 위원장으로 고의동, 서기장으로 정현웅이, 음악 분야에서는 위원장으로 박경호, 서기장으로 채동선이, 연극분야에서는 위원장으로 송영, 서기장으로 안영일이, 영화 분야에서는 위원장으로 이재명이 각각 뽑혔다. 이 단체에 참여한 문학인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일제하 문학인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여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1930년대 후반의 《인문평론》과 《문장》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일제 말의 친일 문학단체를 대체한다는 의욕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지향해야 할 문학의 이념이라든가 건설할 문학의 성격 등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놓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과거 카프에 가담하였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항적 문학단체가 발족하게 된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방식에 대해 불만이었던 문학가들이 주축이 되어 1945년 9월 17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결성되었고 이후 다른 분야에도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져 9월 30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이 결성되었다. 의장에는 한설야가 서기장에는 윤기정이 선임되었다. 물론 한설야는 당시 함흥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다른 문화인들에 의해 추천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일제하에서 가장 저항적이었던 카프가 해산된 후 한번도 그 진로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상태에서 일부 문학가들이 전체 문학가들의 총의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만든 것이 과당적이라고 간주하였기에 그 대안적 성격으로 이러한 단체를 결성하였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초기에 자신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이 건설되자 대타의식의 차원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민문학 혹은 인민예술에 대한 초보적 인식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인민문학 및 인민예술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의 프로문학 및 프로예술이 대립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당시 남한내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혁명단계론의 차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재건파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야기하였고, 장안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단계론을 주장하였는데 반해 당시 문화계 내부에선 그 조직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론을 공통된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문제는 혁명단계론의 차이가 아니라 건설할 문학의 이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었다.

문화전선의 통일이란 과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이 두 단체는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정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은 인민공화국을 주장하면서 통일독립국가의 구상을 하였으나 이는 해외에서 이승만과 김구 등이 들어오면서 난관에 봉착한다. 이들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통합체를 요구하였는데 인민공화국을 주장하던 좌파로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종전의 인공노선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판국이었기 때문에 좌파 내부에서의 단결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예술계의 경우 조선중앙건설협의회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이들이 분열되어 성립할 때만 해도 임정인사를 비롯한 해외 독립운동세력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이고 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대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11월 3일 김구를 위시한 중경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일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현저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힘의 열세를 느낀 좌파 정치권 쪽에서는 통합을 요구하였고 문학계도 이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둘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3일부터이다. 12월 6일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들어섰던 한청빌딩 건물 사무실에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의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 산하의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의 합동위원 11명이 출석하여 양 단체를 해소하고 ‘조선문학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여기에 참석한 사람으로는 조선문학건설본부측에서는 이태준·이원조·임화·김기림·김남천·안희남이었고,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측에서는 윤기정·권환·한효·박세영·송완순이었다. 이 합동회의에서는 향후 양 단체 산하의 부문별 단체통합을 촉진할 통합촉성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조선문학가동맹의 새로운 기관과 부서들을 전형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이 선출되었다. 합동회의가 있고 난 다음 조선문학동맹결성대회가 열렸다.

조선문학동맹으로 합동하기로 한 직후에 낸 성명서를 보면 ①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②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③ 국수주의의 배격이었는데 특히 ③번 항목은 당시 이승만과 김구 등이 인민공화국에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시정부를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이 합동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승만과 김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진보진영 전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이는 바로 성명서의 강령으로 이어졌다.

조선문학동맹의 결성대회는 12월 13일에 열렸다. 그동안 이 시기 문학운동에 대한 연구자들이 이 결성대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남북의 문학계를 통합적으로 볼 때 이 조선문학동맹의 결성대회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주목을 받고 있는 1946년 2월의 조선문학자대회보다 훨씬 중요하다 할 것이다. 종로에 있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사무실에서 오후 12시 반부터 열린 결성대회에는 소설가·시인·평론가 등 70명이 참석하여¹⁾ 그날 오후 5시경 폐회하였다. 이원조의 사회로, 이태준의 개회사, 한효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한설야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결성대회에서는 조직의 선언과 강령이 발표되었는데 과제로서 제기된 것은 ① 일본제국주의의 소탕, ② 국수주의의 배격, ③ 봉건입헌잔재의 소탕, ④ 진

1) 《자유신문》, 1945년 12월 14일.

보적 민족문학의 건설, ⑤ 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와의 제휴였다. 12월 6일의 것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동일하고 ④번과 ⑤번 항목만 추가되는 정도였다. 이상의 강령을 채택하였고 다음으로는 긴급동의로 하지중장의 성명서에 대한 문학동맹의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그 기초를 특별위원회에 일임하였다. 이어 중앙집행위원 19명을 선정하였다. 중앙집행위원으로는 홍명희(위원장)·이기영(부위원장)·이태준(부위원장)·한효(서기장)·이원조·한설야·임화·안희남·권환·윤기정·박세영·조벽암·안함광·김남천·김기림·김오성·이병기·김광섭·정지용이 선출되었다.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각 부의 위원들을 결정하였다.²⁾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팔선 이북의 문학가들의 움직임이었다. 당시 서울에 있었던 문학가들은 삼팔선 이남과 이북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민공화국만 성립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내에 통일독립국가가 건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의 문학가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의 조직으로 모일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삼팔선 이북의 문학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삼팔선이란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극히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던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945년 12월 6일에 열린 두 단체의 통합의 소식을 듣고 조선문학동맹 결성 대회에 참석하여 이를 의논하려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이기영·한설야·김사량 등 여러 명이 철원을 거쳐 1945년 12월 10일 서울에 도착, 잡지들이 주최하는 몇몇 좌담회에 참석한 후 13일에 열렸던 결성대회에 등장하였다.

이북에서 내려온 문학가들은 남북이 삼팔선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 우려를 하였는데 그것은 남쪽과 북쪽을 미국과 소련이 점하고 있는

2) 小説部 위원장: 안희남, 위원: 이기영·한설야·이태준·최명익·박노갑·김남천.
 詩部 위원장: 김기림, 위원: 변영로·정지용·김상호·권환·박세영·오장환·
 김광균·조벽암·김광섭.
 評論部 위원장: 김태준, 위원: 이원조·한효·안함광·김남천·박치우·윤규섭·
 김오성·서인식·윤기정·임화.
 농민문학 위원장, 아동문학 위원장, 고전문학 위원장, 외국문학 위원장.

당시의 현실이 심각함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 무렵까지만 해도 특별히 평양중심주의와 같은 사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현실이 상대적으로 명료하게 보였던 것이다.³⁾ 이에 반해 서울의 문학가들은 서울중심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구조였다. 우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줄곧 활동했기 때문에 서울중심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삼팔선으로 갈라져 있고 미·소가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현실이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대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지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서이다. 조선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인 하지가 12월 12일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정당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정부로 행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정부는 군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향후 임시정부 수립의 주체로서의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당시 이를 지지하고 이에 매달려 있던 조선공산당과 일부 좌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조선문학동맹 결성대회 하루 전에 나온 이 성명서에 대해 조선문학가동맹은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인민의 총의로서 국가적 이념의 표현 형태인 인민공화국을 육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적 이념의 표현 형태라는 말은 미군정이 문제삼는 ‘정부’라는 어휘를 피해가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조선문학동맹의 구성원들 특히 서울에 있었던 문학인들이 인민공화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문학동맹의 위원장을 맡았던 홍명희의 불만 표시로 일시적으로 긴장되기도 했는데 당시 조선문학동맹의 인식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홍명희는 1946년 1월 5일 《서울신문》에 〈성명〉을 발표하는데 여기

3) 한설야는 당시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삼십팔도선이란 마치 국경 이상의 장벽이 되어 있어 자칫하면 모든 운동이 분열·불통일을 가져오기 쉬운 현 단계에 있어서 이 분열과 불통일에 대한 극복 즉 통일전선에의 움직임과 그 전개가 조선민족통일전선에 있어서 가장 크고 긴급한 당면 과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실히 민족재건의 뜻을 두고 있는 누구나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중앙신문》, 1945년 12월 5일).

에 조선문학가동맹이 자신과는 상의 없이 하지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낸 것에 대해 “바지 저고리 입힌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다”라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⁴⁾ 이러한 불만은 자기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인민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조선문학동맹의 노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성명서를 둘러싼 일시적 긴장은 조선문학동맹의 노선을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다. 문학계의 좌우대립과 민족문학논쟁(1945년 12월~1946년 10월)

가)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좌파문학계의 대응

1945년 12월 말에 발생한 찬·반탁 파동은 문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 반탁 쪽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이승만은 이와는 다른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발족시켜 우익에서는 양 단체가 각각 병행하는 사세를 보여 주었다가 좌파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요청으로 단일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찬탁을 주장하던 좌익 쪽에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으로 맞섰다. 당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미·소공동위원회에 협력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규합하여 이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비상국민회의가 만들어졌던 2월 1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위원회가 결성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나누어져 있던 당시의 형국에서 조선문학동맹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한 단체로 가입하면서 그 노선을 따랐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통일전선체라고 표방하였지만 당시 중도파를 비롯한 우익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라는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좌우의 대립 속에서 좌익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각 분야는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1946년 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거행된 조선문학자대회이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준비과정과 문학자대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학자대회에 보낸 민주주의민족전선 준비위원회의 메시지에서도 읽을 수 있다.⁵⁾

4) 이에 대해서는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창작과 비평사, 1999)의 3부 1장 참고.

조선문학자대회를 거치면서 1945년 12월 13일에 결성된 조선문학동맹은 새롭게 조선문학가동맹으로 바뀌었다. 조선문학자대회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성을 갖는다. 하나는 조선문학가동맹이 취하는 노선의 문제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외곽단체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결성 직후 외곽단체를 확충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이다. 1946년 2월 24일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이 결성되었고 여기에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하여 여러 문학예술단체들이 가입하였는데 그 중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그리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형국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국제노선에 의한 조선임시정부 수립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임정 출신들을 비롯한 우익인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협애한 통일전선의 길이었다.

두 번째로는 조선문학가동맹과 조선문학동맹의 관계였다. 조선문학자대회에서 구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출신과 조선문학건설본부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단체의 이름을 조선문학동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두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대중적 문예활동과 전문작가 사이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문학동맹 조직의 성격문제였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심각한 대립을 야기시켰다. 조선문학동맹이나 조선문학가동맹이나 하는 것은 1945년 12월 13일에 열렸던 조선문학동맹결성대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구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측에서는 이 결성대회를 가장 중요한 대회로 보고 있기에 그 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구 조선문학건설본부측에서는 그 결성대회는 과도기적인 것이고 이번의 전국대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 가운데서 조선문학동맹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을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⁶⁾ 조선문학동맹을

5) 《건설기의 조선문학》(백양당, 1946), 144쪽.

6) 당시 회의에서 구 문건 출신들과 구 예맹 출신들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발언자들의 구 소속을 병기하여 회의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삼팔선 이북에 있는 문학가들을 무시하는 견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당시 대회에서 삼팔선 이북의 문학인들까지 참여한 70명의 문학가들이 결정을 했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과도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朴贊謨와 같은 젊은 문학가들이 수를 내세워 결정하는 것은 서울중심주의의 발현으로 당시 삼팔선 이남과 이북으로 갈라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

오장환(문건) : “낭독자로부터 명칭자구 중 ‘家’字를 인쇄·오식인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문학동맹이라 불러 왔지만 문학동맹이라 하면 너무 막연하니 인쇄된대로 문학가동맹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동의.

홍효민(예맹) : “문학동맹은 이미 작년 12월 13일 문학동맹결성대회에서 결정 되었으므로 문학자대회에서는 논의될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의.

김오성(문건) : “문학동맹이란 것은 잠정적 명칭이었습니다. 전국문학자가 모인 본 대회에서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문학가동맹이라고 하자는 오장환씨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찬모(문건) :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문학자의 단체가 ‘작가동맹’이니 ‘문학가동맹’이니 하지 그냥 문학동맹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홍효민(예맹) : “김오성씨의 말은 법규적으로 보아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자대회에서 동맹의 명칭은 운위될 바 아닌 줄 압니다.”

박아지(예맹) : “명칭에 대하여 논의되는 것보다도 문학자대회의 소집을 문학동맹에서 소집하는 것이나 문학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소집한 것이나 명백해져야 할 줄 압니다.”(중략-인용자).

박승극(예맹) : “문학동맹이나 문학가동맹이나 다 좋다고 봅시다. 과거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에서는 문학동맹을, 문학건설본부에서는 문학가동맹을 서로 고집하는 듯하나 이런 고집은 서로 말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농민조합이니 노동조합이니 했지 노동자조합이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학가의 모듬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학가동맹이라 해야만 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나오게 하여 회의가 불통일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효민(예맹) : “문학가동맹이란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그것을 고집말기로 합시다.”

한효(예맹) : “준비위원회로서 ‘家’자를 붙인 것은 잘못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런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 프롤문학동맹이니 문학건설본부니 하는 감정을 갖지 맙시다. 우리는 민족문학건설이라는 중요한 시기에서 적은 점에서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을 토의하기로 합시다.”

이원조(문건) : “여하간 여러 의견이 많으니 민주주의적으로 가부 중 다수결을 취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가부로 체결하는 데 거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일동 : “좋습니다.”(거수결과 문학동맹이 28명 문학가동맹이 43명).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227~230쪽).

히 반국적 시각의 노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로 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로는 조선문학가동맹내에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출신들이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이에 근거한 독주에 불만을 품고 삼팔선 이북으로 올라갔다. 박세영·박아지·한효 등을 비롯한 문학가들이 1946년 중반에 월북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내부적 불만에서 싹튼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삼팔선 이북에서 독자적인 문학단체의 출현을 낳게 했다는 점이다. 삼팔선 이북의 문학가들은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북조선의 독자적인 문학단체의 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지만 문학계의 남북 분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물리쳐왔다. 1945년 12월 10일에 여러 명의 문학가들이 서울로 내려와 조선문학동맹결성대회에 참가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의 조직과는 다른 혹은 그와 연관성은 있지만 독자성을 갖고 있는 조직을 삼팔선 이북에 만드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남북의 분열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서울의 문학가조직에 합류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12월 13일의 조선문학동맹결성대회 이후 열린 서울에서의 조선문학자대회에서 조선문학동맹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이전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분히 서울중심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전국적인 문학대회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열렸던 대회를 마치 전국적인 대회라고 하면서 이 결정을 우선하는 것을 보면서 삼팔선 이북의 독자적인 문학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남북의 문학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학가조직을 만들기에 이르고 이는 정치권에 이어 문학계에서도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바로 1946년 3월 25일에 결성된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이다. 이로써 남북에는 각각 다른 두 개의 문학가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⁷⁾

7) 당시 삼팔선 이북의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김재용, <민주기지론과 북한문학의 기원>(《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을 참고할 수 있다.

나) 반탁과 우익 문학가들의 대응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대해 우익은 찬탁은 사대주의적인 것이고 반탁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구도로 몰고 갔다. 이승만과 김구는 각각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조선문학동맹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문학가들이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우익 문학가들 사이에는 문학관과 현실관에 있어 차이를 보여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졌다. 찬탁을 반대하고 좌파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구체적 지향에 있어서는 나누어졌다.

하나는 민족주의 경향의 것으로 일제 때부터 민족주의적 지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만든 전조선문필가협회이다. 1946년 3월 13일에 발족된 이 단체는 문학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인 등 광범위한 문필가를 망라하였다. 정인보를 회장으로 하여 박종화 등이 부회장으로 일하였다. 그 외에도 이현구 등이 여기에 가담하였는데 이 단체의 구성원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민족주의적 사고를 기본 축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후 박종화가 쓴 〈민족문학의 원리〉에 한층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가 “우리의 2세에게 충무공의 소설을 지어 읽혀주자, 우리들의 딸에게 논개로 희곡을 써서 읽혀 주자”라고 하는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것처럼 당시의 민족의 현실과는 유리된 다분히 복고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조선문필가협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러한 공통된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류가 이러한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는 다른 경향의 단체도 생겨났다. 1946년 4월 4일 김동리의 주도로 순수문학을 주장하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결성되었다. 최명익을 명예회장으로 삼고 회장에는 김동리가 앉았다. 여기에 참석한 인물들은 최태웅·임서하·조연현·조지훈·곽종원·유치환·김달진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193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등장하여 문학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후반 순수문학론 논쟁과 세대 논쟁을 통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감성을 이론적으로 설교하였는데 그 핵심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계몽적이고 이념적인 문학은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했던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지만 같은 우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전조선문필가협회측의 민족주의적 경사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순수문학론을 내세우게 되었다. 카프문학과 민족주의 경향 모두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문학가들 중에서 가장 선배 작가로 최명익을 발견하고 그를 명예회장으로 끌어들인 데서 이를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당시 조연현이 최명익론을 썼던 것도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 문학사적 계보를 세우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정당성을 찾으려 하였고 나아가 미학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조선문학가동맹 측과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조선문필가협회가 이후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던 반면,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었다. 여기에는 전자의 조직에 속했던 이들이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가능한 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려 했던 반면, 후자의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확보의 욕망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비타협적으로 논쟁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논쟁을 야기시키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학계는 좌우의 대립을 경험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격심한 분열이 초래되었다.

다) 민족문학논쟁

민족문학에 대한 자각적 이해는 해방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에 이루어진 문학계의 논의에서 민족문학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논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민족문학이 제기된 것은 1946년 초 조선문학자대회를 전후한 무렵부터이다. 특히 이 대회에서 임화가 발표한 <조선민족문학 건설의 기본 과제에 대한 일반 보고>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문학사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당시 문학계 특히 좌파에게 있어 민족문학의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수립해야 할 문학의 이념이 민족문학이라고 하면서 계급문학이나 민족문학이나 하는 이전의 대립은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삼팔선 이남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을 무렵에 삼팔선 이북에서도 민족문학 논의가 일어났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1946년 2월 서울에서 조선문학자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1945년 12월에 있었던 조선문학동맹이 서울중심으로 변하여 가자 1946년 3월에 평양에서는 북조선예술총연맹이라는 별개의 단체를 발족하였다. 그 단체의 발족 직후 이루어진 문학자대회에서 안함광은 〈민족문화론〉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임화의 것과는 달리 민족문화의 성격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이념과 민족문학이 결코 모순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이념을 따른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고수해서는 안되고 당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친일과 숙청이나 토지문제의 해결이란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이념과 민족문학이 결코 모순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임화의 논의와는 다르게 훨씬 구체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학 자체에 대한 한층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삼팔선 이남과 이북에서 민족문학에 대한 성격을 놓고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둘은 모두 좌파계열에서 나온 것이고 우파쪽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민족문학 논쟁은 좌파계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삼팔선 이남과 이북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는 데 그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사이에는 상대방의 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논쟁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각각의 안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북 사이 즉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예술총연맹 사이의 대립이었다.

안함광은 〈민족문학재론〉에서 자신의 민족문학관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되는데 이 글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시 이남의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비판과 또한 북조선예술총연맹 내부에서 제기된 다른 논자들의 민족문학관에 대한 명시적 비판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현실에서 민족

의식과 계급의식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민족문학이나 계급문학이나 라는 식의 접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세워야 할 문화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등의 입화를 비롯한 조선문학가동맹이 제시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무산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을 같은 것으로 보는 북조선예술총연맹 내부의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민족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의 관점이기 때문에 무산계급문학이 곧 민족문학이라고 보는 것은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삼팔선 이북에서 안함광의 민족문학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남에서 가장 의식적으로 민족문학 논의를 펼쳤던 임화도 이전의 논의에서 나아가는 주장을 펼쳤다. 1947년 초에 발표한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에서는 이전에 자신이 펼쳤던 견해를 바꾸어 나갔다. 이전의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 과제에 대한 일반 보고>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문학’을 주장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식민지의 현대적인 민족문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전의 글에서는 서구의 근대와 비서구의 근대 사이에 벌어진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였던 반면 이 글에서는 비서구의 근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결코 모순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의 통일적 이해로 다가갔다. 이 무렵의 논의는 안함광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수렴되는 양상을 드러내 보였다.

라. 문학계의 재편 노력과 좌우문학논쟁(1946년 10월~1947년 12월)

가)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 개편과 서울 중심주의의 변화

1946년 말에 이르면 좌우의 균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좌파들이 큰 기대를 걸고 행했던 일련의 대중적 파업과 투쟁은 오히려 좌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역량을 손실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고, 우파는 이를 기회로 자신들의 주장을 한층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물론 우파는 아직 대중을 획득하면서 세력을 확산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판도가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경우 상실된 역량을 회복하면서 미군정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중도파를 끌어들이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고 더불어 우파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본격적인 비판을 감행하였다. 우파에 대한 강한 비판과 중도파의 건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문학가협회를 비롯한 우파의 경우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집요한 비판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정세가 좌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문학가동맹측이 그동안에 보였던 무시를 벗고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회로 중심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좌우 문학계 사이의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논쟁은 조선문학가동맹측에서는 주도적인 이론가보다 젊은 외국문학 전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한정적인 것이었다.

우선 조선문학가동맹에서 벌인 문학계의 재편 노력부터 살펴보자. 조선문학가동맹은 1946년 11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북조선예술총연맹의 발족으로 이미 노선을 달리하던 삼팔선 이북의 문학가들을 빼고 그 자리에 중도파 작가들을 끌어 넣었다. 부위원장이었던 이기영과 한설야를 빼고 그 자리에 이병기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윤기정·한효·이동규·박세영·안함광 대신에 양주동·염상섭·조운·채만식·박아지·박태원·박노갑을 선임하였다.⁸⁾ 서기장으로 권환 대신에 김남천을 뽑는 등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중도파 문학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양주동·염상섭·조운·채만식 등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이들이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의 이러한 제안에 호응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대부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선문학가동맹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중도파들을 비중

8) 《예술통신》, 1946년 11월 11일.

있게 넣었다는 것과 이것이 갖는 의미이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은 문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켜 조선문학가동맹의 외양을 넓히는 것이 미군정에 대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간접적이거나 민주주의민족전선 진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⁹⁾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의 일원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속해 있었다. 그리하여 미·소공위의 결정대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통일독립국가 건설의 길로 생각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익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첩경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더 넓은 통일전선이 필요함으로 절감하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은 우파 문학인 즉 청년문학가협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강화이다. 중도파 작가들을 끌어 넣는 것이 자기 진영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필수적으로 우파진영의 약화를 기도하는 일에 맞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동안 무시했던 논자들인 김동리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김동리가 1946년 4월 청년문학가협회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을 비판하여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정세가 좌파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우파에게는 우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중도파 문학인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은 우파 문학인에 대한 비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김병규가 김동리의 순수문학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진영에 대한 비판은 김동리의 주장인 순수문학론에 대해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특히 박종화 등이 중심으로 결성된 전조선

9) 당시 삼팔선 이북에 있던 이태준마저도 이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명을 들어가면서 역설하고 있다. 《문학》 3(1947년 4월호)에 실린 편지글 〈영웅적 활동을 승리로 극복한다〉(1947년 1월 30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의 일절인 “특히 가람선생과 무애선생에게 동맹일을 위해 적극적 지도를 청하시오며”는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의 중도파 문학인에 대한 관심을 잘 말해준다.

문필가협회에 대한 것이었다. 박종화는 <민족문학의 원리>¹⁰⁾에서 충무공과 논개의 불굴의 기개를 그린 문학이 민족문학이고 이러한 문학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선문학가동맹측은 비판을 하였는데 이명선의 <민족문학과 민족주의 문학>¹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문학가협회측의 김동리가 내놓은 순수문학론과 전조선문필가협회측의 박종화가 내놓은 민족주의 문학론에 대해 김병규와 이명선과 같은 조선문학가동맹의 젊은 논객들이 각각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시기 조선문학가동맹의 위기의식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²⁾

이 시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계 재편 노력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서울중심주의의 포기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46년 2월 8일~9일의 조선문학자대회를 계기로 하여 문학가 내부에서는 새로운 대립이 생겨났다. 과거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출신의 문학과 조선문학건설본부 출신의 문학가 사이에 문학자대회의 성격과 또한 1945년 12월 13일날 결성된 조선문학동맹의 성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조선문학건설본부 출신들의 주도에 반발하여 일부 문학가들이 월북하였다. 또한 재북 문학가들도 서울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올라온 문학가들을 끌어들여 문학가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 사이에는 두 개의 문학단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문학자대회에서는 삼팔선 이북에 '총국'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북에는 전혀 다른 조직이 생겼던 것이다.

삼팔선 이남에서는 10월 항쟁의 여파로 입지가 갈수록 어렵게 된 반면, 삼팔선 이북에서는 좌파의 세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벌어지자 과거처럼 서울중

10) 《경향신문》, 1946년 12월 5일.

11) 《신조선》, 1947년 2월.

12) 흥미로운 것은 김동리를 비판하는 김병규의 <순수문학과 정치>와 박종화를 비판하는 이명선의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이 《신조선》 잡지 같은 호에 나란히 실려 있다는 점이다. 또한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이 깊은 불란서 문학전공자로, 박종화의 민족주의문학론에 대해서는 전근대 시기 문학을 전공한 이명선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조선문학가동맹은 이들 젊은 논객들로 하여 이 두 문제에 대해 동시적으로 비판을 조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을 고집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서울중심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심적 이론가였던 임화의 글 〈북조선의 민주 건설과 문화예술의 위대한 발전〉을 들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심한 위기에 봉착하여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반면 북한에서는 북조선예술총연맹 주도하에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임화의 인식에서 해방 직후나 혹은 1946년 초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모든 것을 고려하였던 그가 이제 평양을 또 하나의 중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좌우익 문학논쟁

청년문학가협회의 우파는 처음부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판하여 왔다. 특히 그 맹장이라 할 수 있는 김동리 1인이 주도하는 것인 만큼 조선문학가동맹측에서는 별다르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에 대해 반론을 펼 만큼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일제 말에 존재하였던 순수문학의 연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946년 4월 청년문학가협회의 발족 이후 발표된 김동리와 조연현이 쓴 일련의 글은 물론이고 김동리가 〈순수문학의 정의〉¹³⁾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문학가동맹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썼던 김동리가 〈순수문학의 진의〉¹⁴⁾와 〈창조와 추수〉¹⁵⁾를 발표하자 조선문학가동맹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병규가 본격적인 반론인 〈순수문체와 휴머니즘〉¹⁶⁾과 〈순수문학과 정치〉¹⁷⁾를 발표하게 된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조선문학가동맹측에서 왜 이시기에 정면 대응을 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문학계의 상황, 특

13) 《민주일보》, 1946월 7월 11·12일.

14) 《서울신문》, 1946년 9월 15일.

15) 《민주일보》, 9월 15일.

16) 《신천지》, 1947년 1월.

17) 《신조선》, 1947년 2월.

히 조선문학가동맹의 현실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은 1946년 10월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입지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이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하여 이를 성사시키도록 압박하고 나아가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민중들의 항쟁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생각보다 훨씬 강도가 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역량 손실이 따랐던 것이다. 특히 박헌영을 비롯한 몇몇 지도부의 활동가들이 체포 위기에 놓여 삼팔선 이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이러한 위기감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행하였던 방침을 전반적으로 반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중도와 작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의 견인이었다. 우파진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한 자기진영의 단결을 촉진하는 일도 더불어 진행하였다.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흘러보냈던 청년문학가협회진영의 순수문학론적 민족문학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며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병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리는 <순수문학의 진의>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데 그 첫째는 순수문학이 결코 ‘상아탑의 문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문학가협회 바깥에서 순수문학을 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조선문학가동맹쪽에서는 순수문학은 일제 말의 과시즘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해방 후에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변화된 현실에서 순수문학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문학가동맹 외부에 있던 김동석이 주장한 것으로 순수문학은 정치적 현실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상아탑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김동리식의 순수문학을 비판하였다. 이 둘은 순수문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한쪽은 순수문학을 부정하고, 다른 한쪽은 순수문학을 긍정하고—에도 불구하고 순수문학을 현실과 떨어진 상아탑의 문학이라는 현상 인식은 공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리는 순수문학은 결코 상아탑의 문학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문학이라고 하면서 이 양쪽의 비판을 재비판하였다.

김동리 주장 중 다른 하나는 순수문학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때 희랍시대의 제1휴머니즘과 르네상스시대의 제2휴머니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3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고 이는 그런 점에서 민족문화와 상통한다는 점이다. 르네상스 이후 진전된 산업혁명을 비롯한 제반 물질적 생활의 진전과 이에 대해 반발한 맑시즘의 유물사관은 모두 근대 과학이란 공통된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제3휴머니즘이고 이러한 지향은 민주주의의 결과물의 하나인 조선해방의 노력과 이어지기 때문에 민족문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병규는 우선 〈순수문제와 휴머니즘〉에서 정면으로 반박한다. 첫째는 순수문학이 상아탑의 문학이 아니라고 한 김동리의 주장에 대해 서구문학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불란서 문학의 근거로 순수문학은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악과 나아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의미의 순수문학론은 결국 인간을 추상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휴머니즘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지만 더구나 자본주의의 물질적 변혁과 맑시즘의 유물론을 근대 과학의 공통 틀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파시즘이 제고하였던 논리를 답습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파악이라는 것이다. 그의 다른 글 〈순수문학과 정치〉에서도 앞의 글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도를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동리의 순수문학은 “순수문학에 정치를 도입하기 보다 순수문학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김동리가 당시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서 있는 자리를 비판한다. 김동리의 순수문학은 현실 정치에 있어 반탁이라든가 단독정부 수립 등과 같은 이승만 계열의 우익 정치에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서구의 순수문학과 김동리의 순수문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앞의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언명되던 것이 이 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훨씬 분명해진다.

김동리는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¹⁸⁾에서 본격적인 반론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자신이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없다가 김병규의 반론을 접하자 이를 넘겨버릴 리가 만무하였던 것이다. 김병규의 비판 논리에 일 대 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선 순수문학은 현실과 무관한 채 존재해 왔다는 김병규의 견해에 대해 김동리는 자기가 말하는 순수문학은 그러한 것, 즉 발레리나 말라르메가 말하는 그러한 순수문학이 아니고 오히려 셰익스피어와 괴테가 추구했던 그러한 문학이라고 하였다. 단지 자기가 그냥 문학이라 하지 않고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레리나 말라르메식의 ‘탐미주의’적 문학관이나 프로문학 같은 공리주의 문학관과 구별짓기 위해 순수문학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순수문학은 본격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순수문학에 조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순수문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을 보면 김동리의 순수문학은 김병규나 김동석 등이 말하는 순수문학의 정의와는 출발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제3의 휴머니즘이란 것은 결국 자의적이고 더구나 유물사관을 근대주의로 보면서 인간이 소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김병규의 반론에 대해서이다. 김동리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제3휴머니즘은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 낸 일련의 부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맑시즘의 유물사관도 결국 근대주의의 변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자본주의를 말함-인용자) 정치제도와 경제기구와 생활자료 산출방법에 있어서의 갖은 모순과 죄악과 불합리 불공평들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통렬히 해부 비판한 맑시즘체계의 세계관은 그 체계구성의 조직과 방법에 있어, 또 그 유물론적 인식 태도에 있어 완전히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사회관에 있어서는 근대주의(자본주의 사회)에 강경히 항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론적 인식론적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양기되어야 할 근대주의의 연장과 그 여식의 응결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비판의 대목은 그의 생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18) 《대조》, 1947년 8월.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김동리와 김병규 사이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리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김병규는 〈독선과 무지〉¹⁹⁾를 발표하는데 이는 새로운 각도의 반박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층 더 세밀하게 논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논쟁에서 항상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는 순수문학의 성격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3휴머니즘의 현실성 문제였다. 이 글에서도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리의 ‘독선’을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를 각각 비판하였다. 순수문학의 성격에 대해서 김병규는 서구문학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순수문학이란 본격문학과 같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념정의를 하는 김동리의 ‘독단’을 비판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김동리가 맑시즘의 유물사관을 근대주의의 연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그것이 갖고 있는 주체 부재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오해라고 비판하였다. “유물사관은 절대로 주체적 조건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물론 씨와 같이 주체가 모든 것인 것처럼 독선적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이하 보아온 바와 같은 객체적 조건에서 시발하였고 또 그 자체의 주체적 조건은 객체적 조건에 반작용하여 시민계급의 발전을 추진시켰다고 보는 것이 유물사관의 입장인 것이다. 즉 객체와 주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역사의 발전운동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물사관이야말로 휴머니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김병규와 김동리의 이러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 즉 순수문학의 정의가 아니고 후자 즉 맑시즘의 유물사관의 평가 문제였다. 전자가 크게 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순수문학의 정의가 원천적으로 다른 만큼 서로 과녁이 빗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자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다. 김동리의 주장 즉 제3세계관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비판하고 나아가 당시의 역사적 맑스주의가 범하는 문제를 제대로 짚어줄 때 가능한

19) 《문학》, 1948년 4월.

것이나 당시와 이후 그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에 미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논지를 계속 철저하게 수행했다면 그는 자신의 말처럼 근대주의와 근대주의의 연장으로서의 변형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여 근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20세기 한국근대문학사에서 한 정점을 차지하면서 진경을 보여주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김병규의 경우 역사적 맑스주의와 맑스의 견해를 구분해 가면서 설득할 수만 있었다면 참으로 근대문학의 이론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의 문학사를 개괄하면서 프리체 類의 것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그 자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문학논쟁에는 위에서 다룬 것 이외에 김동석과 김동리 사이의 논쟁을 들 수 있다. 김동석이 〈순수의 정제〉²⁰⁾에서 김동리의 문학관을 비판하였고, 이에 대해 김동리가 〈생활과 문학의 핵심〉²¹⁾으로 반박을 하였다. 이후 이들의 논쟁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대담의 형식으로까지 번져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²²⁾ 의외로 그 내용은 간단하였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논쟁에서 앞의 것과 다른 것은 좋은 문학작품의 평가 기준을 둘러싼 시론적 모색이었다. 김동석과 김동리는 셰익스피어가 좋은 문학가라는 데는 일치하지만 그 평가 기준은 다르다. 김동석은 셰익스피어가 당대 현실에 충실하면서 인민들의 지향을 그 역사적 전망 속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리얼리즘에 충실했기 때문에 위대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고, 김동리는 셰익스피어가 생명의 리듬과 이에 입각한 인간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동석과 김동리의 논쟁은 훨씬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추상적으로 흐른 느낌을 준다. 특히 김동리가 ‘동양의 전통’ 운운할 때 더욱 그렇다.

20) 《신천지》, 1947년 11월.

21) 《신천지》, 1948년 1월.

22) 이 대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현식의 〈해방직후 순수문학논쟁 연구〉(《민족문학사연구》7, 1995)를 참고할 수 있다.

마. 남북의 분단과 통합의 열망(1947년 12월~1948년 8월)

1947년 말 이후의 문학계는 정치 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향의 공존이 불가능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해방 직후부터 줄곧 문학계의 중심을 차지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이 시기에 들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입지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1947년 8월에 들면서 미군정당국은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의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앞으로 다가올 8·15기념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그 구금 대상의 폭이라든가 8·15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 등을 목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임을 알아 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검거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깨달은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 무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게다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을 보면서 더 이상 남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후 주도적인 문학가들이 월북을 하게 된다. 임화를 비롯하여 김남천·오장환 등 조선문학가동맹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이 무렵에 월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이 시기에 세 갈래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평양계이다. 김남천은 월북하자마자 평양에 머무면서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같이 월북하였던 오장환을 위시하여 1946년에 월북하여 평양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이태준 등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해주계이다. 임화는 월북하여 평양에 거주하지 않고 해주에서 활동하였다. 그곳에서 남로당계 잡지인 《전진》·《노력자》 그리고 《별》 등을 출판하여 남쪽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을 하였다. 거기에는 1946년 말에 월북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원조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서울계이다. 조선문학가동맹과 조선문화단체총연합의 핵심 구성원들이 월북한 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이용악·현덕을 비롯한 젊은 문학가들이었다. 해방 직후에 등장하여 문학활동을 했던 많은 젊은 문학가들, 예를 들어 이병철·박찬모·박산운·강형구 등의 문학가들은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체적으

로 문학을 해 나갔다. 조선문학가동맹이 발간하던 기관지 《문학》의 발행인이 이태준에서 현덕으로 바뀌어 나온 것을 보면 서기장을 맡고 있던 김남천이 월북한 후 조선문학가동맹이 얼마나 힘들게 견뎌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쪽은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까지 계속 이어졌다.

청년문학가협회 조직에 관여하였던 문학가들은 남북의 분단고착화가 가시화되는 현실 즉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남북의 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깊이 천착하지 못하였다. 항상 현실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져 문학을 했던 이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충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이 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특별하게 위기를 느낀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문학가동맹과 청년문학가협회가 이러한 양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기를 느끼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중도파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염상섭·채만식 등의 문학가들이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또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당시 좌우 모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였으며 또한 현실주의적 사고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였다. 특히 미·소 모두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남북의 분단을 막으며 동족상잔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에 주력하였다. 당시 좌파들이 소련에 기대어, 우파들이 미국에 기대어 자신이 생각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에 반해, 이들은 미·소 모두에 대해 공히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이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주장한 이들을 중도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가들은 주로 작품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향을 드러낸 셈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들이 발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이 시기에 단편 〈삼팔선〉과 〈이합〉 그리고 장편 《효풍》을 발표하였다. 〈삼팔선〉은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 분단이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상처를 아직 예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가는 현실의 심각함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삼팔선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이 초래할 수 있는 억압적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에 발표한 두 단편이 보통 사람들이 분단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예감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소의 외세가 한반도에서 행사하는 억압과 우리 내부의 차이를 딛고 통합해야 할 필요성 등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다. 장편 《효풍》은 미국과 소련을 각각 자신의 이상국으로 삼고 이들에 기대어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미·소 모두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스스로 통일독립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투쟁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미국과 소련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과 이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단견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어, 작가가 이러한 분단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채만식은 염상섭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시기 중도파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해방 직후에 〈역로〉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던 채만식은 1946년 말 이후 침묵을 지키다가 1948년 들어서면서 또다시 문제적인 단편인 〈도야지〉와 〈낙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 역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의 문제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뜻대로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남북이 분단될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도야지〉는 남북분단의 구실을 제공하였던 1948년의 5·10선거를 다루고 있다. 그가 눈여겨 본 것은 이 선거에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민중과 민족의 삶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하여 행동

한다는 사실이다. 분단이 코 앞에 닥쳐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신도 주장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치부만을 위해 선거에 입후보하는 이런 인물들이야말로 모리배와 정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이들이 판을 치는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 단독정부의 수립과 나아가 분단을 촉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임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이 가장 빛나는 것은 역시 〈낙조〉이다. 이 작품은 세 사람의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면서 전개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현실의 한 복판에서 존재하는 분단과 그 해결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작가의 전망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황주 아주머니는 북의 공산주의를 무력으로 붕괴시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영춘은 남이 북을 통일하든 북이 남을 통일하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입장으로서 오로지 남에 의한 북의 통일이란 입장을 지니고 있는 황주아주머니와는 분명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춘은 가히 통일지상주의자라고 부를만 한 인물로 통일을 물신화시킨 것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통일이란 것이 무조건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북이 서로 무력으로 통일하게 되면 동족상쟁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자리잡고 있는 미·소에 의한 새로운 간섭으로 심각한 재앙을 남길 뿐이기 때문에 미·소에 의하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비치는 것이다. 작가는 당시 현실에서 존재하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입장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길을 모색한다.

이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시기에 이르러 문학계에서 자기 나름의 전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바로 이 중도파에 속한 작가들뿐이었다. 좌파의 작가들은 현실적 지반을 상실하여 자신의 보위 자체가 최대의 과제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대응방식을 제출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당시 구국문학 등의 구호를 내걸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이전의 것과 다른 새로운 대응으로 보기에는 현실성이 약하였다. 우파에 속한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단독정부 수립에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분단을 막고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망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중도와 작가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활발하게 자신의 전망을 찾고자 분투하였던 것은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켜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 한층 의미있는 작업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金在湧〉

2) 미술

(1) 해방공간과 미술단체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면서 발빠르게 전체 문화예술인의 집결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 산하에 조선미술건설본부가 조직되고 중앙위원장에 高義東이 추대되었다. 조선미술건설본부가 미술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출발한 것이 조선미술협회였다. 조선미술협회의 출범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좌익계 미술인들이 조선프로레타리아미술동맹을 조직하였으니 해방 직후 난립한 정치·사회단체의 일면을 보는 느낌이다. 조국 해방의 감격과 새 시대 미술의 건설이라는 벽찬 과제를 앞에 두고도 정치색과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의 이합집산 양상은 극심해져만 갔다. 1945년 10월 전체 미술인이 참여한 해방기념문화축전 미술전이 그나마 해방 이후 구체적인 미술인 활동으로 꼽힐 뿐 그 외는 단체의 조직과 해체, 재구성 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반영하는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다. 해방기념 미술전에 출품된 작품은 한결같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내용이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미 제작되었던 것의 출품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공산계열과 반대하는 민족진영의 대결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잇달아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가 결렬되면서 남한사회는 좌익과 미군정의 대립으로 사회적 불안이 일층 증대되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과 연이은 각종 파업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미술계의 이합집산 현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선미술건설

본부가 모체가 되어 출범한 조선미술가협회의 일부 회원이 일부 간부들의 정치적 노선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서 이탈한 40여 명의 미술가들이 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의 일부 미술가들과 결탁하여 조직한 것이 조선미술가동맹이었다. 그런가하면 조선미술가협회 결성에서 탈락한 일부 미술가들이 무소속의 미술가들과 회동하여 출범시킨 것이 조선조형예술동맹이었으며, 또 다른 조선미술가협회 제외 미술가들이 만든 것이 독립미술가협회였다. 이로써 미술단체의 출범은 조형이념에 의한 결속체이기보다 정치색이 짙은 것이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1946년 12월에는 조선미술가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이 합동전을 가지면서 통합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조선조형미술동맹이었다. 이로써 좌우를 대표하는 조선미술협회와 조선조형미술동맹의 대립구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한 미술가가 털어놓은 다음과 같은 비탄 어린 언급은 당시 미술계 사정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치성과 사상을 통하여 예술창작의 의욕이 어떤 제약을 받고 자유를 생명으로 삼을 예술가들이 협회·연맹·동맹 등의 과당을 형성하고 중상·분열·모략을 일삼으며 자파의 입장과 공격을 예술행동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조선 예술가의 타락과 몰락을 가져올지언정 진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는 상아탑적 예술지상주의를 찬미하는 자도 아니며 그와 동시에 창작의욕을 정치성이나 사상성·당파성으로 짓밟아 버려 앞날에 올 새로운 예술의 싹을 무절러 버리는 예술의 정치적 선전 도구성에도 만족하는 자가 아니다. 천연만구의 이론보다 한 장의 스케치로써 그 화가의 예술의욕은 가장 뚜렷이 증명될 것이다 (송정훈, <예술창작의 의욕—양대파당미전을 열면서>, 《경향신문》, 1947년 8월 17일).

미술계의 분파에 환멸을 느낀 일부 미술가들이 순수한 창작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외치면서 발족시킨 것이 미술문화협회와 제작양화협회였다. 미술문화협회는 당시 대표적인 중견작가들의 모임이라는 데서 그 활동이 주목을 받았으나 1회전을 갖고는 해체되었다. 여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각광을 받았던 작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金仁承·李仁星·孫應星·南寬·李揆祥·李鳳商·趙炳惠·朴泳善 등이 그들이다.

이외에도 순수한 창작활동을 표방하고 나온 그룹으로 동양화의 檀丘美術

院과 서양화의 新寫實派를 들 수 있다. 단구미술원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장 오염이 심한 영역인 동양화에서의 왜색을 탈피하고 새로운 동양화를 정립하자는 취지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여 1946년과 47년 두 차례에 걸친 전시를 가졌다. 왕성한 창작욕을 보이고 있었던 중견작가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의 재정비와 정체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참가 작가는 金永基·張遇聖·裴濂·李應魯·李惟台·趙重顯·張德이었다.

1947년에 출범한 신사실과는 金煥基·劉永國·李揆祥의 세 사람으로 구성된 동인체였으나 이들이 해방 전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에 걸쳐 일본의 自由展에 출품한 모더니즘 제1세대라는 점에서 특기되고 있다. 여타의 그룹이 정치색이 짙지 않으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장 순수한 조형이념의 결속체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해방 전에는 순수한 추상을 지향했던 이들은 해방과 더불어 다소의 개인적 경향차이를 드러내 놓고 있는데, 김환기·유영국이 자연적 이미지를 추상의 패턴에 굴절시키고 있음이 그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환기는 자연과 조선조 백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적 정서가 강한 모티브의 탐닉으로 기울었으며, 유영국은 산·바다와 같은 구체적인 자연의 명제를 빌리면서도 더욱 견고한 기하학적 형태로 진전되어 나갔다. 1948년 2회전에는 張旭鎭이 새로 가담하였으며 50년 6·25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53년 피난지 부산에서 3회전을 열고는 해체되었다.

순수 창작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결의로 모인 미술문화협회나 제작양화협회도 한 두 차례 전시를 가졌을 뿐 지속되지 못했다. 여기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다시 결속한 것이 1950년의 미술협회였으나 이 역시 동란으로 인해 자동해체되고 말았다.

특정 장르의 미술인 단체로는 1945년 조선산업미술협회(李完錫·李奉先·劉允相·嚴道晩·趙炳惠·趙龍植·韓弘澤 등)와 46년의 조선공예가협회(金在奭·姜菴園·白泰元 등), 그리고 46년의 조선상업미술가협회가 있다.

해방공간에 기록되는 개인전으로는 남관展·金世湧展(1947년)·金斗煥展·李用雨展·白榮洙展(1948년)·김영기展·이응로展·千鏡子展(1949년) 등이 있다.

(2) 왜색과 민족미술

해방과 더불어 미술계에서 제기된 가장 뜨거운 논의는 왜색의 탈피와 민족미술의 건설이었다. 회화상에서 왜색은 전통회화뿐만 아니라 서양화에서도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왜색의 침투는 특히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현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2년에 창설된 조선총독부 주관의 조선미술전람회는 1944년 막을 내릴 때까지 이 땅에서 유일한 신인 등용문이자 미술가들의 활동무대로서 기능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당시 조선인 미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미술가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왜색의 침투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 장르에 걸쳐 출품자가 수적으로 대등하였기 때문에 왜색의 침투는 극히 무감각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회화인 동양화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화법과 일본화법의 구분이 비교적 쉽게 파악될 수 있으나 서양화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근대적 조형수법이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구분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동양화 역시 일본에 유학한 미술지망생들이 일본화과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당시 일본의 미술학교는 일본화과와 서양화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동양화과는 없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일본화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동양화에서의 왜색은 먼저 채색기법과 윤곽선 없이 흐리게 처리하는 朦朧體에서 두드러졌다.

尹喜淳은 《조선미술연구》속에서 왜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양화에 있어서 일본 여자의 의상을 연상케 하는 색감이라든지 동양화의 일본화 도안풍의 화법과 도국적 필치라든지 이조자기에 대한 다도식 미학이라든지 … (윤희순, 《조선미술연구》, 서울신문사, 1946).

이상의 지적에 보이는 왜색의 실제파악이 색채와 기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화의 성립이 저들의 장식적인 장벽화의 전통을 근대적 리얼리즘과 접목시킨 것으로 짙은 채색기법은 왜색의 대표적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沒線彩畵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묘의 배제와 도안풍이 왜색의 특징적인 요소로 꼽힌다.

동양화에 비해 서양화에 있어 왜색의 특징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서양화를 일본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서양화 속의 왜색 요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심미적 태도, 감성의 문제로 확대되어 질 수밖에 없다. 윤희순이 지적한 바 ‘일본 여자의 의상을 연상케 하는 색감’이라는 것은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이며 그림으로써 때로 추상적 미공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어찌면 이 문제는 해방 직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기보다 이후 오랫동안 우리가 점검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왜색이 완전히 극복되었는지, 우리 미술 속에 일본적 잔재가 없는 것인지는 아직도 우리 미술의 주요한 논의로서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왜색을 탈피한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대안은 다름 아닌 민족미술이다. 민족미술의 건설은 새 나라 건설이라는 지상과제와 맞물려 미술계의 뜨거운 과제의 하나였다. 이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 많은 논의가 우리 문화(전통)와 관계된 것이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언급 중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고유문화의 전통을 진실로 해방시키고 다시 그 장단을 검토함으로써 그 장치를 계발 육성시켜 가는 일면에 과거 조선이 가졌던 봉건적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의 선진문화사상의 장치도 동시에 이를 수입함으로써 신세계가 요구하는 가장 진실한 문화, 가장 항구적 생명을 가진 문화를 이 땅에 확립시킬 수 … (김주경, <문화건설의 기본방향>, 《춘추》, 1946년 2월).

… 조선의 자연과 민족성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 (김주경, <조선미술의 세계적 지위>, 《신문학》, 1946년 4월).

… 나는 조선민족의 문화가 타민족의 문화에 비교하여 월등히 우위를 점령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민족의 문화가 뽀는 향기가 타민족의 그것과 판이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로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요 또 세계문화의 대열에 병립할 수 있는 소이를 말할 따름입니다 … (김용준, <민

죽문화문제), 《신천지》, 1947년 1월).

… 깊은 애정과 이해와 체득과 그리고 진보적인 의식획득 없이 오직 형식상으로 조선 의상을 묘사하였다고 민족미술이 될 수 없으며 농민 노동자를 그렸다고 프롤레타리아 미술이 될 수 없는 것 … (윤희순, <고전미술의 현실적 의의>, 《경향신문》, 1946년 12월 6일).

민족미술 건설은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점이 위의 인용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족미술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느냐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찾을 수 없다. 해방 3년을 지나면서 한 吳之湖의 다음 언급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미술운동의 근본적 지표인 신민족미술의 수립은 상념적으로 그 문턱에 발을 디디놓았을 뿐이오 오직 명확한 방법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 병행되어야 하는 그 실천활동의 하나로서의 미술의 대중화 문제도 관념적으로 초조할 뿐이오 실천적 추진을 갖지 못하고 8·15변혁의 제3년을 맞이하였다(오지호, <해방이후 미술계 총관>, 《신문학》, 1946년 10월).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제안한 경우는 다음 두 예에서 찾을 수 있다.

30여 년간 몰각되다시피 한 고전의 새로운 탐구와 검토가 재의되는 것이다. 단순한 복고주의로서 고전을 우상화하여 향수의 회상거리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는 감상적인 탄식과 이미테이션 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이것은 골동취미에 불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재와 혜원의 작품에서 이조 봉건사회의 모순과 특질과 또 그들의 혁명적인 정신과 묘사의 기법에서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현대작가의 현실적인 창작에 큰 시사와 교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탐구의 수법이 기계적인 모방에서 탈출하여 현실의 역사성에 입각한 비판적인 것이고 또 시대감각에 예민한 작가라면 사수도와 석굴암·청자·도암초상·투건도 등에서 가지가지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윤희순, <고전미술의 현실적 의의>, 《경향신문》, 1946년 12월 6일).

첫째는 한민족미술이 될 수 있는 제일 요건은 그 민족 전체에 공통되는 감

성에 쾌적한 것이라야 한다.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명랑하고 선명한 색채를 좋아하고 요구한다. ... 그러므로 새로운 미술은 이와 같은 조선인의 생리적 감각과 감정적 요구에 적응할 것을 제일 요건으로 해야할 것이다.

둘째, 민족이 어떤 소수인을 지칭함이 아니라면 민족미술이란 본질상 국민에 속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 감정을 반영하고 그들의 생활 의욕을 앙양하는 예술, 즉 국민의 벗이라야 할 것이다(오지호, <해방이후 미술 총평>, 《경향신문》, 1946년 12월 5일).

앞선 윤희순의 제안은 새로운 민족미술의 탐구가 고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 작품을 재현해 놓자는 복고적 취향은 안되고 과거 작품 속에서 영양소를 채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역사성에 입각한 비판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당대 현실에 입각해서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민족미술의 실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임을 완곡하게 표명해주고 있다.

뒤의 오지호의 제안은 한국인의 감정, 보편적 감각의 토대에서 새로운 민족미술을 세워야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우리 민족을 천성적으로 건강하고 고급한 감각인 명랑하고 선명한 색채를 좋아함을 강조하면서 신민족미술이 전체 국민이 호응하는 감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왜색 탈피와 민족미술 건설에 이어 미술계의 현안으로 자주 거론된 것은 계몽적인 차원의 미술 대중화와 생활화였다. 이는 미술이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아탑의식을 벗어나 미술을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 침투시키려는 일종의 문화양양의 절실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조선미술가동맹과 조형예술동맹이 발표하고 있는 강령 가운데 민족미술 건설과 함께 이 점이 천명되고 있다.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적극적 육성”, “미술의 계몽운동과 아울러 일반대중 생활에 미술을 침투시킴에 노력함” 등이 이들 단체가 내놓은 강령의 하나이다. 오지호 역시 해방 이듬해 발표한 미술계 동향에 대한 총평 가운데 신민족미술의 수립과 더불어 실천되어야 할 활동의 하나로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술의 대중화 문제도 관념적으로 초조할 뿐이오 실천적 추진을 갖지 못하고”라는 대목은 미술이 전문가 전용물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미술의 대중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고 있다.

金基稔 역시 미술의 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미술운동과 대중화 문제>¹⁾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 미술의 전통과 유산인 고서화 및 고도기 등을 특정계급의 소유물에서 해방시켜 일반대중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미술학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대중의 미적 생활 향상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미술교재의 편찬과 미술잡지의 간행 및 대중 속에 침투할 수 있는 시대에 걸맞은 전람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미술이 대중에게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의 생활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朴峽賢은 미술의 대중화를 우리의 생활미를 회복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절되었던 국가사회를 재건하는 동시에 특수한 우리의 생활미를 다시 찾아 옛날부터 흘러오던 생활형식과 풍속 중에 새로운 반성을 지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듯 해방공간에서 미술의 대중화, 미술의 생활화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새나라 건설, 신민족미술 건설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일반 대중의 미술에의 계몽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절실성의 반영이라고 본다. 미술을 상아탑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미술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대중화·생활화는 그만큼 멀어져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의 생활화와 동시에 절실하게 구현되었던 것은 현실의 역사성에 입각한 비판적 감각으로서의 새로운 리얼리즘의 주창이었다. 리얼리즘은 단순한 이념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가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신의 수용으로서 현실주의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李快大가 독도사건(미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어선이 공격당한 사건)을 테마로 그린 조난을 두고 한 朴古石의 비평은 당시 현실주의에 대한 미술가 일반의

1) 김기창, <미술운동과 대중화 문제>(《경향신문》, 1946년 12월 5일).

인식을 대변해주고 있어 흥미를 끈다.

독도사건의 약소민족의 비애를 민족적인 충동에서 관심한 조난은 이 작가의 시대적인 감수성을 이야기하지만 관념적인 감동에 그치어 버리어 안일한 과거의 수법을 답습하였을 뿐 새로운 아무런 추궁도 없는 것은 평범하다. 바꾸어 말하면 의욕적인 구성과 인물의 아름다운 포즈는 크게 살 수 있으나 애매한 인물이라든가 바위에나 피부의 물질감의 등한한 취급은 치명상이다(박고석, <미술문화전을 보고>, 《경향신문》, 1948년 11월 24일).

리얼리즘에 투철한 작가의 작품에서도 현실에의 감동보다 관념적인 감동이 앞선다고 지적한 대목은 당시 전반적으로 비판적 현실감각의 빈곤을 지적한 것이다.

(4) 미술대학의 출현

해방공간에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미술 교육기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서울대학교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창설되었고 이듬해 이화여대에 역시 미술과가 문을 열었다. 2년 뒤인 48년에는 홍익대학에 미술학부가 생겨 세 개의 미술대학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이 땅에 정식 미술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술지망생들이 일본으로 유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울과 지방에 일부 동양화가들에 의한 도제 교육 시스템인 화숙이 존재했지만 정식 커리큘럼을 완비한 교육제도는 불행히도 없었다.

해방 후 미술대학의 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리들에 의해 우리의 미술가가 길러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 하나요, 새나라가 되면서 걸맞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명분의 실현이 두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육 커리큘럼은 일본의 제도적인 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수진이 일본에 유학했던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교육내용이 자연 그들 자신들의 수업 내용에 준할 수밖에 없었다는 모순이 지적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민족미술이라는 관념이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인상이 강하다. 왜색의 탈피는 구체적인 제작의

방법을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울대 미술학부의 회화과는 특히 채색풍의 일본화적인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묘 위주의 문인화풍이 적극 진작될 뿐 아니라 현실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현실모티브의 취재가 적극 장려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서울대학에는 장발을 중심으로 회화에 金瑑俊, 장우성(동양화)·김환기(서양화), 조각에 尹承旭이 교수로서 영입되었다. 이화여대는 김인승·심형구·김영기·金景承 등이 교수로, 홍익대는 尹孝重(조각)·裴雲成(서양화)·陳瓚(서양화)·이상범(동양화)·이응로(동양화) 등이 교수로 초빙되었다.

〈吳光洙〉

3) 음악

(1) 시기구분과 음악사적 특징

한국 음악사상 해방공간(1945. 8. 15~1948. 8. 15) 3년은 남에 미군정과 북에 소군정이 통치하는 3년의 시기이지만, 이전의 일제강점기나 이후의 시기(1948. 8. 15~1950. 6. 25)보다 희망과 좌절이 격동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문화를 수립하는 과제, 그리고 분단을 막고 자주적인 통일문화를 수립하려는 이른바 민족음악 건설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었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의 독립의지와 민족음악 건설에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남북에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통치가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음악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¹⁾

-
- 1) 노동은, 〈해방과 분리공간의 음악사 연구Ⅰ〉(《낭만음악》 겨울호·창간호, 낭만음악사, 1988), 37~109쪽.
 ———, 〈해방과 분리공간의 음악사 연구Ⅱ〉(《낭만음악》 봄호·제1권 제2호, 낭만음악사, 1989), 4~140쪽.
 ———, 〈해방과 분리공간의 음악사연구Ⅲ〉(《낭만음악》 여름호·제1권 제3호, 낭만음악사, 1989), 4~183쪽.
 ———, 〈해방과 분리공간의 음악사 연구Ⅳ〉(《낭만음악》 가을호·제1권 제4호, 낭만음악사, 1989), 92~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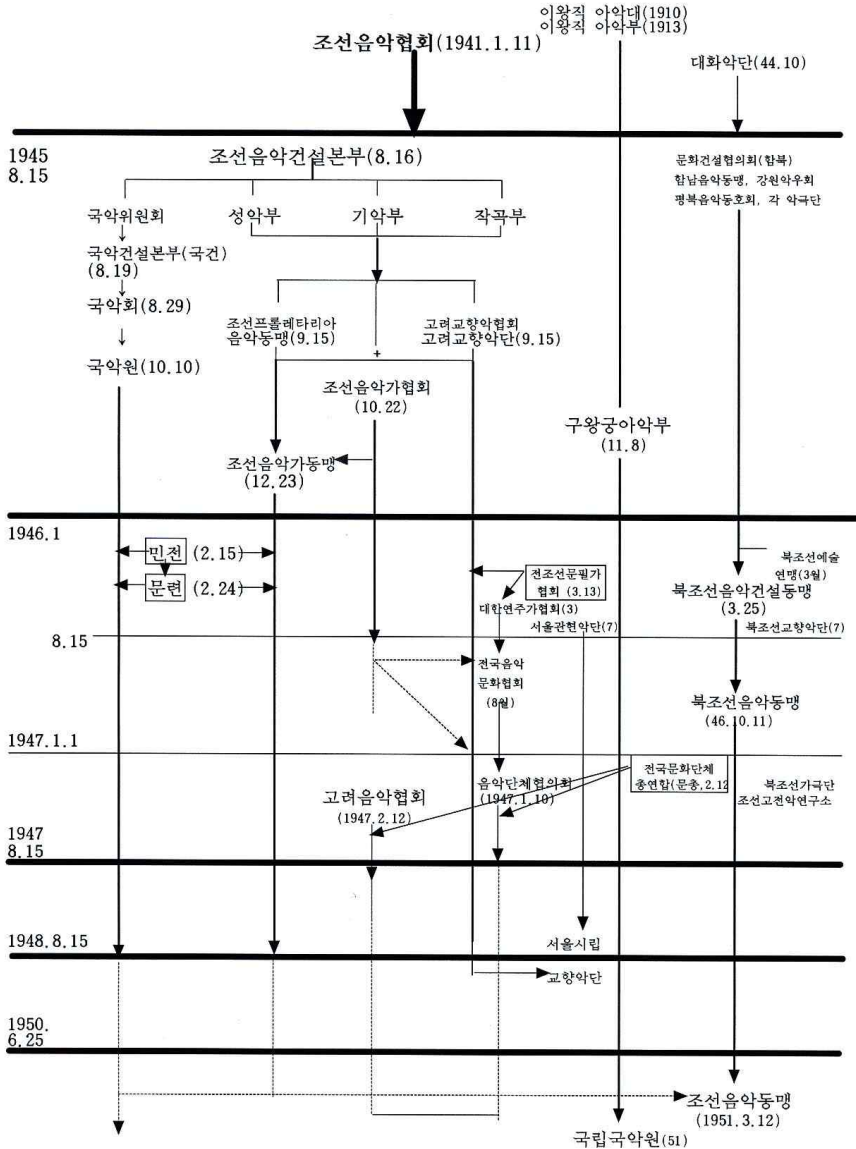
제1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시기로 악단을 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체들이 창립되는 기간이다. 8월 16일에 결성된 朝鮮音樂家建設本部, 여기에 분화·발전하는 두 개의 조직 결성, 즉 9월 15일의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과 高麗交響樂協會(고려교향악단), 그리고 10월 22일의 좌·우 합작을 꾀한 새로운 조직체 朝鮮音樂家協會, 끝으로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을 흡수하여 12월 13일에 朝鮮音樂家同盟이 결성되는 시기이다. 한편 전통음악에서는 李王職雅樂部(구왕궁악악부)와 달리 조선음악가건설본부의 ‘國樂委員會’가 10월 10일에 민중 국악운동을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국악원으로 개편·결성되었다.

제2기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47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으로 민족현실과 음악문화에 대한 해석이나 그 입장에 따라 크게 양분되는 시기로 민족좌파와 민족우익중도파 그리고 극우의 해외파가 형성되어 활동하는 시기이다. 민족좌파로 조선음악가동맹과 국악원이, 민족우익중도파는 蔡東鮮의 고려음악협회, 극우의 해외파는 玄濟明을 중심으로 한 계열이다. 제2기의 구분은 민족좌파의 음악운동이 1946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미군정과 관계당국에 의하여 금압이 강화되자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대응해 나간 前期와 1947년 8월 15일 직후 채동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이 좌파와 극우를 비판하면서 음악계 전면에 부각되는 後期로 구분된다. 제2기 전 기간 조선음악가동맹의 역량은 해방공간을 주도하였다.

제3기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이다. 미군정과 관계당국이 조선음악가동맹을 불법화시킴에 따라 우파진영의 입지가 전면에서 부각되고 새로운 질서가 유도되는 시기이다.

해방공간의 남북 음악활동은 다음 <표>와 같이 주요 악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표〉 해방공간기의 남북 음악사 전개 도표(----- 소멸, → 흡수, □→영향)



(2) 제1기 음악

일본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국 산하의 어느 곳이든 눈부신 아침으로 빛났다. 훼손된 민족정서와 친일음악 행위를 청산하여 민족음악을 정립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길이 음악계의 역사적 과제였다.

해방 당시 40대의 安基永(성악)·朴泰俊(작곡)·채동선(바이올린)·현제명(테너)·李鍾泰(음악교육)·金載勳(바이올린)·朴慶浩(피아노)·金世炯(피아노)·桂貞植(바이올린), 30대의 任東嫻(작곡)·李愛內(피아노)·金元福(피아노)·李興烈(피아노)·朴泰鉉(첼로)·金聖泰(작곡)·崔昌殷(바리톤)·朴榮根(평론)·鄭鍾吉(바리톤)·李範俊(평론)·愼幕(베이스) 등이 악단의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일본에서 학습한 제2세대의 朴容九(평론)·金順男(작곡)·李建雨(작곡)·朴殷用 등이 20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학습한 30대 전후 세대는 이미 1940년 전후로 귀국하여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 당시 악단 구성원의 역사인식이나 음악에 대한 해석·경험은 일제강점하의 국내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다. 20세기 초반에 음악활동을 한 김인식·이상준 등은 일제강점하에 원로음악인들이 되었고, 1930년대 이후에 활동한 현제명 등은 일제와 손을 잡고 악단을 주도하였으며, 1940년대 벼두에 악단에 합류한 김순남·박은용·박용구 등은 신진들이었다.

한편, 해방 당시 전통음악계는 60대로 丁元燮(북·장고)·咸和鎭(이론), 50대로 安基玉(가야금)·鄭應珉(판소리)·吳太石(판소리), 40대로 朴東實(판소리)·韓周煥(대금)·林芳蔚(판소리)·崔玉山(가야금)·朴綠珠(판소리), 30대로 朴憲鳳(교육)·金先得(피리·고수)·徐相云(대금)·姜章沅(판소리)·金千興(춤)·成慶麟·李炳星(가곡)·李珠煥(가곡)·趙相鮮(판소리)·申快童(거문고)·金炳昊(가야금)·金永胤(가야금)·金寶南(춤)·金允德(가야금)·李珠煥(가곡), 20대로 張師勛(이론)·孔基男(판소리)·金素姬(판소리)·林素香(판소리)·韓甲得(거문고)·朴貴姬(가야금 병창)·成錦薦(가야금)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민족음악을 수립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동연말의 제1기 기간 동안에 6개의 대표적인 음악단체를 결성하면서 흡수되거

나 정비되어 갔다. 즉, 최초의 조직체인 조선음악건설본부(1945. 8. 18),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1945. 9. 15)과 고려교향악협회(1945. 9. 15. 산하에 고려교향악단), 국악원(1945. 10. 10), 10월 22일의 조선음악가협회, 그리고 조선음악가동맹(1945. 12. 13) 등이 결성되었다.

1945년 8월 16일에 합의된 최초의 음악조직체 조선음악건설본부는 조선문학건설본부·조선미술건설본부·조선영화건설본부 등과 함께 ‘문화전선의 통일’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8월 18일에 협의체로 결성될 때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가. 조선음악건설본부

해방 직전부터 20대 후반~30대 초반인 김순남·姜長一·신막·이범준 등이 음악씨클을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 해방이 되자 8월 16일에 악단 조직을 발의하였다. 이들과 함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로부터 악단 조직 종용을 받은 음악인들이 함께 조직한 단체가 조선음악건설본부이다.²⁾ 조선문학건설본부처럼 조선음악건설본부도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 음악인들을 모두 망라하여 조직되었다.

조선음악건설본부는 중앙서기장에 박경호, 서기장에 채동선 외에 작곡부·기악부·성악부·국악위원회 등 양악분야 세 부서와 전통음악 한 부서를 포괄한 중앙위원회를 선정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중 김성태·박경호·안기영·安炳昭·채동선·함화진 등 4개 부서 위원장과 김재훈·김순남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5개 부서 중 ‘음악건설부’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이외에도 李想春·金慈璟·鄭榮在와 이흥렬 그리고 강장일·신막·이범준 등이 여기에서 활동하였다.³⁾ 그러나 이 조직은 해방정국의 현실 앞에서 합의와 원칙 없이 조직한 데다 친일경력, 정당이나

2) 박영근, 〈악단회고와 전망〉(《문화통신》 2-1, 통권 7호, 문화통신사, 1946), 10쪽.

3) 이상춘·김자경·정영재는 1945년 10월 18일 조선음악건설본부 주최 ‘미군환영음악회’ 출연자로서, 그리고 이흥렬·강장일·신막·이범준은 조선음악건설본부 조직 발의자로 이 기간에 활동하였다.

이흥렬, 〈나의 인생, 나의 예술〉(《예술 원보》 20, 예술원, 1976), 28쪽.

박영근, 〈음악개관〉(《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문화사, 1947).

각종 사회정치단체에서 활동, 경제적 기반의 약세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조선음악건설본부의 ‘문화전선의 통일’ 슬로건은 막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음악건설본부의 ‘국악위원회’는 해방 전 조선음악협회의 조선악부(산하의 조선음악단과 조선가무단)를 비롯하여 조선창극단·이왕직아악부·조선정악전습소 등의 대표들과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그리고 朴憲鳳의 노력으로 ‘국악건설본부’로 발전하였다. 8월 29일 국악회는 10월 10일 ‘국악원’으로 전환하였지만, ‘아악부(구왕궁)’와는 일부 통합한 것이었고 또한 중심인물들과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⁴⁾ 더욱이 조선음악건설본부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요청한 ‘문화활동의 기본적 일반정책’ 즉, 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소탕하고 이에 침윤된 문화반동에 대하여 투쟁 전개, ② 봉건적 문화의 요소와 잔재, 특권 계급적 문화의 요소와 잔재, 반민주적 지방주의적 문화의 요소와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적 기초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 전개, ③ 민족문화의 계발과 양양, ④ 문화의 통일전선 형성, ⑤ 각 부서의 구체적 활동을 위한 논의의 전개 등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이론이나 그 실천방안에 있어 한계를 노출시키면서,⁵⁾ 치열한 해방정국 속에서 해체되어 갔다.⁶⁾

상대적으로 일군의 비판진인들, 김순남·강장일·신막·이범준 등은 프롤레타리아 음악운동으로 기울어졌다. 이와 달리 박경호·함화진 등은 현제명과 함께 우익 중심의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회’(1945. 9. 4, 위원장 권동진)를 조직하면서 실행위원(설비부)으로 활동하였고, 채동선은 우익의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시(1945. 9. 7)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현제명은 반공세력이면서 친일세력이 집결한 한국민주당 발기인에 음악인으로는 유일

4) 장사훈, <국악15년의 발자취>(《국악개요》, 정연사, 1961), 345쪽 참고.

5)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서기국은 1945년 8월 31일에 조선음악건설본부 등에게 문화활동에 관한 일반정책을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요청하였다(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문화전선》, 1945. 11. 15 참고).

6) ‘8월테제’는 해방공간의 음악흐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혁명의 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그 과업과 반동적 정치노선을 비판한 이 ‘8월테제’는 음악인을 포함하여 모든 문화단체가 결성되어 당의 지도 아래 활동함과 동시에 보조단체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게 선정되어 인민공화국 타도·임정 절대지지·미군정예의 협조활동에 참가하였으며, 한민당 창당대회(1945. 9. 16) 직후 한민당 문교부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다.⁷⁾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음악인이거나 일군의 신진비판세대들, 그리고 교향악단의 조직을 원하는 집단들이 조선음악건설본부에서 속속 이탈하였다.⁸⁾ 1945년 9월 15일에 두 개의 단체,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과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이 조직되면서 조선음악건설본부는 해산의 운명을 맞는다.

음악활동도 노래운동을 제외하고는 부민관(1945. 10. 18)에서 안병소·이상춘·김자경·정영재 등이 출연한 미군환영음악회 개최가 조선음악건설본부의 유일한 음악회이었다. 이때에는 조선음악건설본부·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고려교향악협회 등 세 조직체가 각자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전개해 갔다. 해산상태에 있던 조선음악건설본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조선음악건설본부는 1945년 10월 22일 “연합군 환영준비를 위한 잠정적 기관이듯 음악건설본부는 그 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해소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체되어 갔다.⁹⁾ 민족현실 앞에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음악건설본부는 해소성명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조선음악건설본부·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고려교향악협회가 함께 ‘음악가단체대회’(1945. 10. 22)를 열고, 조선음악가협회를 결성함으로써 조선음악건설본부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한편, 조선음악건설본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민족에게 일본 군가풍의 노래가 아닌 ‘해방의 노래’를 새로이 지어주는 일이었다. 이미 해방 전에 김순남은 〈자유의 노래〉를 창작하여 준비하였다가 해방이 되자 해방가요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노래의 창작과 보급이라는 조선음악건설본부의

7) 玄濟明은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 獨孤巖은 한국민주당 경성지부 발기인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현제명은 9월 16일 한민당 창당대회에 고려교향악단을 첫 출연시켰으며, 9월 21~22일의 한민당 중앙부서를 조직할 때 문교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독고선은 1947년 1월 현제명의 미국 방문으로 고려교향악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韓國民主黨發起人名簿〉와 〈韓國民主黨京城支部發起人名簿〉참고).

8) 《1947년도 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6), 300쪽.

9) 주보 《건설》1(건설출판사, 1945. 11), 14쪽.

노래운동 전개는 바로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음악 건설 과제의 실천이었다.

조선음악건설본부 작곡부 위원장인 김성태의 〈아침해 고을시고〉(林學洙 작사)와 〈독립행진곡〉(朴泰遠), 그리고 성악부 위원장 안기영의 〈해방전사의 노래〉(林和), 작곡부 위원 김순남의 〈건국행진곡〉(金泰午), 역시 같은 위원인 이 건우의 〈여명의 노래〉(華岩 작사), 박은용의 〈충성가〉(정몽주), 羅運榮의 〈건국의 노래〉(金泰午), 이흥렬의 〈농군의 노래〉(궁상현 작사) 등이 잇달아 창작되고, 방송이나 거리에서 노래가 보급되었으며, 이 노래들이 실린 《임시 중등 음악교본》 등의 음악교과서가 각급 학교현장을 통하여 호응을 받았다.

미군정의 기본학제는 6-3-3-4제이었고, 국민학교는 음악과 체육을 한 교과목으로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음악교과를 필수로서 주당 2시간,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3시간을 편제시키고 있었다. 음악교사들이 사범학교 본과와 부설교원양성과, 교원양성기관 등에서 배출되고 있었으나 신학제 편제에 태부족이었으며, 음악교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¹⁰⁾ 해방 이전의 전국 10개(서울·개성·청주·공주·대전·광주·대구·진주·춘천) 사범학교에 초등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1946년에는 충주·군산·목포·순천·강릉·부산 등 6개 지역에 사범학교를 증설하여 교사양성을 확충하였지만, 충원이 늦어지고 있었다. 교재도 초등은 미군정 문교부의 14종이었으나 보급이 늦어지고 있었고, 중등인 경우는 15종 이상의 음악교과서가 검인정으로 있었으나 상당 학교에서는 프린트본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 음악과·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숙명여자대학 음악과·조선예술원 음악과·경주예술학교 음악과·부산음악전문학교 등을 있었으며, 그 밖의 전공별로 개인연구소들이 있었다.¹¹⁾

10) 〈배우려도 책없는 설움〉(《한성일보》, 1946년 3월 4일).

〈임시미봉의 교재〉(《한성일보》, 1946년 9월 1일).

11) 이화여자대학은 1945년 4월 일제의 의하여 경성여자전문학교로 개명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0월 개학예정으로 종합대학이 되어 전공학과로 음악과를 두었다. 전문부와 대학부에 각 3년 과정이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는 현재명이 1943년 4월에 창립한 경성 대화숙 내 경성음악연구원을 1946년 2월 9일에 경성음악학교(교장 현재명, 교무주임 김성태)로 발전시키다가 국립대학 설립안에 따라 194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발전시켰다. 초대 학부장은 현재명이었다. 숙명여자대학 음악과는 1948년에 대학체제로서

나.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

분명한 해방의 민족이론 없이 성급히 악단을 망라하여 조직한 조선음악건설본부가 민족음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앞서 처음부터 현 단계에 관해 뚜렷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일군의 신진비판세력이 조선음악건설본부와 결별하였다. 그리고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을 1945년 9월 15일에 결성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음악사에서는 처음으로 음악인에 의한 진보적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미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의 출현은 해방 직전부터 신막·이범준·김순남·강장일 등이 중심이 되어 지하 음악씨클인 ‘聲研會’를 조직한 데서 예고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성연회는 조선음악건설본부를 “공중 누각적이요 특권적인 경지에서 이탈하지 못한 단체”로 규정하고, 전면에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을 결성하였다.

1945년 9월 28일 서울 관훈동 임시회관에서 결성식을 가진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은 9월 30일에 문학·연극·미술동맹측과 함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을 결성할 때 합류하여 집단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들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의 구성은 위원장에 신막, 서기장 이범준, 작곡부장 김순남, 기악부장 윤기선, 성악부장 정종길을 선임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신막·이범준·김순남·윤기선·정종길·강장일·朴賢福·李瑚燮·김혜란·金賢淑·이건우·李康烈·鄭熙錫 등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강령은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음악 건설을 기함과 우리는 반동적 음악에 대한 적극적 투쟁을 기함”이었다.¹²⁾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은 성숙한 기량의 음악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전 조선 음악가를 민족통

신설되고 1955년에 음악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인가된 남산의 ‘조선예술원’은 1947년 4월 입학예정으로 국악과 양악전공의 음악과를 영화과·연극과·미술과·무용과와 함께 본과 3년과 연구과 2년과정으로 신설되었다. ‘경주예술학원’은 1946년 5월 5일에 경주의 바이올리니스트 李義星이 설립한 전문과정으로 성악·기악·작곡전공을 두었고, 1948년 3년제의 경주예술학교로 발전시켰지만, 1952년 정부의 폐쇄조치로 폐교되었다. 1948년 5월 사립으로 부산음악전문학교가 신설되고 김학성 교장이 주도하였다.

12)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 위원 중 신막·이범준·김순남·정종길·강장일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의 중앙위원이자 중앙상임위원이었다.

일선선적인 성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전음악연구회·향토음악연구회 등의 연구단체와 지방별·학교별·직장별 음악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지도하여 음악 대중의 확충을 꾀하고자 했다. 연극동맹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 각 가극단·악극단 등을 동맹의 영향하에 두고 곡과 가사들을 제공하여 비속화를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음악학교·음악강습소를 개설하여 음악인을 양성하고, 공장·사업장 등에 음악씨클을 두어 지도하는 문제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¹³⁾ 그리고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은 최초의 지부를 인천에 두었다.¹⁴⁾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은 첫째로 프롤레타리아 음악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신막과 정종길을 중심으로 비평활동을 전개하였고,¹⁵⁾ 둘째로 프롤레타리아의 광범위한 지지와 중간층 획득을 위해 김순남·이건우 등의 민요적인 요소를 숙고한 노래운동과 예술제·순회공연을 개최하였으며,¹⁶⁾ 셋째로 비동맹 음악가와 통일전선적인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맹원들이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연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고려교향악단 단원 또는 각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의 일부 음악인들이 프롤레타리아 음악운동을 대중화운동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성에 기울어 음악의 독자성과

13) 한효, <예술운동의 전망, 당면문제와 기본방침>(《예술운동》 창간 12월호, 조선예술연맹, 1945), 9쪽.

14) 인천지부는 원래 인천 신문화협회의 산하 음악단체로서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인천지부이었다. 1945년 8월 말에 李弼商·崔星鎭·申鉉瓚 등이 중심이 되어 '인천음악협회'로 독립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9월 30일의 (羅災동포구제음악회 개최, 11월 4일 중앙의 愼慕·尹琦善·鄭熙錫 등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하여 전인천남녀현상음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0일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인천지부로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문화통신》, 문화통신사, 1946년 1월 20일).

15) 신 막,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의 역사적 맥아>(《예술운동》 창간 12월호, 조선예술연맹, 1945), 21쪽.

정종길, <근로대중의 음악>(《인민예술》 창간 12월호, 연문사, 1945), 17~20쪽.

16)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우리의 노래> 등이 창작되어 1945년 11월 5일~12월 24일 기간의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국청년단체총연맹·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국부녀총연맹 등 각종 집회에서 독창·제창·합창단 운영으로 보급시키면서 프롤레타리아음악운동을 펼쳤다.

전문적 입장을 망각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¹⁷⁾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의 해소에 따라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도 해소되어 1945년 12월 23일에 결성되는 조선음악가동맹으로 흡수되었다.

다.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해방된 지 한 달 만에 현제명은 음악인을 규합하여 9월 15일 고려교향악 협회를 결성하고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해방공간 악단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현제명은 해방 직전 일본제국주의 침탈시대에 경성후생실내악단의 이사장이자 조선음악협회의 이사, 그리고 경성음악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해방 후 미군이 ‘남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등장하자 미국에 유학한 바 있는 데다 한민당(한국민주당) 당원이었으므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방 후 생산 감축, 높은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등 경제적 난관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므로 조선음악건설본부에서 탈퇴한 음악인들은 새로운 관현악단의 출현을 위하여 현제명 중심의 고려교향악협회와 그 산하의 고려교향악단이 조직되었다.¹⁸⁾

고려교향악협회는 “조선 음악 예술의 질적 향상과 이에 관한 사업의 발전을 추진함”이 목적이자 강령이었다. 명예회장은 러치(Archer L. Lerch) 미군정청 제2대 장관(1945년 12월 취임), 이사장 현제명, 사무국장 金寬洙, 총무 金生麗, 지휘 계정식·포크너(Faukner, 미육군중위)·김성태·林元植 등이었으며 회원은 김성태·김원복·金學相·金炯魯·김해란·南宮堯高·李仁範·李仁亨 등이었다. 고려교향악단의 첫 무대 출연은 한민당 결성식(1945. 9. 16)의 축하공연이었다. 고려교향악단은 1946년 초 63명이 되어 2관 편성의 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¹⁹⁾ 1945년 10월 수도극장에서 계정식 지휘의 창단연주회를

17) 김순남, <악단 회고기>(《백제》2-2, 백제사, 1947), 16쪽.

18) 현제명은 이미 건국준비위원회에 불참하고 한국민주당(한민당)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었다.

19) 고려교향악단(Korean Symphony)의 단원수는 해마다 유동적이었다. 1945년 9월 창립 이후 30명, 1946년에 50명, 1947년에 60명, 1948년에 65명이었다. 1947년부터 독고산 체제가 될 때까지 현제명에 의하여 주도된 고려교향악단은 1946년 초까지 김성태와 계정식 그리고 포크너(제3회공연, 3. 16)의 지휘, 1946년부터 1948년 6월까지 임원식이 지휘하였다. 포크너는 미 육군중위로서 미군

필두로 ‘미군장병 위문연주회’(11. 4), ‘조선독립축하 대음악회’(12. 10) 등을 연주하여 악단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고려교향악단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모차르트·베토벤·슈베르트·스트라우스·차이코프스키 등 양악을 중심으로 연주하였다.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은 제1기 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다가 제2기에는 악단 중심체가 되었다. 1948년 4월에 한국방송국(HLKA)과 한달에 두 번 방송하기로 계약하였다.²⁰⁾ 그러나 제3기는 고려교향악단의 적자운영으로 여기에서 탈퇴하여 조직한 서울관현악단과 유명한 ‘땅뽕기’ 갈등을 거치면서 점차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²¹⁾

라. 구왕궁아악부(이왕직아악부)

우리 국악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장악원 장악과에서 이왕직아악대(1910)로, 다시 이왕직아악부(1913)로 변천하면서 끊임없이 약체화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궁세계 전통의 음악을 지켜왔다. 해방과 함께 이왕직아악부는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법령 제26호에 의거, 이씨 왕조의 명칭 변경 공포에 따라 舊王宮으로 변경되자 자연히 구왕궁아악부로 직제가 바뀌었다.

구왕궁아악부는 강령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였다. 아악사장 대리에 張寅湜, 총무부에 성경린·奉海龍·徐相云·李德煥·洪元基, 장악부에 李載天·김보남·金

정 문교부 음악과 협동과장이었다. 고려는 1946년 6월까지 22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1947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미국관리들을 위한 8번의 연주회를 가졌다(네 번은 미군정청극장, 네 번은 시청건물). USAFIK/G-2(*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WII. United State Army Forces in Korea 24 Corps G-2 Historical Section*), 24 June 1948, 25 June 1948.

20) *Ibid.*

21) 고려교향악단은 고려교향악협회의 세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회원제와 외부 기증 그리고 매표 수입이 주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1948년 6월 1일부터 재무부 법령 제193호에 의거하여 극장입장세가 10할 과세됨에 따라 객석 입장이 반이나 줄어들자 고려교향악단 역시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다. 매달 단원 봉급 40만 원, 이틀간의 공연비용 10만 원(극장 사용료, 피아노 사용비 등), 1회의 지휘비 5만 원 등의 비용에다 극장 수입의 50% 납세로 이후 6만 5천 원 정도의 적자로 운영되었다(*Ibid.*; 《새한민보》, 1948년 6월 중·하순호, 4쪽; 채동선, 〈평화정책의 확립〉, 《평화일보》, 1948년, 9월 3일).

星振, 교양부에 이주환·이재천·이덕환을 비롯하여 아악사로 金光得·김보남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의 정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악사장이었고 조선음악협회 조선음악부 부장으로 전통음악과 무용계를 관장하였던 함화진이 구왕궁아악부에 있지 않고 민악 중심의 국악원 위원장으로 활동한 점이었다.

구왕궁아악부는 부민관에서 몇 차례의 미군 위문연주, 방송을 통한 아악해설, 춘천·개성 등의 초청 순회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였지만, 성경린이 지적하듯 “아악이 여러 사람의 아악일 수 있는가에 조금 생각이 부족했음을 아악인은 뉘우쳐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²⁾ 아악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 국회에서 〈아악부 국영안〉이 통과되었다. 1949년부터는 정부예산이 부분적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1951년에 드디어 ‘국립국악원’이 탄생하였다.

마. 국악원

해방 이전의 조선음악협회 ‘조선 음악부’ 부장인 함화진, 상무이사 박헌봉, 이사 金錫九·崔景植이 해방과 함께 조선음악건설본부의 ‘국악위원회’로 범국악인을 망라하여 출발하였다. 조선음악건설본부의 국악위원회는 기존의 구왕궁아악부와 일부 통합을 시도하였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박헌봉의 노력으로 국악위원회가 ‘국악건설본부’(8. 19)로, 다시 국악건설본부가 8월 29일에 국악회로 발전, 조선음악건설본부에서 독립하였다가 국악원으로 확대결성(1945. 10. 10)되었다. 강령은 “조선국악의 체계화, 조선민중에게 개방, 신조선음악건설”이었다.²³⁾ 국악원의 조직은 위원장 함화진, 부위원장 박헌봉, 총무국장 柳起龍, 문화부 함화진(겸 부장)·김윤덕·김천홍·丁南希·崔景植·이병성, 사업국장 任曙昶 등이었다.²⁴⁾ 국악원은 또한 창극단인 國劇社를 결성

22) 성경린, 〈아악담의〉(《신천지》 4-8, 서울신문사, 1949), 220쪽.

23) 강령의 전문은 “一. 세계 음악사상에 독특한 조선 국악의 원리를 파악하여 조선 국악의 체계적 이론을 수립하고 진지한 연구와 완전한 발전을 기함, 一. 조선 전통의 예술을 확보하고 과거 특권계급에게 독점되었던 음악예술을 조선민중에게 절대 개방을 기함, 一. 본악이나 외래악은 물론하고 저열경부한 음악은 철저히 배격하고 전통적 유아명랑하고 순수한 신조선음악 건설을 기함”이었다.

24) 《1947年度 朝鮮年鑑》(조선통신사, 1946), 349쪽.

(1945. 11. 5)시켜 직속 창극단으로 두었다.

국악원은 창극·민요·풍물·농악을 삶의 예술로 역사화시키고 풍물채보를 체계화하였으며, 조선음악가동맹측 작곡가들과 국악에 관해 쌍방간의 대화를 전개하고, 조선문화단체총연맹에 가입하여 문화전선을 공동으로 펼쳤다.

그리고 국극사 산하 직속창극단을 비롯하여 130여 명의 모든 창악인들이 동참하여 ‘대춘향전’을 창립공연(1946. 1. 11~18, 국제극장)으로 공연하였다. 이 공연을 계기로 국극사 이외에 국극협회·조선창극단·金演洙창극단·임방울 일행 등 5개 단체가 국악원산하 단체로 제2기 전기에 조직되어, 해방공간 제 1·2기를 국악원이 주도하게 되었다. 국악원은 해방공간의 민중에게 ‘창극문화’를 민족문화 계승으로 꽃피우게 하였다.

그러나 1947년 8월 직전부터 미군정과 수도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국악원을 좌파단체로 불법화하고 위원장 함화진을 검거하였다. 이로 인해 부위원장인 박헌봉이 위원장으로, 사퇴한 간부들을 대신하여 양악인 채동선이 연구부장으로 바뀌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그 활동이 위축되었다. 더욱이 <아악부 국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48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있는 데다가, 함화진이 세상을 뜨자 국악원 조직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후 6·25전쟁이 일어나자 공기남·안기옥·박동실·임소향·丁南希·조상선·최옥산 등 주로 판소리(창악)와 가야금 연주자가 월북하였다.

바. 조선음악가협회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과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결성으로 타격을 입은 조선음악건설본부는 1945년 10월 22일 “연합극 환영 준비를 위한 잠정적 기관이던 조선음악건설본부는 그 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해소한다”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해소한다. 이에 앞서 악단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 고려교향악협회측의 현제명·김성태,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측의 신막·이준범·박영근, 조선음악건설본부측의 채동선·박태준·崔熙南·韓甲洙 등은 새로운 조직체 결성을 위한 소집 위원이 되어 기독교청년회관 강당에서 10월 22일 조선음악건설본부 해소와 함께 ‘전국음악가단체대회’를 열어 조선음악가협회를 결성시켰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19번지에 사무실을

둔 조선음악가협회는 조선음악건설본부·고려교향악단 그리고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 등이 중심이 된 조직체였다.

조선음악가협회의 강령은 “친선도모와 자주독립 축성, 음악예술의 향상과 발전, 음악가의 생활향상 도모”였다. 중앙위원으로 위원장 李永世, 부위원장 신막, 상무 박영근, 위원으로 이흥렬·안병소·박태현·김성태·한갑수·최희남, 고문으로 계정식·박경호·채동선·김재훈·박태준·안기영 등이 선임되었다.²⁵⁾

조선음악가협회의 결성은 음악인에 관한 실제적 관심과 자주독립에 관한 역할 등 조선음악건설본부보다 강령이 구체화되어 통일적 조직체로 보여졌다. 그러나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이 조선음악가동맹으로 재결성하여 해방공간 제2기부터 흔들릴 수 없는 민족음악이론과 치열한 사회 인식으로 활동하고,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역시 활발한 연주활동을 독자적으로 이루자 조선음악가협회의 대동단결은 무색해 질 수밖에 없었다.

‘전재동포 세말 구제음악회’(1945. 12. 28)와 ‘신춘음악 대연주회’(1946. 1. 14), ‘3·1절 기념 야외음악회’(1946. 3. 1) 그리고 조선음악가동맹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1946. 6. 29~30)를 끝으로 조선음악가협회의 존폐문제가 부각되었다.²⁶⁾ 이런 와중에 1946년 8월 결성된 전국음악문화협회

25) 회원은 계정식·김성태·김세형·김순애·김원복·김영애·김인수·김재훈·김형로·나운영·문학준·박경호·박영근·박은용·박태준·박태현·송진혁·신막·신재덕·안기영·안성교·안병소·유경손·이강렬·이관옥·이상춘·이순희·이영옥·이은순·이인범·이인수·이흥렬·윤락순·장보원·정정식·정희석·채동선·최희남·한갑수·한평숙·현재명 등 악단을 망라하여 조직되었다.

26) 신춘음악 대연주회는 조선음악가협회 창립기념 연주회(2. 14~15, 국제극장)로서 조선인민원호회와 중앙신문사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의 출연진과 작품은 해방공간의 음악인들과 음악회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음악회였다. 1일과 2일이 약간 달랐다. 金永義 지휘와 尹寶姬 반주의 梨花女大合唱團 출연, 李銀順 소프라노독창과 張寶媛 반주의 李建雨 작곡 〈黎明의 노래〉와 마스카니 아리아, 李康烈 첼로독주와 金元福 반주, 李想春 테너독창과 金元福 반주의 洪蘭坡의 〈봉선화〉와 오페라 아리아, 李仁範·崔熙南·宋鎮赫·金炯魯 등 서울男性四重唱團과 金永愛 반주로 〈명당구리 장가가네〉 등, 李順熙 알토독창의 외국가곡과 아리아, 鄭熙錫 바이올린독주와 金元福 반주로 金載勳 작곡 〈비가〉 외, 소프라노 韓平淑과 申載德 반주의 金順男곡의 〈人民의 나라〉와 〈獨立的 아침〉 외 오페라 아리아, 바이올린 文學俊·비올라 安聖敎·첼로 李

에 일부가 흡수되자, 모든 악단 구성원들은 조선음악가협회 존속을 희망하여 1946년 12월 2일 국악원·구왕궁아악부·고려교향악단·조선교육음악협회·음악문화협회·조선음악가동맹·서울합창단·종교음악협회·서울관현악단·울포이스4중주단·연악원·벨가토회 등이 발기인회가 되어 1947년 1월 10일에 조선음악협회의회로 재조직되었다.²⁷⁾

사.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은 1945년 12월 13일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의 해소와 조선문학가동맹이 결성될 때 함께 결성되었다. 조선음악가동맹은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이외에도 조선음악가협회의 일부를 흡수, 7대 강령을 발표하고 결성하였다. 조선음악가동맹은 해방공간 제2기 기간을 주도하고, 제3기부터는 비합법 단체로, 그 이후 시기는 해체되었다. 강령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음악의 소탕을 기함, 봉건주의적 유물 음악의 청소를 기함, 음악의 국수주의적 경향을 배격함, 악단의 반민주주의적 세력의 구축을 기함, 음악의 민족적 유산을 정당히 계승하고 외래 음악의 비판적 섭취를 함, 진보적 민주주의 민족주의 문화의 건설을 기함, 국제음악과의 교류협조를 기함”이었다. 임원은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안기영, 서기장 신막, 총무부장 이범준, 조직부장 박영근, 사업부장 최창은, 작곡부장 김순남, 연주부장 정종길 등이었다.²⁸⁾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은 김재훈·안기영·신막·정종길·이범준·박영근·최창은·김순남·이건우·鄭榮模·金薰·吳昌鎭·신용관·강장일·

康烈의 서울絃樂三重奏團의 베토벤 3중주곡(작품 8), 朴殷用 테너독창과 李英玉 반주의 羅運榮 곡〈건국의 노래〉와 金聖泰 곡〈말〉외, 첼로 金仁洙와 金元福 반주의 쇼팽 작품, 알토 柳慶孫과 羅運榮 반주의 외국 작품, 소프라노 李觀玉과 鄭貞植 반주의 이태리 작품, 바이올린 朴敏鍾과 金元福 반주의 비니아프스키 작품, 愼暮 베이스독창과 張寶媛 반주의 金順男곡〈勞動者の 노래〉와〈獨立의 아침〉외 러시아민요, 바이올린 李永世와 李仁秀·비올라 尹樂淳·첼로 羅運榮의 올페우스四重奏團의 모차르트 현악4중주 제4번 등이 공연되었다(〈朝鮮音樂家協會創立記念 新春音樂大演奏會〉, 1946년 2월 14일·15일, 國際劇場 팸플릿 참고).

27) 《예술통신》, 1947년 1월 10일 및 13일.

28) 1947년 2월 19일 음악동맹 제2회 중앙확대위원회에서 중앙서기장이 朴榮根으로 바뀌었다(《예술통신》, 1947년 2월 21일).

河吉漢·金昌燮·朴南洙·盧光郁·李根樂·신현영·尹泰燮·韓平淑·張寶媛·崔星鎭 등이었다. 또, 조선음악가동맹은 강철수 등의 서울지부,²⁹⁾ 신형찬 등의 인천지부, 그 밖에 춘천지부·대구지부·부산지부·광주지부·대전지부 등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음악동맹 합창단’과 윤기선·정희석·趙念·이강렬 등의 ‘음악동맹 현악4중주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 기타

이 밖에 지방음악단체로 8월 하순경의 인천음악협회, 9월에 목포예술문화동맹, 광주음악연구회, 尹伊桑이 간사로 선임된 통영문화협회, 10월에 광양예술연구소, 광주성악연구회, 경주문화협회, 11월에 부산할렐루야음악연구소, 12월에 봉선화 동요회(서울) 등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에 창설된 평양중앙교향악단과 평안지구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 결성되는 등 각각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제2기의 음악 전개

제2기(1946. 1. 1~1947. 8. 15)는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7)에서 한국문제를 다룬 신탁통치안이 알려진 뒤 1946년 벽두부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기간이다. 제1기 동안 조직을 정비한 악단은 제2기 벽두부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민족현실은 제2기뿐 아니라 해방공간 전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제2기 후기는 1947년 8월 15일 직전부터 미군정에 의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뿐 아니라 민주주의민족전선 산하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음악단체가 비합법화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기이다. 국악원·조선가극동맹·대중음악가협회는 자체 조직개편으로 난국에 대응하는 데 비하여, 조선음악가동맹은 분명한 자기 세계관 때문에 움직일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제2기의 전기는 1946년 벽두부터 1946년 8월 15

29) 서울시지부는 1947년 1월 11일 국립도서관회의실에서 결성되었다. 의장에는 최창은·박영근·김재훈·최희남·이영세 등이 선출되었고, 1월 20일 35명의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창은·부위원장 정종길과 윤태섭·서기장 이범준을 결정하였다. 서기장은 1947년 2월 19일에 이건우로 교체되었다(《예술통신》, 1947년 1월 14일, 1월 23일, 2월 21일).

일까지, 제2기의 후기는 1946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5일까지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제2기의 전기에 비하여 후기는 군정과 관계 당국의 금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단계의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전재민을 위한 종합예술제’·‘3·1절 기념 종합예술제’ 그리고 문화대중화운동을 정점화시킨 ‘문화공작대’ 등을 통해 조선음악가동맹의 강령이 실천되었다.³⁰⁾

우익은 존재론적 순수 미학관으로 서양음악을 해석하는 것에 비하여, 좌익은 사적 유물론과 그 미학관을 전통과 관련지어 해석하여 해방공간의 상황에 적용·대응하고 있었다. 동시에 후자가 도식화된 계급 미학론을 나름대로 자기 비판하면서, 민중·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음악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통’을 재해석한 결과였다. 이들의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음악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실천적 덕목인 인식과 윤리 그리고 미적 표현성을 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박용구의 비평에서 방향이 잡혀진다. 이 비평이 가능했던 것은 김순남·이건우에 의한 작품이 앞서 갔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조선음악가동맹의 출현으로 분명한 성격의 통일적 활동이 펼쳐지자, 우익적 성격의 연주자들이 대한연주가협회를 결성한(1946. 3) 데 이어, 8월에는 전 악단을 망라하는 전국음악문화협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전국음악문화협회가 여전히 현제명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음악 협의체가 1947년 1월 10일 전국음악단체협의체로 발전·결성되었다. 그동안 조선음악가협회는 1947년의 ‘우리 작품 발표회’(6. 29~30) 이후 전국음악문화협회나 전국음악단체협의체에 흡수·해체되었다.

이 기간은 동시에 제1기와 달리 각종 음악단체가 장르별로 백화 난민하게 창립, 음악활동을 펼친 것도 한 특징이다. 제2기 전기 기간 동안 서울음악단·조선가극동맹·경성음악학교(교장에 현제명, 교무과장에 김성태, 이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편입됨)·한국오라토리오협회(박태준)·민족음악문화연구회(나운영)·서울관현악단·조선가극협의회·서울교향악협회 등과 국악분야도 국악원 산하의 국극협회(이후 국극협단으로 발전)·조선창극단·김연수창극단·시조연구회(李秉岐) 그리고 지방에서 경남음악협회·하동문화협회·경북예술

30) 《예술통신》, 1946년 12월 17·19·20·24·26·27일.

가협회 등이 창립되었다.

이 기간 주요 음악회는 1946년 2월의 조용자 무용발표회(11일)와 정인방 무용발표회(11일)·조선음악가협회 신춘문화대연주회(14일)·3월의 3·1절여 학교연합음악회(1일)·3.1절기념야외음악회(조선음악가협회, 1일)·봉선화동요회 3·1기념의 밤(1일)·고려교향악단 제3회 정기공연(16일)·서북동포위안음악의 밤(18~19일)·기미운동기념음악회(23일)·진수방무용발표회(23일)·고려교향악단 제4회 정기공연(30~31일), 4월에 국악원의 국극사 창립피로대공연(춘향전, 1~7일)·김창섭독창회(7일)·이화여자대학음악회(7일)·조선음악가협회 춘계음악회(8일)·한중친선음악회(9일)·고려교향악단 제5회공연(13~14일)·전국농악대회 지방예선행대회(20일)·춘계음악회(21일), 5월의 해방가요의 밤(4일)·전국농악대회(10일)·박은용독창회(11일)·경북중학교 음악연극회(11일)·오창진 독창회(19일)·서울여상 음악무용회(23일)·오페라협회 제1회 발표회(25일), 6월의 대학교향악연주회(2일)·해방가요의 밤(10일)·미군정청 문교부 기획과의 제1회 경성 시내 남녀중등학교 음악회의 저녁(18~19일)·이화고녀 합창회(24일)·경성음악학교 제1회 발표회(24일)·여자중학교전문학교 졸업기념음악회(27일)·하계음악강습회(24일), 음협의 우리작품발표음악회(29~30일), 8월의 해방기념국악전(15일)·야외음악대회(17일) 등이 개최되었다.³¹⁾

제2기 후기에는 시립취주악단·음악가의 집·전국취주악연맹·전국음악교육자협회·대중음악협회(김해송)·시온성합창단(李東日)·성중합창단(郭尙洙) 등과 지방의 金永泰성악연구회(대전) 등이 창립되었다. 이외에도 경성3중주단·울포이스4중주단·서울합창단·연악원 및 각 학교 음악부 등이 활동하였다. 주요 음악회는 9월의 가톨릭음악회(21일), 10월의 전국민속무용대회(4일)·국민학교연합음악회(7일)·육인찬독창회(10일)·전국교육음악회(12일)·김혜경독창회(19일)·남조선음악콩쿨대회(20일)·어린이음악회(27일), 11월의 홍지유제금독주회(9일)·정인방무용발표회(10일)·전국취주악콩쿨대회(23일), 12월의 이경관독창회(13일)·조선교회음악협회 제3회정기공연회(14일)·이두범독창회(15일)·음악동맹과 문학동맹의 음악과 시의 밤(16일)·미군정청 문교부 주최 전국제1

31) 《예술통신》, 1947년 1월 1일.

회음악경연대회(20일)·자유신문사의 제1회 음악제(고려교향악단과 서울교향악단 출연, 21~23일)·악극단 라미라의 〈공주와 산적〉·〈금강산이야기〉 공연(22일)·고려교향악단 제10회 연주회(29~30일)·고려교향악단 미군위안연주회(29일)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1947년 1월에는 연악원과 경향신문사의 연악원 제1회 연구원발표(6~7일)·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의 제1회 종합예술제(8~9일, 15~19일)·이건우 작품발표회(12일)·박용구 가창지도회(21일)·고려교향악단 제11회 정기연주회(28~29일)·명창대연주회(전주, 30~31일), 2월의 서울관현악단 민중음악의 밤(1~3일)·전국음악문화협회 국제친선음악회(14~15일)·국악원 제1회 창극제전(춘향전 10~12일, 흥부전 13~17일), 3월에 음악동맹과 국악원의 3·1기념 합동연주회(1일)·음악동맹 외 3.1기념음악무용대회(4~9일)·고려교향악단 제13회 정기공연(25일), 4월에 테너 윤두선 도미송별음악회(5일)·홍지유바이올린독주회(22일)·고려교향악단 제14회 공연(26~27일), 5월에 김상두 독창회(3일)·경주예술학원 창립1주년기념음악회(경주, 5일)·정훈모 제7회 독창회(7일)·전국중등학교 음악제(10일)·고려교향악단 제15회 정기공연(17~18일)·국악원과 미군정청 문교부 예술과 공동주최 제2회 전국농악경연대회(23~27일), 6월에 국악원 제2회 창악대전(대심청전, 7일)·전국취주악연맹 제2회 전국 취주악대회(7~8일)·신용대 독창회(20일)·계정식 바이올린독주회(25일)·정화영피아노독주회(28일), 고려교향악단 제16회 정기공연(29~30일), 7월에 문화공작대 부산·대구·대전·경남·강원·충남·충북·경북 지방공연(5일~8월 1일)·음악동맹 서울시지부의 근로자음악경연대회(예선 25~28일, 본선 8월 5일) 등의 음악회가 개최되었다.³²⁾

한편 제2기 후기 기간에 채동선을 중심으로 고려음악협회(1947. 2)가 결성된다. 고려음악협회 회원 전체의 통일된 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채동선은 좌파의 비조선적 내용을 비판하고 또한 극우 경향을 띤 순수음악 지상주의자들의 비순수성도 파헤치면서 ‘민족자결정신’에 입각한 민족적 양심과 강렬한 조국애를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해석 집단을 형성시켰다.

32) 《예술통신》, 1947년 1월 1일.

가. 제2기의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은 ‘8월 테제’를 발전시킨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에 입각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당의 전위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과 그 외곽단체로서 25개 단체가 모인 조선문화단체총연맹에 참여하여 집단역량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조선음악가동맹은 현 단계에 건설되어야 할 과제가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아닌 민족음악문화의 건설로 간주하여 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적 유물의 청산을 기하는 음악운동, 인민 속에서 그리고 인민을 통한 민족음악 건설의 목표, 혁명적 로맨티시즘과 진보적 리얼리즘이 바탕이 된 민족음악, 전통음악의 장점을 계승하고 외국의 진보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민족음악 문화를 창출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조선문화단체총연맹과 공동 문화전선을 펼쳤다. 특히 이의 실천을 위하여 국악원과의 제휴는 물론 아악부에서 전통 국악기를 연구했다.³³⁾ 나아가 민족 음악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확대하고, 민중·민족을 위한 민족주의 음악 창출과 소통 및 비평작업을 구도화시켜 실천했다.³⁴⁾ 제2기 후기 기간에는 음악의 사회로의 환원을 시도한 각종 음악 예술제 개최, 순수 실내악 운동, 문화 공작대를 통한 음악의 대중화 운동 등을 펼쳤다.

조선음악가동맹의 전 기간에 걸친 민족주의 음악 건설은 먼저 ‘노래운동’의 확대로 전개되었다. 노래가 민족의 동질성뿐 아니라 민족다움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는 애국가 혁신운동의 하나였다.³⁵⁾ 또, 〈애맹의 노래〉(임화), 〈서반야혁명 국제의용군의 노래〉(임화 역), 〈남조선 형제여 잊지 말아라〉, 〈인민 항쟁가〉, 〈반전가〉(이건우), 〈민전 행진곡〉(임화·김관균·吳章煥·金起林 합작)과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기간 동안 만들어진 〈해방의 노래〉·〈건국 행진곡〉·〈농민가〉 등을 각종 대

33) 박영근, 〈음악개관〉(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1946), 376쪽.

34) 이 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은, 앞의 글(1989a), 59쪽 이후를 참고할 것.

35) 박영근, 〈음악개〉(《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문화사, 1947), 33~34쪽.

——, 〈음악개관〉(같은 책), 375쪽.

박용구, 〈해방후의 음악개 3년〉(《민성》 4-7·8호, 고려 문화사, 1948), 48쪽.

——, 〈애국가 혁신론〉(《중앙신문》, 1946년 2월).

박은용, 〈애국가고〉(《동아일보》, 1948년 10월 6일~8일).

회나 집회(전국문학자대회, 전국인민위원회대표대회 등) 그리고 여러 공장·농촌·거리 등지에서 소통시켰다. 이 노래들은 1946년 5월 4일~5일에 ‘해방가요 신작 발표회’를 통하여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해방 이후 1946년 10월까지 창작된 김순남의 50곡과 이진우의 25곡과 함께 많은 노래가 불려졌다.³⁶⁾ 특히, 김순남의 〈남조선 형제여 잊지 말아라〉와 〈인민항쟁가〉가 제2기 후기 동안 전국적으로 불려졌다. 조선음악가동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음악의 장점을 계승하고 창작의 미학적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원과 제휴하는 한편 아악부에서 고전악기를 연구하기도 하였다.³⁷⁾

제2기 후기(1946. 8. 15~1947. 8. 15)에 이르러 조선음악가동맹은 이론과 실천 역량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실천했다. 첫째는 예술의 밤이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전제 동포를 구제하기 위한 음악회와 근로자를 위한 예술제라는 점에서 ‘누구를 위하여 음악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구체화시켰다. 두 번째는 조선음악가동맹의 일부 음악인이 ‘음악가의 집’에 참가하여 순수 실내악 음악활동을 펼쳤다. ‘음악가의 집’은 김순남·김원복·문학준·朴敏鍾 등 13명의 일본 학습 세대로 조직되어 있었다. 제1회 실내악 연주회(1946. 9. 26 배제중학교 강당), 11월의 제2회 공연을 끝으로 활동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순수 실내악 운동은 1947년 1월의 〈연악회〉의 발표회와 정부수립 이후 조직된 ‘문화의 집’에서 부활하여 실내악 운동으로 발전하였다.³⁸⁾ 세 번째로 조선음악가동맹은 조선문화단체총연맹과

36) 《1947 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6. 12), 302쪽.

37) 박영근, 〈음악개관〉(앞의 책), 376쪽. 한편 조선음악가동맹은 국악원 주최의 전국농악경연대회 제1회(1946. 5. 10)~제3회까지의 농악채보에 관한 좌담회(1946. 5. 20) 등을 ‘민족음악 수립에의 결정적인 행사’로 주목하여 평가하였다(박영근, 〈음악개〉, 앞의 책, 35쪽).

38) 1948년의 경우 ‘문화의 집’은 음악애호구락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문화의 집은 서대문과 청정로의 자연장, 그리고 종로 2가 과교다공원 앞 백조음악감상실 등에 있었다. 제1회는 실내악의 밤(10월 24일부터 3일간 서대문 문화의 집)을 개최하고 바이올린의 文學俊·崔泳祐, 비올라의 李在玉, 첼로의 金俊德 등이 출연 연주하였다. 문화의 집 제4회의 주명곡의 밤(12월 11~12일)에서는 바이올린 全熙奉과 피아노 李慶熙가 출연하였으며, 제7회는 신정실내악의 밤을 1949년 1월 2일부터 2일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클라리넷 洪光銀과 文學俊 4중주단)와 베토벤의 현악4중주 작품 18번의 1을 文學俊 4중주단이 공연

함께 ‘문화공작대’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1947년 7월 한 달간 강장일·한평숙 등 조선음악가동맹 소속원들이 문화공작대로서 경남·강원도·충남북·경북·부산 등으로 파견되어 대부분 테러 속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조선음악가동맹은 뚜렷한 역사관과 미학관에 의한 비평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순남과 박은용이 이를 대표한다. 30대 초반의 정종길·신막·박영근도 이 분야에 큰 몫을 했다. 또한 전천후 평론가 박용구가 해방 공간 전 시기에 비평활동을 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 비평활동을 한 金管은 해방공간에서 붓을 꺾었다가 1948년에 삶을 마감하였다. 이들과 달리 우파중도를 주도한 40대 채동선은 1947년 이후의 해방 공간 제3기와 분리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음악 창출에 공헌을 한 비평가였다.³⁹⁾

나. 대한연주가협회·전국음악문화협회·서울관현악단·고려음악협회

우익측 인사들은 민주주의적 민족국가 이념 위에 통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취지를 세우고, 단체를 결성할 준비위원을 정하였다. 그리고 전 문화예술인들을 규합하여 1946년 3월 13일에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전조선문필가협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 43명 중 음악인은 채동선과 박경호였고, 추천 음악인들은 계정식·김성태·김세형·김원복·金永義·김재훈·박경호·박영근·박용구·박태준·안기영·안병소·李升學·이영세·李惠求·임동혁·

하였으며, 베토벤 122주기 기념연주회를 서대문 문화의 집에서 공연하였다 (《경향신문》, 1948년 10월 22일, 11월 18일, 12월 7일, 12월 10일, 12월 31일, 1949년 3월 25일, 4월 19일).

- 39) 김순남은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이 근로대중 음악만을 계급이론화하고 정치에 가담함으로써 ‘음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입지가 ‘국한’되었다고 비판하고, 동시에 ‘반성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를 역전전하는 우익의 음악인 역시 ‘매우 깊이 반성’하여야 함을 촉구하기도 한다. 박영근은 제2기 기간 동안 대표적인 10여 편의 글에서 해방 전후의 악단상황과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과 조선음악가동맹의 연원, 애국가 혁신운동, 음악에서 일제 잔재와 봉건적 잔재 청산의 문제, 음악의 대중화 운동, 민족음악 수립, 연주와 교향악단, 그리고 창작 분야의 문제점 등 전 분야의 음악운동을 민중·민족주의 시각에서 역사적·미적으로 접근하여 체계화시키는 공헌 하였다(박영근, 〈악단의 제문제=민족음악 건설을 중심으로〉, 앞의 신문, 같은 일자). 그리고 신막의 〈인민과 음악예술〉(《인민평론》, 1946년 7월호)과 정종길의 〈교향악의 존재의의〉(《예술신문》, 1946년 9월) 등을 제외하면 이 기간동안 이들의 비평활동은 뜸했다. 박은용은 제3기에 가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다.

김형철·채동선·함화진·현제명 등으로 해방 직전에 활동한 중진들이었다.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후 1946년 4월 4일 전위대격으로 金東里 등 청년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조직되었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7개 부서 중 평론부에 임동혁이 선임되었다.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순수’를 표방하고 조선문화단체총연맹에 대응하였다.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결성 사이에 계정식(위원장)·高宗益·權元漢·김생려 등 연주가들 중심의 대한연주가협회가 1946년 3월에 조직되었다.

대한연주가협회는 결성 두 달 후 수도극장에서 ‘가극명곡과 실내악’(46. 5. 31~6. 1)을 개최하고 전 회원이 출연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대한연주가협회는 조선음악가협회가 약체화를 면치 못하자 8월에 가서 전국음악문화협회로 흡수되었다.

한편, 조선음악가협회는 1946년 6월 조선음악협의회로 발돋움을 꾀하려 하였지만, 조선음악가동맹측의 ‘우리 작품 발표회’(1946. 6. 29~30) 이후 가을부터 존폐문제가 대두되었다.⁴⁰⁾ 전 음악단체의 협의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악단 모두는 같은 해 12월에 조선음악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47년 1월 10일에 ‘조선음악협의회’를 결성시켰다.⁴¹⁾ 전국음악문화협회·전국교육자음악협회·전국취주악협회·국악원·음악가의 집·조선교회음악협회·서울음악단·조선음악동맹·성연회·서울합창단·올포이스 현악4중주단·우리콤팩트 등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된 이 협의회는 한국 최대의 악단조직으로 태어났다. 의장에 이영세, 상임협의원에 고려교향악단·전국음악문화협회·조선음악동맹 등이 선출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대한연주가협회는 1946년 8월에 기성음악 단체를 총망라하고 조직을 개편·확대하여 전국음악문화협회로 재출발하였다. 전국음악문화협회는 이승만의 도미(1946. 11. 26)를 지원하려고 조직한 ‘민족대표 외교사절 후원회’에 박태준·박태현·채동선·이종태 등이 참가, 우익진영을 대신하고 있었다.

40) 우리 작품 발표회에 김성태·김순애·나운영·박태준·현제명·김세형·이흥렬·홍난파 등의 작품을 이강렬·김원복 등이 공연했다.

41) 《예술통신》, 1947년 1월 10·13일.

그러나 이후 현제명 지지세력과 채동선 지지세력, 그리고 조선음악가맹을 지지하는 세력 등 크게 세 지류를 이루게 되어 갈등이 깊어갔다.⁴²⁾

전국음악문화협회는 1946년 9월총파업과 이어 10월항쟁 이후 노동자·농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급변하는 해방정국 앞에 대응할 수 없었던 데다, 현제명이 미군정 정책에 편승하여 이탈하자 조직이 와해되어, 1947년 1월에 결성된 조선음악협의회에 흡수되었다. 여기에서 채동선의 고려음악협회가 탄생한다.

그러나 현제명 중심의 고려교향악단은 이미 이곳을 탈퇴하여 조직된 서울관현악단의 도전을 받고 있었고, 8개월간의 미국생활 끝에 귀국(1947. 9. 3)한 직후에는 이 두 악단의 ‘땅뽕기’ 결과에 따른 대립이 치열해졌다. 1948년 1월에 서울관현악단은 롤프 자코비(Rolph Jacobi)·김생려(대표)·金俊德·林元植 등의 지휘체제로 서울교향악단으로 발전하였다. 서울관현악단이 1947년 전조선문필가협회의 ‘국제 친선 대음악회’(1947. 2. 14) 등 산발적인 연주활동을 통하여 원무곡과 세레나데 등 대중성 있는 작품을 발표(계정식과 김준덕 지휘)해 온 것에 비한다면, 1948년 2월 28일부터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 서울교향악단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인 체제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하겠다. 정기연주회 제3회(1948. 3)에서 14회(1949. 6)까지 롤프 자코비 지휘로 하이든·베토벤·베버·슈베르트·비제·차이코프스키 등 주로 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연주하는 등 교향악운동의 발판을 다졌다. 서울교향악단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때 경축공연에 출연하고, 고려교향악단의 제24회 연주(1948. 10. 23, 金仁洙 지휘)가 있는 지 한 달 후(1948. 11. 27) 시공관에서 ‘서울교향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를 서울대학교 예대 합창단과 金天愛·김혜란·이인범·김형로 등 300명의 출연으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자코비 지휘로 열자 고려교향악단은 약체화를 면할 수 없어 제26회 공연 이후 해체되었다.

한편, 고려음악협회가 채동선이 중심이 되어 1947년 2월 12일에 결성되었다. 결성되던 같은 날에 고려음악협회 등 20여 문화단체와 규합한 전국문화

42) 채동선의 미발표 글, 〈조선 악단의 운명은 어디로 가려나고〉(1947년 5월 1일).

단체총연합도 결성되었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에 가입한 음악단체는 전국음악문화협회·전국취주악연맹(1946. 1. 결성)·정악회 그리고 고려음악협회였다. 고려음악협회는 우파 중도의 성격으로 이후 독자노선을 걸어갔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의 회장에는 高義東, 부회장에 고려음악협회 회장인 채동선 그리고 朴鍾和가 선임되었다. 채동선은 전국문화단체총연합의 부회장과 ‘음악 대책위원’, 또 고려음악협회 회장으로 1947년 이후 그 역할이 커졌다. 고려음악협회는 채동선 외에도 尹龍河·박태준·박태현·이흥렬·안병소 등이 중심이 되었다.⁴³⁾

이로써 1947년 봄에는 민족좌파의 조선음악가동맹과 국악원, 민족우파에는 현제명 중심의 전국음악문화협회와 구왕궁아악부, 그리고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교향악단의 양대 관현악단, 우파 중도의 고려음악협회 등이 형성되어 활발한 음악활동이 전개되었다.

(4) 제3기의 음악전개

제3기는 미군정과 관계 당국이 좌익계열의 모든 단체들을 비합법적 단체로 규정한 1947년 8월 15일부터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일 년간의 기간이다. 이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가 실패하자 미군정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구상을 천명하고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은 이 안을 지지한다. 더욱이 미·소공위가 완전 결렬(1947. 10. 21)되어 미국이 제안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 등이 가결되고, 미군정 당국이 〈남조선 총선거법〉을 공포(1948. 3. 18)하여,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현실화되었다. 반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김구 역시 김구식과 제휴하여, 남조선 단선·단정을 반대한 북조선과 대화하기 위해 문화인 105인의 남북 대화촉구성명에 힘입어 북행을 감행하였다. 이 성명(1948. 4. 14)에는 박용

43) 고려음악협회는 조선음악가동맹의 ‘비조선적 유물론’이나 ‘악계의 대표적 無節操 사대주의자인 현제명세력’을 비판하고, ‘민족자결정신하에 정통음악 예술의 연구창작 및 연주활동을 목적함’을 강령으로 출발함으로써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 고려음악협회는 반탁을 표방함으로써 우익의 조직체와 맥을 같이하나, 제3기 기간 동안에는 미군정과 당국의 문화정책과 사대주의적 극우파를 신랄히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달랐다.

구·신막·안기영·박은용·이건우 등 5인이 참가하였다.

한편, 조선공산당은 1946년 5월 7일 미·소공위가 무기휴회로 들어가고 소련측 대표단의 철수, 정관사 사건(1946. 5)에 의한 좌익계 인사의 피검, 《해방일보》의 정간, 반탁진영의 정치공세 강화, 군정에 의한 좌우합작 추진 등으로 자신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1946년 7월부터 미군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의 9월총파업, 10월인민항쟁 이후 결성된 남로당은 민주주의민족전선과 함께 단정 반대투쟁을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였다. 미군정과 관계 당국은 제3기부터 좌익운동을 완전 비합법화로 규정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등의 인사를 검거·투옥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좌·우익으로 분열된 음악단체들도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조선음악가동맹의 민족주의 음악운동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우익계의 음악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전면으로 부각된 음악단체로는 고려음악협회·서울관현악단(서울교향악단으로 발전)·고려교향악단·전국문화단체총연합·아악부·전국취주악연맹·조선오페라협회 등이었다. 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이외에 한국오라토리오협회 합창단의 〈메시아〉 공연(박태준 지휘, 서울관현악단, 1948. 1. 1)을 비롯한 각종 연주, 서울시 시공관 개관기념 연주회(1947. 12. 30), 조선오페라협회의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인선·김자경·馬金喜, 고려교향악단 출연, 1948. 1. 16~20), 1948년 1월에 서울관현악단을 발전시켜 창립한 서울교향악단의 각종 연주회, 김순남가곡발표회(4. 23), 국악원 직속 국극사의 창립2주년 기념 〈선화공주〉 공연(4. 26), 국악연구회(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전신) 발족 겸 제1회 정례발표회(5. 3), 서울시 취주악단의 시민위안연주회(5. 8), 조선창극단의 〈왕자호동과 낙랑공주〉(5. 11~15), 서울시 주관의 음악제(5. 15~17), 5인 음악회(소프라노 정훈모·테너 김창락·바이올린 박민중·피아노 김순열·이영희 등, 5. 27), 고려교향악단 제23회 정기공연(6. 12~13), 서울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6. 23~25), 조미합동 연주회(7. 9), 마금회 도미 고별독창회(7. 17),

44) 1947년 8월 7일에 미군정청이 남로당 비합법화를 선언하고 그 관계자들을 대량으로 검거투옥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11일에 민전·문련 인사를 대량 검거하자 국악원의 합화진 등이 피검되었다. 검거투옥된 수는 13,769명이었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8월 18일 '남조선 적화계획과 군정파괴음모'를 전국에 걸쳐 분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제1회 졸업생연주회(7. 24), 서울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7. 25~26), 대한민국정부수립축하음악회(8. 19) 등이 개최되었다.

한편, 점차 입지가 좁아지던 민족좌파의 조선음악가동맹이나 국악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체포령으로 김순남은 1947년부터 은둔생활에 들어가는 한편, 그해 9월 과도정부의 문교부가 개최한 ‘전국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익 음악인들이 김순남을 비롯한 조선음악가동맹측 인사의 심사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 국악원은 합화진 위원장이 1947년 8월 피검됨에 따라 박헌봉이 위원장으로, 채동선이 연구부장 등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에도 일련의 해방가요와 가곡이 압도적으로 유행했는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서를 떨치고 민족 정서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절박한 요청의 결과였다. 특히 ‘해방공간 제3기’에 음악사적 중요한 사건은 가곡창작과 가곡집 출판에 의한 가곡의 확산이었다. 김순남의 《산유화》(1947, 5곡)와 《자장가》(1948, 8곡), 이견우의 《금잔디》(1948, 5곡)와 《산길》(1948, 6곡)이 대표적인 가곡집이다. 이미 1946년에 임동혁의 가곡집 《시조 6수》(6곡), 李齊九의 가곡집 《근화사》(1948, 12곡) 등을 비롯하여 김성태의 가곡 〈오륙도〉(1946), 김세형의 가곡 〈옥저〉(1948), 尹伊桑의 가곡 〈나그네〉와 〈달무리〉 등이 출판되었는데, 모두 민족전통을 회복한 새로운 한국가곡으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듯 이 시기의 가곡들은 민족음악 건설이라는 과제수행의 결과로서 새로운 민족음악적 특징들이 성숙해져 갔다. 동시에 이러한 특징은 가곡뿐만 아니라 기악작품에서도 확립되어 갔다. 김순남의 〈피아노 협주곡〉(1946, 미완성)·〈관현악과 성악을 위한 바라아데〉수곡(1946), 〈제1교향곡 다장조〉(1946)·교향시 〈태양없는 땅〉(1947)·소관현악과 바리톤을 위한 연가곡 〈망명〉(1947) 등과 이견우의 〈피아노 소품〉수곡(1946)·〈관현악을 위한 스케치〉(1947) 등이 그 작품들이다. 작곡가 임동혁도 ‘민족음악의 수립’이라는 글을 게재한 《음악과 문화》평론집을 1948년(동방문화사) 1월에 발행하였다.

특히 성악작품에서 조성적 어법을 극복하고 현대적 기법과 민요를 비롯한 전통의 음악언어를 동시에 음악양식과 내용으로 체계화하거나, 사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해 前시대는 물론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의 작품과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김순남의 〈산유화〉와 〈진달래 꽃〉, 이견우의 〈금잔디〉와 〈산길〉들이 그것으로 그들의 음악은 전통 음악체계를 보다 더 공유하였기 때문에 민족음악을 지향하는 전문음악인들뿐 아니라 당대의 청중에게 널리 불려질 수 있었다.

김순남의 〈산유화〉에 대하여 박용구는 “국제적 수준에서 겨누어 볼 수 있는 가곡”이라고 평가하였다.⁴⁵⁾ 이견우의 경우, 〈금잔디〉에서 민요적 음계와 리듬에서 얻은 색채감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산길〉에서는 ‘하늘가에 가는 님의 목소리 혼자 귀에만 들려오네’와 같은 시 내용들을 전통음악의 4도 진행 선율이나 ‘떠어’나 ‘떠이어’와 같은 꾸밈음으로 적용시켜 그 詩情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 김순남의 〈산유화〉, 정종길의 〈농부가〉, 이견우의 〈금잔디〉 3편은 무대에 올려지기 전에 눈뜬 민중들의 가슴에 파고들어, 다른 해방 가요처럼 민족의 가요로 이 땅에서 널리 불려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이들의 작품들은 1946년 3월의 ‘이견우 가곡발표회’와 1948년 4월 23일의 ‘김순남 가곡발표회’ 등 공식무대를 통하여 전문음악인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확산되고 있었다. 이후 성악가들의 독창회에서 이들 노래가 불려지는데, 1948년 7월 17일의 ‘마금희 도미 고별독창회’에서는 이견우의 〈금잔디〉와 김순남의 〈진달래 꽃〉이, 그리고 박은용의 ‘우리 가곡의 밤’(1948. 11. 12~13)과 ‘李環八 독창회’(1948. 12. 15)에서도 이들 작품이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러기에 채동선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비조선적 유물론’ 계열로 비판한 것은 기실, 조선음악가동맹이 치열하게 민족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의 형식을 이룬 이론을 비판한 것이지 삶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닌 것이 되며, 음악도 그 표현된 언어의 전통성 때문이지 작품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채동선의 정치적 입장이 민족정신에 바탕을 둔 음악이었음은 옳게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민족음악이론에 있어 내용, 즉 우리가 조선인인 이상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사 및 애국시를 사용하는 성악곡은 물론이려니와 기악곡도 민족음악이 된다고 믿어, 안기영과 같은 3화음 체계로 추구한 것은 그

45) 박용구, 〈조선 가곡의 위치, 김순남 가곡집 《자장가》를 중심으로〉(《신천지》3-8, 서울신문사, 1948), 181~185쪽.

46) 박용구, 〈해방가요와 시〉(《음악과 현실》, 민교사, 1949), 57~61쪽.

민족이론이 사고에 충실한 반영일 뿐이며 결코 음악 언어에 대한 반성된 성숙이 아니다. 3화음에 따른 기능화성 체계는 바로 서양민족의 언어이며, 바로 그 언어가 지난 1세기 동안 제3세계를 종속화시킨 합리화라는 힘의 언어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음악이론으로는 대응하여야 할 체계인 것이다.

채동선의 가치는 민족자결 정신에 있었다. 그는 말한다.

요컨대 민족 자결이나 다시 노예화냐, 민족적 양심과 강렬한 조국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 결정적 기본이념 없이는 단 음악뿐 아니라 모든 문화 건설을 논의할 아무 가치도 없다(채동선, <음악문화 건설에 대하여>, 《예술조선》, 선문사, 1947, 21~24쪽).

채동선의 이러한 민족혼은 오히려 한민당과 미군정에 뿌리깊게 관계한 현 제명 주도의 음악권을 비판한 것으로, 자주적 민족음악의 좌표를 설정하려고 열정적으로 불태운 혼의 드러냄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시대는 확실히 봉건과 독재를 떠나기” 위해서도 악단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국립교향악단, 국립음악학교, 국립대합창단, 국립육군 취주악단, 국립음악출판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민족음악 운운은 우선 예술로의 음악이 있는 뒷일일 것이다”라고 해방 직후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한 김성태 계열과도 채동선은 분명 달랐다.⁴⁷⁾

제3기는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9월 9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민족음악을 건설하려 했던 희망이 반쪽으로 갈라져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6. 25전쟁으로 지울 수 없는 남북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를 종식한 해방의 그날들은 훼손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민족음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모두에게 생명의 불꽃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소에 의해 냉전체제가 고착되고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됨으로 민족음악 건설 과제는 미확립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魯棟銀〉

47) 김성태, <민족 음악의 기초>(《경향신문》, 1948년 1월 1일).

4) 연극·영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 땅에는 광복의 새날이 밝았다. 온 나라가 환희로 넘쳐 났지만 사회 전체는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각종 정치·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속에 가장 빨리 간판을 내걸고 활동을 개시한 단체는 역시 문예단체였다. 즉 시인 林和가 주동이 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해방 이튿날(8월 16일) 서울 한청빌딩에서 결성되었고, 뒤이어 연극건설본부·음악건설본부·미술건설본부·영화건설본부 등이 속속 간판을 내건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각 단체는 곧 조선문학건설중앙협의회(약칭 文建)라는 연합체를 만들었고, 임화를 초대 서기장으로 삼아 조직 체계를 정비해갔다.

일제시기에 활동했던 모든 연극단체들이 자동 와해된 후 처음 조직된 연극건설본부는 극작가 宋影을 중앙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실제적인 일은 金泰鎭·李曙鄉·咸世德·朴英鎬·金承久·羅雄·安英一 등 진보적 연극인들이 했으며 柳致眞·徐恒錫·金一影·金海松·尹富吉·朴九 등 연극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본인의 허락 없이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연극건설본부가 식민지시기에 존재했던 조선연극문화협의회의 재판¹⁾이었다는 비판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단체의 주동인물이 대부분 식민지시기에 프로극을 했던 연극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극작가 유치진 같은 경우는 일제 말엽에 어용극운동을 벌인 관계로 자숙하며 관망하고 있었다. 물론 해방 직후에는 좌우가 극각 갈라진 것은 아니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극의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연극건설부의 조직으로 인해서 연극계가 조금씩 재편되어가기 시작했다. 가령 연극건설본부가 일제시기의 유산 청산을 내걸고 조직된 좌익성향의 인민극장·자유극장·청포도·一五劇場·등지·혁명극장·서울예술극장·白花·조선예술극장 등 9개 극단을 산하에 두고 소위 진보적인 연극운동을 펴 나간 것은

1) 李海浪, 〈분열과 위축의 연극계〉(《民聲》, 1949년 2월호).

그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당초 이들이 지향했던 바는 종래의 저급한 대중극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건설에 진력하는 것으로 국립극장·연극영화학교·연극연구소·잡지발간 등도 기획했었다.²⁾ 그리고 부원들은 연합군 입성 환영공연 준비와 전제민의 연금 모금을 위하여 가두에 나서기도 했으며 새로운 연극건설에 장애가 되는 저질 상업극 견제를 위하여 각본 심의실 설치와 함께 연극 용어의 제정, 연극신문의 발간 등도 서두른 바 있다. 그러나 연극건설본부는 해방의 혼돈 속에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극운동과 실천을 통해서 조직되지 못한 근본적 결함과 좌우익 연극인의 혼성으로 인한 동상이몽의 이질성 등으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결국 연극건설본부는 분열되어 유치진·徐恒錫 등은 칩거에 들어갔고 좌파 연극인들만 프로연극동맹 조직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좌파 연극인들도 프로연극동맹 조직문자와 조직무용문자, 그리고 인민연극론자 등으로 갈렸다. 조직문자들을 좌파라 했고 그 반대자들을 우파로 칭하면서 대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좌파의 주장은 하루빨리 조직체를 갖고 노동자·농민의 생활권 내에 침투하여 예술운동이 장차 남로당의 외곽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우파는 오늘의 정세가 프로연극동맹을 조직하기에는 위험한 때인 만큼 속출하고 있는 극단들을 총망라해서 협의기관만 갖고 그 안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장은 연극인들을 포섭하려면 중간단계로서 인민연극동맹으로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프로연극동맹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결국 좌파가 승리하여 9월 27일에 프로연극동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연출가 羅雄을 위원장으로 한 프로연극동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연극의 건설과 그 완성을 기한다. 둘째, 일제의 반연극과 싸운다. 셋째, 연극활동이 노동자·농민의 생활력과 투쟁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한다는 것이었다.³⁾ 이들은 혁명극장 등 여러 극단을 산하로 끌어들이며 세를 확장하는 한편 남로당의 하수기관인 문화단체연맹의 산하로 들어갔다. 이들의 행동강령은 ① 일본제국주의 잔재 소탕, ② 봉건주의 잔재 소탕,

2) 《매일신보》, 1948년 9월 19일.

3) 1기자, 〈프로예술진영의 재건〉(《건설》제1권 제1호, 1947).

③ 국수주의 배격 등 정치색이 짙은 것이었다. 그만큼 정치선전극운동을 떠나간다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주요 행동이 다름 아닌 찬탁운동이었다. 당초 연극인들은 1946년 1월 2일에 전국연극인대회(위원장 宋錫夏)를 열어 신탁통치 철폐운동을 벌였었는데 이튿날 돌연 남로당이 찬탁으로 돌아서면서 프로연극동맹도 찬탁으로 돌변, 우익 민족진영 연극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혁명극장 등 좌파단체들은 마르크스·레닌의 정치혁명극을 공연하면서 극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공연 후에는 관객을 이끌고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이러한 좌파연극이 해방 직후 연극계를 주도함으로써 우익 민족진영 연극을 압도해갔다.

물론 우익진영의 연극인이나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이 정치세력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들이 연극공연을 하려고 해도 극장노동자들이 거의 다 좌익이었기 때문에 조직적 방해로 인해서 막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좌익극단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공연활동을 떠나갔다. 이들은 첫 번째 행사로서 1946년 3월에 제1회 3·1기념 연극공연대회를 개최했던 바 혁명극장 등 5개 단체가 朴英鎬 작 〈님〉, 趙靈出 작 〈독립군〉, 李雲芳 작 〈나라와 백성〉, 金南天 작 〈3·1운동〉, 朴露兒 작 〈3·1운동〉 등을 무대에 올렸다. 그런데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 즉 독립투쟁을 題材로 한 것이었다. 이들 좌익연극운동도 대체로 3단계를 거쳤다고 보는 견해(李載玄)가 있는데,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7개월간이 제1기로서 민족극운동의 태동 발아기였다고 한다면, 1947년 8월까지의 1년 반 동안은 제2기로서 성장기였고, 1948년 8월까지의 1년 동안이 제3기로서 침체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1947년 말부터는 공연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947년 정월에 張澤相 경찰총감이 “예술을 빙자한 정치선전금지 조치”⁴⁾라는 것을 포고하여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는 좌익연극인들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

4) 《경향신문》, 1947년 2월 3일.

이었다. 이에 좌파연극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나섰다. 그러자 당국은 3월 들어서 극렬 좌파연극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함세덕 작 <태백산맥>, 조영출 작 <위대한 사랑> 등을 갖고 예술극장 등 6개 단체가 합동공연을 가져서 1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남로당 계열의 사주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작품들은 점차 대중을 잃어갔다. 대부분의 작품이 독립투쟁에서 벗어나 점차 유물변증법적 창작방식을 따른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좌파 연극인들이 두 세 번에 걸쳐 월북한 바 있었고, 그로부터 좌익연극이 급속히 퇴락해 갈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프로연극동맹 산하에 있으면서도 좌파색채가 엿었던 자유극장만이 꾸준히 공연활동을 벌였을 뿐 대부분의 좌익극단들은 1947년 하반기에는 거의 소멸한 상태였다. 물론 자유극장 역시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전에 해체되었다.

이상과 같이 1945년 9월 27일에 결성된 좌익연극인들의 모임체인 프로연극동맹은 1947년 8월까지 만 2년여 동안 혁명극장·해방극장 등 10여 개의 좌파극단들을 앞세우고 때때로 남로당의 사주도 받아가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한 정치목적극은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군정당국의 탄압까지 자초함으로써 결국 몰락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좌파연극에 반대하는 우익진영 연극인들은 소극적으로 기회를 보고 있다가 1947년부터 본격적인 연극운동을 펴 나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극단 청춘극장이라든가 소극장운동을 모색한 극단전선 등이 있었지만 활동은 미미했다. 다만 당시 양대 상업극단이라 할 청춘극장(金春光 주도)과 황금좌(成光顯 주도)가 활발한 공연활동을 벌였을 뿐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우익 민족진영 연극운동은 역시 1947년 초부터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47년 1월 말에 李海浪·金東園·李化三 등이 조선연극문화사라는 조직체를 출범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들은 유치진과 咸大勳을 고문으로, 자금을 댄 申鳳均을 회장, 李永健을 사장으로 해서 한국연예문화사로 이름을 바꿔 산하에 무용단과 극단 예술원을 두고 연극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 첫 번째 활동은 프로연극동맹 주최의 제2회 3·1연극제에 유치진 작 〈조국〉을 갖고 참가한 것이었다. 이 작품이 바로 극예술협회(약칭 劇協)창립 공연으로 기록된다. “극예술연구회의 신극정신을 계승하고 좌익연극과 대항하여 민족극 수립을 표방, 동인제로 조직”된 극예술협회의 창립멤버는 이혜량·김동원·이화삼·朴商翊·金鮮英 등 5명이었고, 본격 리얼리즘극 창조가 기본 목표였다.

극협은 연기진으로 金滢植·趙百領·金英雲·趙美領·金福子·姜貞愛·韓聖女 등을 확보하고 제2회 공연으로 유치진 작 〈自鳴鼓〉를 무대에 올려서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가 있었다. 극협은 1947년 한 해에만 앞의 두 작품 외에 〈麻衣太子〉와 〈銀河水〉 등 4작품을 공연했는데 이들 역시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풍자하는 목적성의 주제를 골격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익 민족진영 연극인들도 좌파 연극인들처럼 단합을 꾀해서 1947년 10월 29일에 전국연극예술협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나선 점이다. 민족진영 연극인들이 조직한 전국연극예술협회는 ① 민주주의 원칙과 창조적 자유를 확보한다, ② 일체의 사대사상을 배격한다, ③ 순수 연극 문화를 수립한다, ④ 상업주의연극을 지양한다 등을 지향 목표로 내걸었다. 중견 극작가 유치진을 이사장으로 한 전국연극예술협회는 프로연극동맹에 대항하는 민족진영 연극인들의 결집체였으며 곧 한국무대예술원으로 개칭되어 극협을 비롯한 12개 극단을 산하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연극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저항해갔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48년 4월에는 산하 극단들로 총선거선전문화계몽대라는 것을 조직하고 전국에 파견하여, 5·10총선을 위한 연극 브나로드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유세반을 따라다니면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선거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계몽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에는 외국의 한국정부 승인을 계기로 하여 전국무대예술인 쉼기대회를 열고 민족정신 양양과 침체된 무대예술 진흥을 꾀하기도 했다.

이때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입장세 철폐, 둘째 외국영화의 무분별한 수입 문제, 셋째 문화행정과 공연수속 일원화, 넷째 무대예술의 질적

향상책, 다섯째 공연 資材획득에 관한 건, 여섯째 국립극장 조기 개설에 관한 건 등이었다.⁵⁾

이러한 연극인들의 요구사항이 정부로부터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물론 국립극장 문제 등은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극단활동은 어려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대로 활기를 찾은 것은 저급한 상업극 단체들이라 할 수 있는 청춘극장과 황금좌, 그리고 KPK 등 십수 개의 악극단들뿐이었다.

정통 리얼리즘을 목표로 하는 극협 등 신극단체들의 침체는 그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령 극협만 하더라도 유치진의 시대극 일변도가 아니면 일제시기에 극예술연구회가 공연했던 번역극과 대중성 짙은 작품을 주로 무대에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특히 진지한 리얼리즘극을 회피한 것이 관중의 빈축을 산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극 단체들이 본격 리얼리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데는 프롤레타리아극 단체들의 어설픈 사회주의 리얼리즘 흉내에 대한 반발에 있었다. 이러한 리얼리즘 회피 행위는 우리나라 근대극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현대극의 발전을 더디게 하기도 했다.

정통 신극단체들이 방황하는 동안 상업극단들은 저급한 작품들로 대중을 현혹했다. 동양극장의 레퍼토리나 劇術만도 못한 저질 작품들이 판을 쳤고 십수 개의 악극단들은 저질 공연을 더욱 부채질했다. 극단에 악단을 두고 가무로써 대중의 눈속임을 한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상업극단들은 대중의 정서 순화와는 정반대로 나아갔고 혼란한 사회를 외면케 하는 저질 오락물로써 대중의 호주머니만을 노렸던 것이다.

한편 동양극장시기에 어느 정도 정립된 唱劇분야는 1940년대 초에 여러 단체들이 전국을 다니며 공연활동을 벌이다가 일제 말엽에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상당수 단원들이 징용과 정신대 등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총독부의 통제가 역시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자마자 국악인들도 1945년 8월 19일 서울에 모두 모여

5) 《조선일보》, 1949년 1월 29일.

국악건설본부를 발족시킨 것이다. 국악건설본부는 10월 들어서 대한국악원을 창립시켰는데 초대원장은 咸和鎮이었다. 대한국악원에는 정악·속악 구별 없이 국악인 전체가 모였으므로 창극인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악인들 상당수가 창극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서울에서 국악원이 창립되었다는 소식이 광주에 전해지면서 이들도 光州聲樂研究會를 출범시켜서 1945년 10월 15일에 창극 〈대흥보전〉(朴晁 각색)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서 창극이 조금씩 활기를 찾게 되는 1946년에는 국악원 직속단체인 國劇社를 비롯하여 국극협회, 조선창극단, 金演洙창극단 등이 새로 조직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들 4개 창극단은 6월 초에 합동으로 국도극장에서 〈대춘향전〉을 공연함으로써 해방 이후 창극활동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창극단들의 활동도 의욕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명창들은 우왕좌왕했고 국극협회같은 경우는 곧바로 해산됨으로써 젊은 단원이었던 朴厚星이 명창들을 이끌고 다시 광주로 내려가 國劇協團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에 있던 조선창극단은 일제시기 때 활동하던 멤버들이 이탈하고 새 멤버들이 가담하여 창작 창극 〈논개〉·〈왕자호동〉 등을 공연했고 김연수창극단은 〈장화홍련전〉 등을 무대에 올려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환희만큼 공연활동은 추진력이 없었다.

그 결과 열성적인 여성 명창들이 각 창극단으로부터 이탈하여 1948년에 별도의 창극단체를 출범시켰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여성국악동호회였다. 명창 朴綠珠를 이사장으로 하여 金素姬·朴貴姬·林春鶯·鄭柳色·林柳鶯·金敬愛 등 중견 명창들과 신진 명창 등 30여 명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곧바로 창립공연에 들어가서 10월에 시공관에서 〈옥중화〉를 4일 동안 공연했으나 크게 실패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제작 경험이 없었던 데다가 재정 역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류명창들의 여성국극의 탄생은 일본의 타라카즈카(寶塚)와 중국의 越劇과 함께 동아시아 3국의 독특한 여성극이 존재케 된 것이다.

창립공연에서 낭패를 본 여성국악동호회는 재기를 위해서 이듬해(1949년)

2월 구정을 기해서 두 번째 공연으로 <햇님달님>(金亞夫 각색)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두기에 이르렀다. 왕자와 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을 배경으로 애련한 아장의 가락에 맞춰진 무대는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따라서 극장은 연일 대만원이었고 온 장안이 여성국극으로 화제가 될 정도였다. 실제로 <햇님달님>은 창극사상 최고의 히트작이 될 정도로 특히 부녀층 관객을 동원했다. 이 작품이 크게 히트하자 지방도시에서 흥행사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초청해갔다. 여성국악동호회의 추천하는 인기는 창극계의 기존 판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대단했다. 특히 여성국악동호회원들의 세련된 무용 솜씨까지 무대에 나타남으로써 일반 창극은 경쟁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성국극은 단 1년여 만에 전국을 뒤흔들 어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기부상은 여성국악동호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즉 2년여 만에 분열되어 몇 개 여성국극단으로 다시 탄생된 것이다. 가령 여성국악동호회 햇님국극단이라든가, 몇몇 단체가 생길 즈음에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4월에 한국연극사상 처음으로 국립극장이 문을 연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극작가 유치진을 초대 극장장으로 삼아 개관된 국립극장은 총독부가 지은 부민관을 모체로 삼았고 극협을 중심으로 新協이라는 전속극단을 두기에 이르렀다. 극작가 이광래를 간사장으로 한 실험의 핵심멤버는 역시 이해랑·김동원·박상익·이화삼·김선영 등이었고 거기에 신인급 몇 명을 더 가담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국립극장이 개관 프로그램으로 유치진 작 <元述郎>을 무대에 올리자 연일 관객이 초만원을 이루었고 제2회 공연 <雷雨>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극장의 개관기념공연 두 작품은 근대연극의 전기를 마련할 만큼 공전의 히트를 했고 일제의 탄압과 해방 직후의 혼란을 말끔히 씻어내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해방과 함께 영화계도 소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영화인들의 움직임은 역시 1945년 8월 18일 결성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이하 文建)에 한 발을 디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예술 각 장르의 건

설본부가 생겨났는데 영화부문은 문건창립 하루 뒤에 李載明을 책임자로 해서 어설피나마 발족이 되었다. 그러나 영화건설분부는 특별한 활동 없이 한 달여를 지내다가 9월 24일 조선영화인총궐기대회를 치르면서 중진 문화인 尹白南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⁶⁾

이때의 주요 참여자들을 보면 대체로 영화감독·시나리오작가·촬영기사·녹음기사·제작자 등 상당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곧 영화분야 역시 다른 분야처럼 좌우익으로 조금씩 갈리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즉 그해 11월 초에 저명한 소설가 李箕永·韓雪野 등이 나서서 무산자의 계급적 해방을 목표로 하여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이하 프로영맹)을 조직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영맹은 영화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주동자들이 영화인이 아닌 소설가들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프로영맹은 곧바로 조선영화동맹(12월 16일)이 결성되면서 자동적으로 유아무야 되었다.

조선영화동맹에는 전 영화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국영화계의 결집체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安鍾和(위원장)·安夕影(부위원장) 등 영화계 인사들 대부분이 참여, 지방 조직까지 갖춘 바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서 영화대중화를 부르짖으면서 농어촌 순회상영의 영화반을 운영하는 한편 영화강좌도 개설했다. 그러나 그 활동은 미미했다. 다시 말해 영화제작 상영 등은 활발치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영화분야도 해방 직후 정치분위기에 휘말려서 다른 예술분야처럼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수준이었다. 당시 문화예술계에서 공통적으로 내건 구호는 ① 일제잔재 청산, ② 봉건주의 잔재 청산, ③ 국수주의 배격, ④ 진보적 민족영화의 건설, ⑤ 조선영화의 국제적 영화와의 제휴 등이었다.

해방 직후의 영화계는 적어도 미군정청의 〈활동사진취제령〉이 공포(1946년 4월 12일)되기 전까지 실제적 활동은 미약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일제 때 만든 법령이 유효처럼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미군정청이 1946년 10월 8일에 영화상영 허가를 골자로 하는 군정청 법령 제115호를 공포함

6) 김종원·정중헌, 《우리 영화 100년》(현암사, 2001), 220쪽.

으로써 전 시대의 법적 잔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金華가 그의 저서 《이야기 한국영화사》에서 8·15해방의 영화사적 의미가 “전쟁 수행을 위한 일제 군국주의적 선전매체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오락을 표현하는 대중문화로서의 원래 기능을 되찾은 것”⁷⁾이라고 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사실 식민지시기의 영화 현실은 참담했었다. 영화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예술로서 대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재정치하에서는 통제를 많이 받게 되고 예술과는 정반대로 선전매체로써 악용되기 일쑤이다. 일제시기야말로 우리 영화가 가장 굴절당한 경우였다. 따라서 영화인 일부는 체제에 영합했고 다른 일부는 영화계를 떠나 은둔했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모두 나와서 한국영화 발전을 도모케 된 것이다. 그러나 영화기자재 부족이라든가 일인 소유였던 영화관 문제 같은 것이 앞에 가로 놓여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져 상영되고 미국영화가 여러 편 들어와 상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극영화가 해방 직후에는 마치 연극이나 문학 등과 마찬가지로 〈安重根史記〉(李龜永 감독)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일독립투쟁을 묘사한 것이 주류였고 민주주의를 계몽하는 내용 그리고 밀수근절 등도 다 뒀으며 애정물도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8·15해방이란 것이 식민지시기에 대중선동과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영화를 제 자리로 돌려놓고 그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도 된다.⁸⁾ 따라서 해방 직후의 영화가 저항적인 주제를 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다른 아닌 崔寅奎 감독의 〈자유만세〉(全昌根 주연)라 말할 수 있다. 최인규 감독이 〈자유만세〉로써 목적 영화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래 〈죄없는 죄인〉·〈독립전야〉라는 연속 3부작으로 해방 직후의 영화관도를 크게 그려놓기도 했다. 물론 최인규 감독 외에도 주목을 끝마친 독립투쟁기는 여러 편이 나왔다. 가령 尹逢春 감독의 〈윤봉길의사〉 및 〈3·1혁명기〉라든가 全昌根 감독의 〈해방된 내 고향〉 등도 그런 계열 영화들이었다.

7) 김화, 《이야기 한국영화사》(하서출판사, 2001), 163쪽.

8) 김종원·정중헌, 앞의 책, 223쪽.

시간이 흐르면서 멜로물도 적잖게 나왔는데 신파극본 〈검사와 여선생〉(尹大龍 감독)을 비롯해서 〈그 얼굴〉·〈여인〉 등을 만든 전창근도 멜로물의 대가였다. 해방 직후에는 배우를 비롯한 신진 영화인들도 대거 등장했다. 趙美領·崔銀姬·黃貞順·朱曾女·崔芝愛 등 여류 신인들과 尹一逢·朱善泰·黃海·金雄 등 남성 배우들도 적지 않게 데뷔했다.

그러나 역시 해방 직후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영화가 범람할 정도로 서양영화 일변도였다. 미군정 치하였기 때문에 미국영화를 주로 한 외국영화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영화계를 석권하다시피 한 것이다. 한국 영화계가 미국영화 중심의 외국영화관이 된 데는 미군정의 문화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우리 영화계의 기반 취약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자재의 부실은 말할 것도 없고 취약한 자본과 함께 인재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다. 일제시기에 羅雲奎와 같은 인재가 있었지만 그마저 요절했고 변변한 영화학교 하나 없었던 처지에서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영화가 시작되어 성장하기도 전에 모든 영화관은 일본인 자본가들이 장악해서 착취했고 총독부는 탄압법을 만들어서 검열 등으로 우리 영화인들을 옥죄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영화에 재능있는 인재들이 나와서 우리 영화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었다. 따라서 1945년 해방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고, 영화인들은 의욕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때에 또 미군정이 실시됨으로써 또다시 미국영화가 우리 영화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의 하나로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영화는 6·25전쟁을 겪고 나서야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柳敏榮〉